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72-10

2020 경제백서

기획재정부

발간사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가파른 구조전환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피해극복과 경기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 정책 등도 촘촘히 추진한 결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며 성장, 고용, 분배 등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적 관리를 이끌어냈습니다. 4차례 추경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역성장(△0.9%) 폭을 최소화하여 성장률은 G20 선진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20.3 등) 등을 통해 고용 감소를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20.2 등) 등으로 5분위 배율·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개선도 이뤄냈습니다. 성장과 포용,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며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혁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본격 추진한 것도 값진 성과입니다. 창업기업이 12만개 이상 증가하고 벤처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벤처·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세계 최초 수소차 보급 1만대 돌파 등 신산업 육성 노력의 결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20.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 등을 통해 포용기반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규모 순위가 종전 12위에서 10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Top10 국가'에 진입하였으며,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IMD) 순위도 5단계 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경제 위상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저탄소화, 인구 감소 등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 등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요구도 한층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위기극복을 넘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활력 복원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 확산, 포용성 강화,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위한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962년 이후 60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경제백서가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목차

제1장 2020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 15

제2장 2020년 거시경제 개관 ····· 21

제1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발생 및 전개과정 ····· 23

1. 국내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 23
2.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파급영향 ····· 27

제2절 세계 경제 동향 ····· 38

1. 개관 ····· 38
2. 선진국 경제 동향 ····· 40
3. 신흥국 경제 동향 ····· 44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46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48

제3절 국내 경제 동향 ····· 52

1. 개관 ····· 52
2. 경제성장 ····· 54
3. 소비·투자 ····· 58
4. 수출입·경상수지 ····· 61
5. 고용 ····· 69
6. 물가 ····· 71
7. 재정 ····· 73
8. 금융시장 ····· 74
9. 외환시장 ····· 80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82

제3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89
제1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 91
1. 방역대응체계 가동 ····· 91
2. 마스크 수급불안 대응 ····· 95
제2절 비상경제체계 구축 및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 97
1. 비상경제체계 회의체 운영 ····· 97
2. 추경예산 편성 및 재정 조기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 ····· 100
3. 위기극복을 위한 통화정책 ····· 107
제3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 111
1.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기업 자금 지원 ····· 111
2. 금융시장 안정 유지 ····· 115
제4절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보강 ····· 117
1. 내수 회복지원 ····· 117
2. 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 ····· 119
3.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기반 마련 ····· 122
4. 고용충격 최소화 ····· 125
제5절 전반위적 리스크 관리 ····· 128
1. 부동산 안정화 노력 ····· 128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133
제4장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137
제1절 디지털 뉴딜 ····· 139
제2절 그린뉴딜 ····· 141
제3절 안전망 강화 ····· 143
제4절 지역균형 뉴딜 ····· 145

제5장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 147
제1절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 149
제2절 산업 고도화 ····· 153
1.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153
2. 서비스산업 혁신 제도 기반 구축 ····· 156
3. 규제 혁신 가속화 ····· 158
제6장 포용국가 기반 확충 ····· 163
제1절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 165
1.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 ····· 165
2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지원 ····· 168
제2절 포용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171
제3절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 176
제4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 180
제7장 선제적 미래 대비 ····· 183
제1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 185
제2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193
제3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대비 ····· 198
제8장 2021년 예산 ····· 199
제1절 2021년 예산 편성 ····· 201
1. 2021년 예산의 모습 ····· 201
2. 2021년 중점 추진과제 ····· 205
제2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 211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11
2. 중기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13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216

제9장 2020년 세법 개정 ····· 219
제1절 세법개정 기본방향 ····· 221
제2절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222
제3절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227
제4절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234

제10장 재정 혁신 ····· 239
제1절 지출구조 혁신 ····· 241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43
제3절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및 성과 중심 재정운용 ····· 244
제4절 재정업무 혁신·투명성 확보 ····· 246
제5절 재정분권 추진 ····· 248

제11장 국유재산 관리·공공조달 혁신 ····· 251
제1절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강화 ····· 253
제2절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 ····· 258
제3절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62

제12장 공공기관 혁신 ····· 267
제1절 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선도 ····· 269
제2절 효율·지속가능성 제고 ····· 277
제3절 자율·책임·투명성 강화 ····· 281

제13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85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87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87
2. 신북방·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확대 ····· 291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 ····· 295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98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98
2. 상생의 ODA 지속 추진 ····· 299
제3절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 ····· 303
1. G20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 추진 ····· 303
2.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306
3.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 312

부 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15
2. 주요 경제 통계 ····· 341

표 목차

〈표 2-1〉 주요 실물경제지표 동향 ····· 29
〈표 2-2〉 1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 33
〈표 2-3〉 2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 33
〈표 2-4〉 3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 34
〈표 2-5〉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 39
〈표 2-6〉 미국경제 주요지표 ····· 41
〈표 2-7〉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 42
〈표 2-8〉 일본경제 주요지표 ····· 43
〈표 2-9〉 중국경제 주요지표 ····· 44
〈표 2-10〉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 45
〈표 2-11〉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 46
〈표 2-12〉 주요 비철금속·곡물 가격 추이 ····· 47
〈표 2-13〉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53
〈표 2-14〉 경제활동별 성장률 ····· 54
〈표 2-15〉 지출항목별 성장률 ····· 55
〈표 2-1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55
〈표 2-17〉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56
〈표 2-18〉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56
〈표 2-19〉 GDP 디플레이터 ····· 57
〈표 2-20〉 총저축률 및 투자율 ····· 57
〈표 2-21〉 민간소비 증가율 ····· 58
〈표 2-22〉 부문별 가계소비 ····· 59
〈표 2-2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60
〈표 2-24〉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61
〈표 2-25〉 수출 ····· 62

〈표 2-26〉 수입 ····· 62
〈표 2-27〉 연도별 무역수지 ····· 63
〈표 2-28〉 품목별 수출 ····· 63
〈표 2-29〉 지역별 수출실적 ····· 64
〈표 2-30〉 용도별 수입실적 ····· 64
〈표 2-31〉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65
〈표 2-32〉 경상수지 ····· 66
〈표 2-33〉 상품수지 ····· 67
〈표 2-34〉 서비스수지 ····· 67
〈표 2-35〉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 68
〈표 2-36〉 취업자 증감 ····· 70
〈표 2-37〉 주요 고용지표 ····· 71
〈표 2-38〉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72
〈표 2-39〉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 74
〈표 2-40〉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75
〈표 2-41〉 주식시장 동향 ····· 76
〈표 2-42〉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 77
〈표 2-43〉 금융기관 수신 추이 ····· 78
〈표 2-44〉 기업자금사정 ····· 79
〈표 2-45〉 기업자금조달 ····· 79
〈표 2-46〉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 81
〈표 2-47〉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추이 ····· 82
〈표 2-48〉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82
〈표 2-49〉 2020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83
〈표 3-1〉 비상경제회의 주요 내용 ····· 98
〈표 3-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 99
〈표 3-3〉 2020년 상반기 집행실적 ····· 105
〈표 3-4〉 연도별 불용규모 ····· 106

〈표 3-5〉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2020년 말 기준) ····· 109
〈표 3-6〉「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 111
〈표 3-7〉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목표 및 실적 ····· 113
〈표 3-8〉 '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매출 ····· 118
〈표 3-9〉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 128
〈표 3-10〉 주택전세가격상승률(전기비) ····· 129
〈표 3-11〉 '20년 부동산 관련 주요대책 내용 ····· 131
〈표 3-12〉 가계부채 동향 ····· 133
〈표 4-1〉 지역균형뉴딜 유형 및 주요내용 ····· 145
〈표 5-1〉 연도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동향 ····· 150
〈표 5-2〉 벤처투자 및 유니콘 관련 통계 ····· 150
〈표 5-3〉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종 긴급 지원방안 주요내용 ····· 156
〈표 5-4〉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 159
〈표 5-5〉 10대 규제개선 TF 주요 성과 ····· 159
〈표 5-6〉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현황('19 · '20년) ····· 161
〈표 7-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 186
〈표 8-1〉 2021년 총수입 전망 ····· 202
〈표 8-2〉 2021년 총지출 규모 ····· 202
〈표 8-3〉 재정수지 ····· 203
〈표 8-4〉 국가채무 ····· 204
〈표 8-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204
〈표 8-6〉 중기 재정수입 전망 ····· 213
〈표 8-7〉 중기 재정지출 계획〉 ····· 214
〈표 8-8〉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215
〈표 10-1〉 심층평가 주요 주요결과 ····· 242
〈표 10-2〉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 248
〈표 11-1〉 국유일반재산 사용부담 완화 지원 ····· 256
〈표 11-2〉 전체 공공조달 규모 및 중소기업 조달 실적 ····· 258

〈표 11-3〉 혁신제품 종류 ····· 259
〈표 11-4〉 혁신조달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 260
〈표 11-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근거 및 역할(「조달사업법」제5조) ····· 261
〈표 11-6〉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 262
〈표 11-7〉 2020년 국고채 금리 동향 ····· 263
〈표 11-8〉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규모 ····· 263
〈표 11-9〉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20.10.20) ····· 265
〈표 12-1〉 공공기관 신규채용 ····· 270
〈표 12-2〉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 주요 내용 ····· 275
〈표 12-3〉 주요 동영상 제목 ····· 283
〈표 12-4〉 혁신포털 콘텐츠 누적 규모 ····· 284
〈표 13-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2.31. 기준) ····· 290
〈표 13-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300
〈표 13-3〉 2020년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 ····· 303
〈표 13-4〉 코로나19 대응 영문 정책자료 목록 ····· 310

그림 목차

〈그림 2-1〉 VIX 및 CDS 프리미엄 ····· 30
〈그림 2-2〉 VIX 및 CDS 프리미엄 ····· 31
〈그림 2-3〉 VIX 및 CDS 프리미엄 ····· 48
〈그림 2-4〉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및 주요국 주가상승률 ····· 49
〈그림 2-5〉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 50
〈그림 2-6〉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 80
〈그림 7-1〉 인구 피라미드 영향 ····· 187
〈그림 7-2〉 지역별 인구변화 ····· 187

제1장

2020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제1장

2020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코로나 위기 발생 및 피해

2020년 우리경제와 세계경제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발병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극심한 방역 위기 및 경제 침체를 경험했다. 전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봉쇄·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며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2년만에 역성장(△3.1%)을 기록했고, 우리경제도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5.0%)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9%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도 전년대비 △21.8만명 감소하며 고용시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확산 초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코스피 지수는 31.2% 하락했으며, 달러화 강세로 환율도 당초 1,195.0원에서 1,285.7원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는 2월, 8월, 11월의 총 3차례 확산세를 나타내며 총 6만740명이 확진되었으며 이중 900명이 사망하였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충격에 대해 위기발생 직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20.3.19)하며 재정·금융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우선 3월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신설된데 이어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고, 4월부터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총 24차례에 걸쳐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59년만에 총 4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모두 310조 규모(실물지원 약 89조, 금융안정대책 약 229조)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주요 실물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약 15.2조원), 고용안정패키지(10.9조원),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12조원) 등을 투입하여 내수 피해 최소화 및 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금융안정패키지(약 135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약 40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약 4.4조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상공인 들에 대한 긴급 자금·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신속·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우리 경제는 역성장 폭을 최소화(G20 국가 중 3위, OECD 회원국 중 4위)하였고, 고용시장 충격도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며 취약계층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 하였다.

사람중심의 포용 경제 구현

2020년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포용국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기존 임금노동자만 대상이던 기존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모두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지원도 확대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 긴급생계 지원 등의 조치도 강화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사회안정망을 강화하였는데,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항목 축소 등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완화 및 특별재난지역에서 보험료 감면등을 실시하고,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면서 포용 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2020년에 우리경제는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벤처·스타트업 등 제2벤처붐 확산 및 가속화, 주력산업·서비스산업·규제완화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등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선 한국판 뉴딜('20.7월)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한 미래 대비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으로,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에 더해 지역균형 뉴딜의 3+1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및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과제를 마련하였고,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친환경 전환 과제를 추진하였다. 안정망 강화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스타트대한민국 펀드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 기술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 대행서비스,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등도 병행하였다.

또한, 주력산업의 스마트·친환경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산단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의 유망 품목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자율운행차·선박 등을 지원회 사업화를 촉진하였다. 이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혁신 TF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혁신제도 기반 구축, 10대 규제 개선 TF 등을 통한 규제 혁신 가속화에도 앞장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2장

2020년 거시경제 개관

제2장

2020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발생 및 전개과정

1 국내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1)]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에서 27명의 환자가 원인불명의 폐렴에 감염된 사실이 WHO에 보고되었다. 이 감염병은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나아가 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 아시아국가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2월 19일 이 감염병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했다. 바이러스는 점차 유럽으로까지 확산되었다. 2월 21일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갑자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초에는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 걸쳐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유럽 각국은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방역대응팀 정혜경 서기관

이동금지령과 휴교령, 모임과 행사 금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부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코로나가 계속하여 전세계로 급격히 전파됨에 따라 마침내 3월 11일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WHO가 발표하는 전염병 경고 6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과거 홍콩독감(1968년),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선언된 것이다.

현재 코로나는 OECD 43개국을 포함하여 210개국에서 발생한 상태로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는 8,302만 9천명, 사망자수는 181만 천명에 이른다. COVID-19의 발병지인 중국에서는 확진자 9만8천명에 4천6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후 다소 소강상태인 반면, 유럽에서는 전역에 걸쳐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도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후 3월을 기점으로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워싱턴주가 2월 29일, 뉴욕주가 3월 7일 자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3월 13일에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 확진자수는 2,020만명, 총 사망자수는 35만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유입으로 인해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점차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검역단계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대구 ·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하루 100명대로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가 2월 29일에는 900여명까지 증가했다. 2월 23일 정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상위 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하고 2월 29일 첫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개학 및 대학교

개강이 연기되었으며, 130개국 이상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은 4월 말 확진자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5월 초 일단락되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속된 1차 유행 기간 동안 약 1만 1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던 1차와 달리 2차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1차 유행 이후의 소강기 동안 완화된 방역 분위기를 타고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터졌다. 이 기간 중 지역사회에 누적된 감염원이 물류센터, 콜센터,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고, 이후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서울 도심 집회까지 겹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특정 집단이 감염 중심에 있던 1차 유행과 달리 2차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추적이 쉽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교회, 집회발 집단감염을 고리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많이 나와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2차 유행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중소집단 감염 반복으로 약 1만 3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차 유행 이후 코로나 확산세는 한동안 잠잠했으나, 겨울이 되면서 다시 대유행이 찾아왔다. 3차 유행은 부천·광주 요양병원, 교정시설(동부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형태로 발생했다. 기존에 수도권 중심이었던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기간 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12월 13일에는 일일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1,000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속된 3차 유행 기간 동안에는 약 4만 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 6만 740명이 확진되었으며, 900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111.2명,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그룹에 속한다. 최근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우리나라 정부도 2020년 12월 31일 모더나사와 4천만회분의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그러나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행 시기별 주요 특성〉

구분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20.2.18~'20.5.5.)	('20.8.12~'20.11.12.)	('20.11.13~'21.1.20.)
	대규모 집단 발생	소규모 · 중간규모 집단 다수 발생	전국적 대규모 유행
확진자 수	10,774명	13,282명	45,568명
일 평균 확진자 수	138.1명 (최소 2명~최대 909명)	142.8명 (최소 38명~최대 441명)	660.4명 (최소 191명~최대 1,240명)
정점(최대확진자) 까지 소요일	11일 ('20.2.29. 정점, 909명)	15일 ('20.8.27. 정점, 441명)	43일 ('20.12.25. 정점, 1,240명)
해외유입 비율	10.1% (1,084명 / 10,774명)	11.0% (1,462명 / 13,282명)	4.3% (1,971명 / 45,568명)
감염재생산 지수(Rt)	0.53 ~ 9.35	0.68 ~ 3.05	0.79 ~ 1.52
주요 유행 특성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대규모 발생으로 젊은층 다수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회,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발생 급증 위중증 환자 증가	요양시설 및 병원,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적 확산 및 가족 간 감염 증가 고령층의 사망자, 위중증 환자 지속 증가

출처 : 질병관리청

❷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파급영향

(1) 국내외 경제 파급영향[2)]

1) 국내실물경제 파급영향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2월 신천지 대구교회 등 1차 대유행을 계기로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개학 연기 등 엄중한 방역상황을 초래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국내외 이동량을 급감시키고, 그에 따라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며 국내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당초에 한국경제는 2019년 다소 어려운 글로벌 여건 속에서의 부진이 완화되며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경제 성장세 개선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2020년 한국경제는 2019년 12월 발생 및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언되는 등 전파 속도가 빠르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전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국내 실물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뿐만 아니라 고용, 수출입, 물가 등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선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5.0%)하며 2020년 전년대비 △2.4% 감소해 1998년 IMF 당시(△9.4%) 이후 최대 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이동량 급감 및 사회 활동 감소로 음식·숙박·여가·관광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 및 크게 위축된 해외소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민간소비는 코로나 확산 추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위축과 회복이 반복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의 국내실물경제 파급 영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

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류성열 사무관

한편,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IT 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설이 부진하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우선 수출은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2020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20.3%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하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아세안 등 대부분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고,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수입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 및 국내 수입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원자재, 소비재 중심으로 감소했다.

고용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제조업 취업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었다. 특히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30대 취업자 및 대면 산업 부진 등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적극적인 정책 노력 등으로 전례없는 국내 실물경제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 K-방역 등 우수한 방역,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등 정책적 노력으로 민간소비 중 재화소비는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출도 11월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후에도 2차, 3차 확산 등 몇 차례의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났지만, 2020년 3월 첫 확산기에 비해서는 그 파급 영향이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표 2-1〉 주요 실물경제지표 동향

(단위 : %, 전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2.9	2.2	△0.9	△1.3	△3.2	2.2	1.1
- 민간소비	3.2	2.1	△5.0	△6.6	1.2	0.2	△1.3
- 설비투자	△2.3	△6.6	7.1	0.1	0.7	5.8	△0.6
- 건설투자	△4.6	△1.7	△0.4	0.1	△2.9	△3.9	3.5
취업자증감(만명)	9.7	30.1	△21.8	28.8	△40.7	△31.4	△44.1
- 제조업	△5.6	△8.1	△5.3	0.6	△5.5	△5.7	△10.7
- 서비스업	5.1	34.8	△21.6	18.6	△35.3	△27.9	△41.8
수출(전년동월비)	5.4	△10.4	△5.5	△1.9	△20.3	△3.5	4.1
수입(전년동월비)	11.9	△6.0	△7.1	△1.9	△15.8	△8.7	△1.7
소비자물가	1.5	0.4	0.5	1.2	△0.1	0.6	0.4

(2) 국외 금융시장 파급영향[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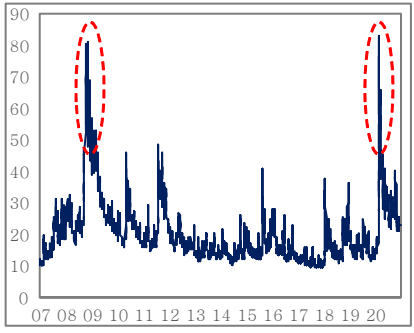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전례없는 변동성을 경험했다. 금융시장 공포를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IX, Volatility Index)는 2월 중순 13.7에서 3월 중순 82.7로 급등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 80.1을 돌파했다. 동시에,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주요국 CDS 프리미엄도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급락했다. 전세계적코로나 확산으로 선진국·신흥국 주고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다우지수는 코로나 발생 1개월('20.2.12~3.23일) 만에 약 37%까지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배나 빠른 속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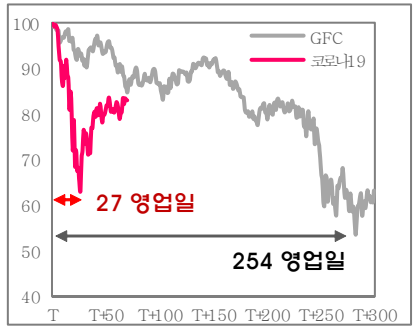
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권용준 사무관

〈그림 2-1〉 VIX 및 CDS 프리미엄

VIX 추이



美 다우지수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 비교)



* 자료: 블룸버그

크레딧 시장 불안도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 채무불이행 위험증가로 대규모 회사채 매도물량이 출회되며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신규 회사채 발행은 중단되기까지 했다. 2020년 3월중 일부 우량기업들은 간헐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하이일드 채권 등은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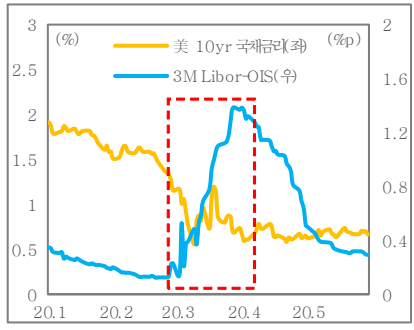
자금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업·헤지펀드 등의 자금 확보, 마진콜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면서 자금시장이 급격히 경색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최상위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미국 국채까지 투매하는 패닉성 매도가 발생하며 한때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한편, 달러화는 전방위적인 초강세를 보였다. 미국 연준 금리인하 등에도 증시 급락, 유동성 경색 우려 등이 한동안 지속되며 달러화의 급격한 강세가 시작됐다. 연준이 한국 등 9개국과 통화스왑을 채결한 이후에야 이러한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림 2-2〉 VIX 및 CDS 프리미엄

美 회사채 스프레드

美 Libor-OIS 스프레드, 10년물 국채금리



* 자료: 블룸버그

다행히도 이러한 전례 없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등에 힘입어 3월말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급등했던 VIX 지수 및 CDS 프리미엄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크레딧 시장 및 자금 시장 불안도 완화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달러 유동성 경색이 다소 해소되면서 달러인덱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변동성 지수 등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20년 3월 1차 확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양상이었다.

특히, 주가지수는 3월말 회복국면에 접어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우지수는 11월 들어 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3) 국내 금융시장 파급영향[4)]

2020년초 국내 금융시장은 전례 없던 코로나19 불확실성에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기에는 확진자 수 동향에 점차 내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2020년말 주식시장(코스피)는 전년말 대비 +30.8% 크게 상승했으며, 환율(원/달러)는 전년말 대비 70.1원 하락했다. 금리(국고채 10년물)는 전년말 대비 3bp 상승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자금(주식·채권)은 0.3조원 순유입되며 10.8조원 순유입된 2019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1) 1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누적 확진자 수가 15명을 초과하기 시작한 2월 3일, 코스피 지수는 2,118.9pt에서 3월 19일 1,457.6pt (2009년 7월 17일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하며 31.2% 급락했다. 동 기간 원/달러 환율은 1,195.0원에서 1,285.7원으로 오르며 최대 90.7원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시장에서 금리는 3월 9일 1.286%까지 하락하여 최대 26bp 하락하였으며, 외인자금은 기간 내 약 14조원 순유출되었다.

1차 확산기에는 신종 바이러스의 전염성 및 치명률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확실성, 글로벌 봉쇄조치 강화에 따를 실물경제 둔화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특히 증권 및 외환시장의 경우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 50여 거래일이 소요되었다.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유진 사무관

〈표 2-2〉 1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초일 (2.3일)	저점 및 고점	(날짜)	종료일 (4.2일)	초일수준으로 회복시점	
코스피(pt)	2,118.9	저점 1,457.6	(3.19일)	1,724.9	2,147.0	(6.3일)
환율(원/달러)	1,195.0	고점 1,285.7	(3.19일)	1,228.3	1,191.2	(6.10일)
금리(10y, %)	1.547	저점 1.286	(3.9일)	1.518	1.570	(3.13일)
외인자금(억원)	△16,387	저점 △27,011	(3.9일)	△16,713	-	

2) 2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다시 돌파하기 시작한 8월의 2차 확산기에 코스피 지수는 8월 18일 2,348.2pt에서 8월 20일 2,274.2pt로 최대 3.2%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18일 1,183.7원에서 최대 5.9원 상승했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357%에서 최대 1bp 하락, 외인자금은 기간내 약 2조원 순유출되었다.

1차 확산기에 비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정도가 둔화된 가운데, 충격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기간 또한 짧아졌다. 증권·채권·외환시장 모두 약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충격 전 수준을 회복했다.

〈표 2-3〉 2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초일 (8.18일)	저점 및 고점	(날짜)	종료일 (9.22일)	초일수준으로 회복시점	
코스피(pt)	2,348.2	저점 2,274.2	(8.20일)	2,332.6	2,366.7	(8.25일)
환율(원/달러)	1,183.7	고점 1,189.6	(9.4일)	1,165.0	1,183.5	(9.14)
금리(10y, %)	1.357	저점 1.347	(8.19일)	1.472	1.379	(8.20)
외인자금(억원)	△1,015	저점 △22,705	(9.9일)	△2,708	-	

3) 3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11월 중순 이후,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을 연일 돌파하며 3차 확산기로 진입했다. 11월 23일 코스피는 2,602.6pt에서 30일 2,591.3pt로 최대 0.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간내 최대 13.3원 상승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하방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외인 자금은 기간내 약 2조원 순유입되었다.

전반적으로 앞선 1,2차 확산기에 비해 시장 투자자들의 오버 슈팅 정도가 약해졌으며, 국내외 경제의 회복 흐름 속에서 증권과 채권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충격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기간 또한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짧아졌다. 다만 환율의 경우, 美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성이 더 큰 모습을 보였다.

〈표 2-4〉 3차 확산 시기 금융시장 동향

	초일 (11.23일)	저점 및 고점	(날짜)	종료일 (2.15일)	초일수준으로 회복시점	
코스피(pt)	2,602.6	저점 2,591.3	(11.30일)	3,147.0	2,634.3	(12.3일)
환율(원/달러)	1,110.4	고점 1,123.7	('21.2.5일)	1,101.4	1,107.0	('21.2.10일)
금리(10y, %)	1.581	저점 1.581	(11.23일)	1.871	1.581	(11.23일)
외인자금(억원)	+8,202	저점 △38,504	(12.10일)	+8,547	-	

1차 확산기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2차 및 3차 확산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모습을 보였다. 그 기저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 투자심리 강화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주요국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5)]

		규모	지원내용
EU	직접 재정 지원	4,278억 유로	• 코로나 백신 개발, 치료 및 진단 연구에 4,750만 유로를 전용 • 코로나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의 규모 370억 유로로 상향('20년4월) - 병원, 노동시장 및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지원 • EU회원국에게 3,90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EU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조성('20년12월) - 회복 및 회복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3,125억 유로): 회원국의 투자 및 개혁 지원, '21~22년간 70%, '23년 동안 30% 사용 - 결속기금(ReactEU, 475억 유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근무시간 단축제도 지원 등 위기 관련 투자 및 지출 지원 -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100억 유로): 탄소집약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근로자의 전환 지원 - 기타 지원: R&D(50억 유로), 민간부문 투자(56억 유로), 지방 개발(75억유로), 재난구제프로그램(RescEU, 19억 유로)
	금융 지원	7,000억 유로	• 근로자, 기업, 회원국에 최대 3,400억 유로 규모 지원('20년4월) - (EU실업위험완화 긴급지원) 실업 및 근무시간 단축제도 지원을 위해 EU 예산 및 회원국 보증을 통해 1,000억 유로 융자 - (유럽안정화기구) 요청 회원국의 '19년 GDP의 2%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지출의 자금을 지원, 총2,400억 유로 대출 가능 • EU경제회복기금을 통한 3,6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20년12월)
	채무 지원	650억 유로	• (범유럽보증기금) 유럽투자은행 또는 국가개발은행의 중소기업의 2,000억 유로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 -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3월에 유럽투자은행이 출자한 400억 유로에 250억 유로를 더하여 총 650억 유로의 기금 조성

5) 출처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nc

		규모	지원내용
미국	직접 재정 지원	3조 5,030억 달러	〈추가지출 및 조세지출〉 •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추가예산, '20년3월) 총 70억 달러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 '20년3월) 총 3,117억 달러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법, '20년3월) 총 1조9,378억 달러 • (급여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강화 법, '20년4월) 총 4,827억 달러 • (재원 재배분, '20년8월) 180억 달러 추가 지출 • (통합 세출 예산, '20년12월) 총 8,875억 달러 〈과세이연〉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법, '20년3월) 세금신고 접수마감일을 90일 연장하고 급여세 납부를 '21/22 회계연도로 연기 •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20년8월)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납부 유예(17억 달러) 및 학자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43억 달러)
	금융 지원	560억 달러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법, '20년3월) 여객기, 화물기, 우편서비스 등 피해업종에 대한 대출 지원 560억 달러
	채무 지원	4,540억 달러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법, '20년3월) 발행 또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연방준비제도 기구에 4,540억 달러를 지원
일본	직접 재정 지원	83조 6,000억 엔	〈보건분야〉 •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중요 장비의 생산, 조달, 유통(8000억엔) • 의료 및 장기요양전문의에게 현금 지급을 포함한 보건 및 장기요양 관련 조치를 위해 지방 정부로 재원 이전(3조7천억엔) • 기타 보건관련 조치(백신 구매 등)(4조8천억엔) 〈비보건분야〉 • (코로나19긴급경제 패키지) 전국민 10만엔 현금 지급(12조9천억엔) 매출감소 기업대상 일괄지원(중소기업 200만엔, 개인사업자 100만엔)(2조3천억엔) 금융기관 대출 보조금(3조8천억엔) 근로보조금 확대(9천억엔) 서비스부문 소비 및 인프라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10조8천억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로 재원이전(1조엔) • (5월 27일 추가 조치) 지방정부로 교부(2조엔) 근로 보조금 확대(1조3천억엔) 공공/민간 금융기관 대출 보조금(11조7천억엔) 기업에 대한 급부금(1조9천억엔) 피해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 보조금(2조엔).

		규모	지원내용
일본	직접 재정 지원	83조 6,000억 엔	• (12월 8일 추가 조치) 친환경 기술에 투자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2조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한 지원금(1조1000억엔) 고용조정보조금의 확대(1조5천억엔) 지방 정부에 재원이전(1조5천억엔) 금융기관 대출 보조금(3조2천억엔) 국가 회복력 향상을 위한조치(주로 공공 투자)(4조4천억엔) •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예비비의 일부를 총 4조7천억엔에 달하는 보건 및 비보건 조치(아래 조치 포함)에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2월 패키지의 일부인 12월 11일에 승인된 지출 제외) 〈조세감면〉 • 손실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확대, 기업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세제 혜택, 재산세와 항공 유류세 인하 등 〈과세이연〉 • 피해 기업과 가계의 세금 및 사회 보장 보험료 납부 1년 유예(26조엔)
	임시 채무	4,540억 달러	〈보증〉 •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금융공사의 채권/차입 보증(7조6천억엔). •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의 대외채권 보증(1조1천억엔). • 기타 공공금융기관의 자본 투입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차입 보증(2조5천억엔) • 자본금 보증 한도를 은행으로 확대(3조엔) • 일본수출보험공사의 보험 한도 확대(1조5천억엔) 〈준 재정 조치〉 • 공공 및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피해 기업 대상 양허성 대출 및 보증(112조엔) • 공공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준자본) 및 주식 제공(2조7천억엔) • 피해 병원 및 의원에 대한 공공금융기관의 대출(3조5천억엔) • 대학기금(4조엔) • 일본정책투자은행 및 기타 기관을 이용한 기타 준재정 운영(주로 인프라 사업)(15조엔)

제2절 세계 경제 동향

1 개관[6)]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3.1% 감소(IMF 기준)했다. 강도 높은 봉쇄조치,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투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생산차질 및 국가간 이동 제한 등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도 심화되었다.

선진국 경제는 2020년 △4.5% 역성장하며 크게 둔화되었다. 미국경제는 2차대전 직후 이후 최저치인 △3.4% 성장률을 기록했고, 유로존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6.4%을 기록했다. 선진국 경제는 상반기 펜더믹 충격에 따른 큰 폭의 경기침체 이후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 들어 미국, 유럽 등에서 다시 확산세가 심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흥국 경제는 중국경제의 선방에 힘입어 성장률 하락폭이 선진국보다 작았다. 2020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국경제가 플러스 성장(2.3%)하며, 신흥국 경제 전체로는 △2.1%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인도 등 중국을 제외한 기타 신흥국 국가들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송지현 사무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중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달러까지 급락하였다가 40달러 내외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OPEC+ 생산 조절 등 상방요인과 코로나 재확산 및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 하방요인이 교차하면서 4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1/4분기 코로나사태로 큰 불안을 경험했으나,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 재정정책 및 통화 완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 美 대선 등의 요인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연중 확대·진정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5〉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2.8	-	-	-	-	△3.1	-	-	-	-
선진국	1.7	-	-	-	-	△4.5	-	-	-	-
미 국 (전기비연율)	2.3	2.4	3.2	2.8	1.9	△3.4	△5.1	△31.2	33.8	4.5
유 로 (전기비)	1.6	0.7	0.2	0.3	0.0	△6.4	△3.5	△11.7	12.6	△0.4
일 본 (전기비)	0.0	0.3	0.2	0.1	△1.9	△4.6	△0.6	△8.0	5.4	2.8
개발도상국	3.7	-	-	-	-	△2.1	-	-	-	-
중 국 (전년동기비)	6.0	6.3	6.0	5.9	5.8	2.3	△6.8	3.2	4.9	6.5

자료 : IMF, 블룸버그 등

❷ 선진국 경제 동향[7)]

(1) 미국경제

2020년 미국경제는 연간으로 △3.4% 성장률을 기록하며 2차 대전 직후('46년, △11.6%)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되었다. 상반기에는 확산세 심화, 대규모 실업 등으로 소비와 생산 모두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전기비연율)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5.1%, △31.2%를 기록했다. 3/4분기에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33.8%로 반등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4/4분기 회복세가 주춤하며 4.5% 성장에 그쳤다.

그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감소 전환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투자 역시 위축되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확대 등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성장세 하락을 보완했으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

고용시장의 경우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4월 2,067만명 감소하며 통계 발표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2020년 월평균으로도 78.5만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4월 14.7%까지 급등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연간으로 전년(3.6%)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중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0%대로 하락했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1% 초반 흐름을 유지했다.

---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송지현 사무관

〈표 2-6〉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2019년					2020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2.3	2.4	3.2	2.8	1.9	△3.4	△5.1	△31.2	33.8	4.5
- 민간소비	2.2	0.6	3.6	3.2	1.7	△3.8	△6.9	△33.4	41.4	3.4
- 기업투자	3.2	3.7	6.1	3.1	△1.1	△2.7	△2.3	△30.4	27.5	17.7
- 주택투자	△0.9	0.1	4.1	3.6	1.1	6.8	20.4	△30.7	59.9	34.4
- 정부지출	2.2	2.7	5.0	2.1	3.0	2.5	3.7	3.9	△2.1	△0.5
- 수 출	△0.1	3.1	△2.2	△0.8	1.2	△13.6	△16.3	△59.9	54.5	22.5
- 수 입	1.2	0.0	1.7	△1.1	△8.5	△8.9	△13.1	△53.1	89.2	31.3
소비자물가[2]	1.8	1.6	1.8	1.8	2.0	1.2	2.1	0.4	1.2	1.2
실업률	3.7	3.9	3.7	3.6	3.6	8.1	3.8	13.1	8.8	6.8

주 : 1) 전기비연율 2) 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

(2) 유로지역 경제

2020년 유로존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봉쇄조치 등으로 역대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2/4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3/4분기 반등했으나, 10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2분기만에 재차 역성장세를 보였고, 연간으로는 △6.4%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주요국 모두 역성장하였으나, 관광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7.9%), 이탈리아(△8.9%), 스페인(△10.8%) 등의 성장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독일(△4.6%)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그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경제활동 위축으로 2/4분기 중 크게 상승하였다가 3/4분기 이후 소폭 진정되었다. 한편, 연간으로 전년대비 0.3%p 상승(2019년 7.5% → 2020년 7.8%)에 그치며 고용유지제도 등에 힘입어 경기 위축 정도에 비해 실업률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2-7〉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2019년					2020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1.6	0.7	0.2	0.3	0.0	△6.4	△3.5	△11.7	12.6	△0.4
산업생산	△1.3	0.5	△0.7	△0.7	△1.3	△8.6	△3.1	△15.8	15.9	4.3
소매판매	2.4	0.9	0.6	0.5	0.1	△0.9	△2.4	△5.1	10.6	△1.2
수출	2.8	3.8	2.2	3.2	2.3	△9.0	△1.5	△23.6	△8.6	△2.6
소비자물가[2)]	1.2	1.4	1.4	1.0	1.0	0.3	1.1	0.2	0.0	△0.3
실업률	7.5	7.8	7.6	7.4	7.4	7.8	7.3	7.6	8.5	8.2
독일 GDP[1)]	1.1	1.1	△0.5	0.4	△0.1	△4.6	△1.8	△10.0	9.0	0.7
프랑스 GDP[1)]	1.8	0.6	0.5	0.1	△0.3	△7.9	△5.7	△13.5	18.5	△1.1
이태리 GDP[1)]	0.5	0.0	0.2	0.1	△0.4	△8.9	△5.7	△12.9	15.6	△1.7
스페인 GDP[1)]	2.1	0.5	0.4	0.4	0.4	△10.8	△5.4	△17.7	16.8	0.2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

(3) 일본경제

2020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확산으로 내수, 대외부문이 모두 위축되며 GDP 성장률이 금융위기(2009년, △5.7%) 이후 최저치인 △4.6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0.6 성장률(전기비)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들어 일본전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되며 △8.0%로 크게 둔화되었다. 3/4분기에는 긴급사태 해제, 소비 촉진 정책,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4/4분기들어 재확산으로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3%대까지 지속 상승하고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도 전년도 말 1.51에서 연말 1.05까지 하락하면서 크게 악화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하락, 정부 지원책 등 영향으로 4/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표 2-8〉 일본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2019년					2020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1]	0.0	0.3	0.2	0.1	△1.9	△4.6	△0.6	△8.0	5.4	2.8
- 민간소비	△0.3	△0.1	0.5	0.5	△3.1	△5.8	△0.8	△8.3	5.3	2.2
- 설비투자	0.1	△0.7	0.2	0.9	△4.5	△6.0	1.2	△6.0	△2.2	4.3
- 정부지출	1.9	0.3	0.9	0.7	0.3	2.8	△0.3	0.7	2.8	1.9
- 수출	△1.5	△2.1	0.4	△0.5	0.3	△11.7	△4.7	△17.6	7.4	11.7
소비자물가[2]	0.5	0.3	0.7	0.3	0.5	0.0	0.7	0.1	0.0	△0.9
실업률	2.4	2.5	2.3	2.3	2.3	2.8	2.4	2.7	3.0	3.0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❸ 신흥국 경제 동향[8)]

(1) 중국경제

2020년 중국경제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연초 크게 부진하였으나, 이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조기 통제에 성공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연간으로는 전년(6.0%)대비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며 2.3%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2/4분기부터, 투자와 수출은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며 연간으로 증가세를 유지했고, 소매판매는 1/4분기 큰 폭 하락 영향으로 연간으로도 감소 전환되었다.

〈표 2-9〉 중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9년					2020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6.0	6.3	6.0	5.9	5.8	2.3	△6.8	3.2	4.9	6.5
산업생산[1)]	5.7	6.5	5.6	5.0	5.9	2.8	△8.4	4.4	5.8	7.1
소매판매[1)]	8.0	8.3	8.5	7.6	7.7	△3.9	△19.0	△4.0	0.9	4.6
고정자산투자[2)]	5.4	6.3	5.8	5.4	5.4	2.9	△16.1	△3.1	0.8	2.9
수출	0.5	1.4	△1.0	△0.3	2.0	3.6	△13.6	△0.2	8.4	16.6
소비자물가	2.9	1.8	2.6	2.9	4.3	2.5	5.0	2.7	2.3	0.1
실업률	5.2	5.2	5.0	5.2	5.1	5.6	5.8	5.9	5.6	5.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전년누계비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송지현 사무관

연초 급등한 실업률은 하락세로 전환하며 연말에는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공급 증가, 유가 하락 등으로 하반기중 오름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2)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2020년 인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며 △7.3% 성장률을 기록했다. 3월부터 인도 전역에 걸쳐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시행되며 2/4분기 성장률은 분기 성장률 집계 이래 최저치인 24.4%까지 하락했다. 6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하반기들어 점차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2020년 △4.1% 역성장했다.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수출은 원자재가격하락 등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됐다.

러시아의 경우, 코로나 확산,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영향으로 실질GDP가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글로벌 교역 위축과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 역시 급감했다.

〈표 2-10〉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19년					2020년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	4.0	5.8	5.4	4.6	3.3	△7.3	3.0	△24.4	△7.4	0.5
브라질	1.4	1.2	1.5	1.3	1.6	△4.1	△0.3	△10.9	△3.9	△1.1
러시아	2.0	1.3	1.2	2.6	2.9	△3.0	1.4	△7.8	△3.5	△1.8

자료 : 블룸버그, IMF, 러시아 연방통계청 등

④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9)]

2020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42.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년(63.5달러) 대비 33.3% 하락했다. OPEC+ 감산,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등으로 2020년 1월 64.3달러까지 상승한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경제 봉쇄로 금년 4월 20.4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5월부터 주요국의 봉쇄가 완화되고 OPEC+ 감산이 지속되면서 40달러 초반까지 상승했다. 이후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실시, 백신 개발의 진전 및 접종 개시, OPEC+ 감산 합의 연장 및 추가 감산 등 상방요인과 코로나 19 재확산 및 유럽 등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 하방요인이 교차하면서 2020년말까지 40달러 초중반대 흐름이 이어졌다.

〈표 2-11〉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중 평균)

	2019년	'20년 (전년비)				
			1/4	2/4	3/4	4/4
두바이유 (Dubai)	63.5	42.3	50.4	30.7	42.9	44.7
브렌트유 (Brent)	64.2	43.2	50.8	33.4	43.4	45.3
서부텍사스유 (WTI)	57.0	39.3	45.8	28.0	40.9	42.8

자료: 한국석유공사

비철금속 가격은 상반기에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주요 비철금속 생산국의 생산 차질과 수요 회복이

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선익 사무관

중첩되며 3분기부터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연평균 가격으로 보면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대비 하락했고(알루미늄(△4.8%), 니켈(△1.0%), 아연(△10.8%), 납(△8.7%), 주석(△7.9%), 구리(3.0%)는 중국의 수입 확대와 경기회복기대 반영으로 상승했다.

곡물 가격은 품목별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소맥(11.1%), 대두(6.4%)는 중국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기상악화 및 파종 지연 등으로 상승했다. 한편, 옥수수 (△5.4%)는 코로나 19에 따른 에탄올 및 사료 수요 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하락했다.

〈표 2-12〉 주요 비철금속·곡물 가격 추이

(기간중 평균)

	(단위)	2019년	2020년 (전년비,%)					
					1/4	2/4	3/4	4/4
구리	($/톤)	6,000	6,181	(3.0)	5,637	5,356	6,519	7,166
알루미늄	($/톤)	1,791	1,704	(△4.9)	1,690	1,497	1,704	1,916
니켈	($/톤)	13,936	13,789	(△1.1)	12,723	12,215	14,210	15,930
아연	($/톤)	2,544	2,267	(△11.0)	2,125	1,961	2,335	2,628
납	($/톤)	2,000	1,826	(△8.7)	1,847	1,673	1,873	1,901
주석	($/톤)	18,643	17,159	(△8.0)	16,278	15,792	17,687	18,806
옥수수	(¢/부셸)	387	366	(△5.4)	374	324	348	418
소맥	(¢/부셸)	495	550	(11.1)	548	516	531	603
대두	(¢/부셸)	896	954	(6.4)	893	852	930	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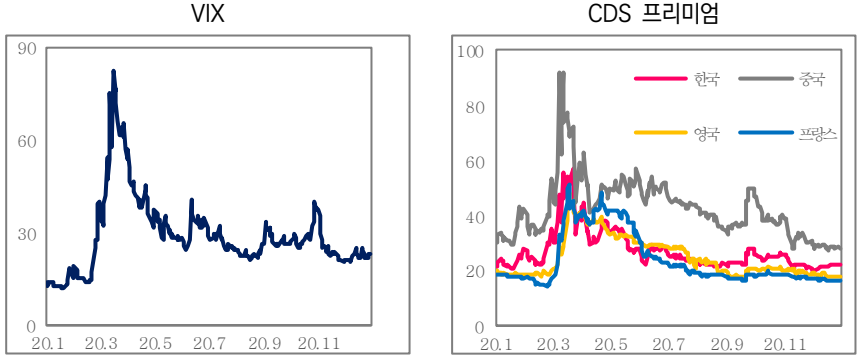
자료: Korea PDS, 조달청

5 국제금융시장 동향[10)]

(1) 개관

2020년 국제금융시장은 1분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큰 불안을 경험했으나,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가는 코로나 위기 당시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오히려 위기 전 수준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미·중 갈등, 美 대선 등의 요인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연중 확대·진정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3〉 VIX 및 CDS 프리미엄



* 자료: 블룸버그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VIX는 코로나 직후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다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코로나 재확산 동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며 위기 전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권용준 사무관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CDS 프리미엄은 코로나 영향으로 '20.3월 급등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연말에는 위기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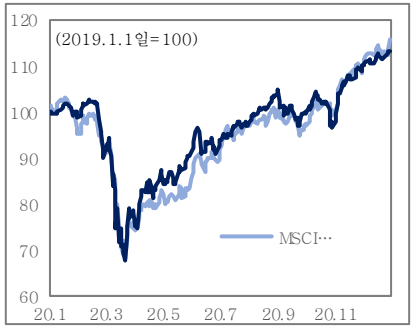
(2) 주가

글로벌 증시는 역사상 최단기간 급등락을 보였다. 선진국, 신흥국 주가지수 모두 코로나 직후 연초 대비 70% 이하로 급락하였으나 3월말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들며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전체로 보면 코로나에도 주요국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 봉쇄조치 강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는 있었다. 유럽의 경우 봉쇄조치에 따른 타격이 크고 향후 회복 전망도 다소 불확실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4〉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및 주요국 주가상승률

MSCI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주요국 2020년 주가상승률

	1.1일 주가	12.31일 주가	상승률(%)
미국	28,538	30,606	+7.2
유로존	3,745	3,553	△5.1
영국	7,542	6,461	△14.3
한국	2,198	2,873	+30.8
일본	23,657	27,444	+16.0
중국	3,050	3,473	+13.9
홍콩	28,190	27,231	△3.4
인도	41,306	47,751	+15.6
터키	1,144	1,477	+29.1

* 자료: 블룸버그

(3) 금리

주요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친 결과다.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3월중 두 차례 큰 폭 인하(3.3일 △50bp, 3.15일 △100bp)하며 제로금리(0.0~0.25%)에 돌입하였으며, 3.23일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가동했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연중 지속되면서 주요국 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고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美 국채금리는 완만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5〉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주요국 국채금리 (10년물, %)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 (10년물)

	1.1일(%)	12.31일(%)	변화(bp)
美 10년물	1.92	0.91	△100.4
美 5년물	1.69	0.36	△133.0
美 2년물	1.57	0.12	△144.8
독일	△0.19	△0.57	△38.4
영국	0.82	0.20	△62.5

* 자료: 블룸버그

(4) 환율[11)]

2020년 3월 팬데믹 공포에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전방위 강세를 보였다. 3월 9일, 美 경제봉쇄(뉴욕주 비상사태), 유가폭락(OPEC 합의 실패) 등으로 美 증시가 급락(△7.8%)하고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되면서 달러화의 급격한 강세가 시작됐다.

3월 15일, 휴일 중 연준의 추가 대응 발표(100bp 금리인하, 국채·MBS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美 증시가 폭락(△12.9%)하는 등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고, 유동성 경색 우려로 모든 자산에 대한 패닉성 매도(현금화)가 발생했다.

특히, 안전자산인 美 국채마저 투매가 일어나며 美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였다. 이후 3월 19일, 연준이 한국을 포함해 9개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달러 유동성 우려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달러화의 급격한 강세흐름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등 주요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며 주요국 증시가 상승했고,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보였다. 특히, 7월 이후로는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등 유로존 경제회복 기대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 흐름은 가속화되었다.

---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상민 사무관

제3절 국내 경제 동향

1 개관[12)]

2020년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9% 역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은 최초의 보건위기로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입,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경제에 큰 파급 영향을 발생시켰다.

반도체 업황 회복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증가(7.1%)했으나,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대면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큰 폭 감소(△5.0%) 했다. 2020년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4%p로, 역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4분기 이후 일부 주요국의 활동재개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무역 둔화로 수출은 전년대비 △5.5% 감소하였고, 수입은 △7.1% 감소하며 연간 무역수지는 448.7억불, 순수출 기여도는 0.5%p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기 침체의 여파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1.8만명 감소하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 이후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류성열 사무관

물가는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6.7%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인 0.5% 상승했다.

금융 시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2019년말 대비 +30.8% 상승한 2,873.5pt로 마감했다. 2020년 초기에는 글로벌 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요국과 더불어 크게 하락했으나,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및 글로벌 경제 회복·정상화 기대 등으로 하반기에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표 2-13〉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 %, 전년동월비, 전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2.9	2.0	△0.9	△1.3	△3.2	2.2	1.1
- 민간소비	3.2	1.7	△5.0	△6.6	1.2	0.2	△1.3
- 설비투자	△2.3	△7.5	7.1	0.1	0.7	5.8	△0.6
실질 GNI	1.6	0.4	1.0	0.2	△1.7	△0.3	0.8
취업자증감(만명)	9.7	30.1	△21.8	28.8	△40.7	△31.4	△44.1
실업률	3.8	3.8	4.0	4.2	4.4	3.6	3.7
소비자물가	1.5	0.4	0.5	1.2	△0.1	0.6	0.4
경상수지(억불)	774.7	596.8	752.8	129.3	61.1	240.0	322.4
수출(통관, 억불)	6,049	5,422	5,125.0	1,301.8	1,103.4	1,300.7	1,419.0
- 증가율	5.4	△10.4	△5.5	△1.9	△20.3	△3.5	4.1
수입(통관)	5,352	5,033	4,676.3	1,215.0	1,083.9	1,140.7	1,236.8
- 증가율	11.9	△6.0	△7.1	△1.9	△15.8	△8.7	△1.7

❷ 경제성장[13)]

2020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대내외 경제활동 위축 영향으로 △0.9%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이 감소 전환된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감소폭이 다소 축소(△2.6 → △1.4%)됐다.

〈표 2-14〉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전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2.9	2.2	△0.2	1.0	0.4	1.3	△0.9	△1.3	△3.2	2.2	1.1
- 농림어업	0.2	3.9	7.1	△3.6	0.5	△1.3	△4.0	3.4	△8.6	0.0	4.3
- 제조업	3.3	1.1	△2.5	0.7	1.6	1.7	△0.9	△0.1	△9.4	7.5	3.1
- 건설업	△2.8	△2.6	△1.0	2.6	△3.0	2.8	△1.4	0.2	△1.1	△4.5	1.4
- 서비스업	3.8	3.4	0.6	1.1	0.7	1.2	△1.0	△2.5	△0.8	1.0	0.6

자료 : 한국은행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소비 위축 등으로 감소 전환(2.1 →△5.0%)됐으며,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6.6 → 7.1%)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1.7 → △0.4%)했으며,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 영향으로 수출(△1.8%)·수입(△3.3%)도 모두 감소했다.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윤현곤 사무관

〈표 2-15〉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 전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2.9	2.2	△0.2	1.0	0.4	1.3	△0.9	△1.3	△3.2	2.2	1.1
- 민간소비	3.2	2.1	0.2	0.7	0.5	0.9	△5.0	△6.6	1.2	0.2	△1.3
- 설비투자	△2.3	△6.6	△8.3	3.5	0.3	3.4	7.1	0.1	0.7	5.8	△0.6
- 건설투자	△4.6	△1.7	△0.2	2.4	△3.3	5.3	△0.4	0.1	△2.9	△3.9	3.5
- 수출	4.0	0.2	△4.2	2.2	3.7	0.5	△1.8	△0.8	△15.9	16.3	5.3
- 수입	1.7	△1.9	△3.8	3.9	△0.1	△0.6	△3.3	△2.6	△5.8	5.9	1.5

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의 경우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다소 축소 (0.8→0.5%p) 됐고,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감소 전환(1.4→△1.4%p) 됐다. 한편, 민간경제 활력 저하로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감소 전환(0.7→△1.9%p)했으나 추경 편성, 집행률 제고 등 적극적 재정 역할에 힘입어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1.0%p를 기록했다.

〈표 2-1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전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2.9	2.2	△0.2	1.0	0.4	1.3	△0.9	△1.3	△3.2	2.2	1.1
내수	1.9	1.4	0.0	1.5	△1.0	0.8	△1.4	△2.0	1.1	△1.3	△0.5
- 민간소비	1.5	1.0	0.1	0.3	0.2	0.4	△2.4	△3.2	0.5	0.1	△0.6
- 설비투자	△0.2	△0.6	△0.7	0.3	0.0	0.3	0.6	0.0	0.1	0.5	△0.1
- 건설투자	△0.7	△0.3	△0.1	0.3	△0.5	0.8	△0.1	0.0	△0.4	△0.6	0.5
순수출	1.0	0.8	△0.3	△0.5	1.5	0.4	0.5	0.6	△4.3	3.6	1.6
민간	2.1	0.7	0.0	0.1	0.2	0.5	△1.9	△1.8	△2.7	2.5	0.9
정부	0.8	1.6	△0.3	0.9	0.3	0.8	1.0	0.4	△0.5	△0.3	0.2

자료 : 한국은행

2020년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년대비 △0.2% 감소했으나 실질 GDP 성장률(△0.9%)을 상회했다. 이는 교역조건의 개선에 따른 실질무역손실 감소 등에 기인했다.

〈표 2-17〉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비)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1/4	2/4	3/4	4/4
교역조건지수[1]	△3.2	△5.9	△5.2	△6.4	△6.4	△5.1	1.7	△4.9	2.6	4.6	5.2
실질 GNI	1.6	0.4	△0.4	0.3	0.5	1.0	△0.2	0.2	△1.7	△0.3	0.8

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 기준(2015=100)
자료 : 한국은행

2020년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33.2조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0.8% 감소한 1조 6,382억 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3,762.1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31,880.6달러를 기록했다.

〈표 2-18〉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당해연도 가격기준)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총생산(GDP)	조원	1,835.7	1,898.2	1,924.5	1,933.2
	억달러	16,233.1	17,251.6	16,510.1	16,382.0
1인당 국민총소득(GNI)	만원	3,588.6	3,693.0	3,753.9	3,762.1
	달러	31,734.1	33,563.7	32,204.4	31,880.6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20년 GDP 디플레이터는 국제유가 하락,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3% 상승(103.9 → 105.2)했다.

〈표 2-19〉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15=100,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디플레이터	104.3	104.8	103.9	105.2
(등락률)	2.2	0.5	△0.8	1.3

자료 : 한국은행

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증가(0.6%)했으나 최종소비지출이 감소(△1.4%)하여 전년(34.7%)대비 1.3%p 상승한 35.9%를 기록했다. 민간 총저축률은 전년보다 4.3%p 상승한 32.1%를 나타냈으며, 정부 총저축률은 3.9%로 전년(6.9%)이 비해 3.0%p 하락했다. 한편, 국내 총투자율은 전년(31.3%)보다 0.4%p 상승한 31.7%를 기록했다.

〈표 2-20〉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저축률	37.1	35.9	34.7	35.9
민간	29.2	27.8	27.7	32.1
- 가계	6.8	6.8	7.4	10.8
- 기업	22.4	21.0	20.4	21.2
정부	7.8	8.2	6.9	3.9
국내총투자율	32.3	31.5	31.3	31.7

자료 : 한국은행

❸ 소비 · 투자

(1) 민간소비[14)]

2020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0% 감소하였다. 그간 민간소비는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020년에는 사상 초유의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역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분기별로도 최초 충격이 발생한 1분기부터 3차 확산이 발생한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원 및 한시적 조세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중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표 2-21〉 민간소비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3.2	2.1	△5.0	△4.8	△4.2	△4.5	△6.6
- 가계소비	3.1	2.1	△5.2	△5.0	△4.3	△4.6	△6.8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5.6	1.5	△1.2	0.8	△1.9	△2.7	△0.9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종민 사무관

부문별로는 국내외 이동제약에 따라 서비스(△8.0%) 및 거주자 국외소비지출(△60.6%) 등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외부 활동과 관련된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10.3%)도 크게 감소하며 민간소비를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내구재는 위기 직후인 '20년 1분기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2분기부터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2-22〉 부문별 가계소비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3.3	2.9	△4.2	△4.3	△3.3	△3.4	△5.7
- 내구재	6.4	2.7	12.2	2.1	20.3	15.7	10.5
- 준내구재	4.7	2.5	△10.3	△16.5	△8.5	△8.5	△7.7
- 비내구재	3.0	3.3	1.1	2.4	0.4	1.7	△0.3
- 서비스	2.6	2.8	△8.0	△6.0	△7.8	△8.0	△10.2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9.6	△6.4	△60.6	△30.5	△72.4	△68.2	△71.7
(공제)비거주자 국내소비	31.6	19.7	△64.1	△25.4	△80.6	△71.9	△73.1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2) 설비투자[15)]

2020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3년만에 증가(7.1%) 전환했다. 운송장비 투자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 장비 위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은 감소(△1.8%)했으나, 민간부문 증가(8.8%)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증가(8.1%) 했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남기인 사무관

〈표 2-2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설비투자	△2.3	△6.6	7.1	7.4	4.5	10.7	6.1
- 기계류	△4.2	△10.2	8.0	4.5	7.3	11.1	9.1
- 운송장비	4.0	4.7	4.7	17.3	△2.4	9.4	△1.1
국내기계수주	3.9	△7.2	8.1	21.0	△0.3	14.9	△0.7
- 공공	13.2	△32.9	△1.8	73.0	100.1	8.4	△58.9
- 민간	3.1	△4.5	8.8	18.6	△4.9	15.1	8.2
기계류 수입	△0.9	△12.2	11.8	5.4	6.6	16.1	19.1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3) 건설투자[16)]

2020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 영향으로 △0.4% 감소했다.

주거용 건물건설은 2015~2017년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기조적 조정흐름이 이어지며 3년 연속 감소(△2.6%)했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으로 감소(△2.5%) 전환 했다. 한편, 토목건설은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증가(4.8%) 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건축을 중심으로 증가(16.4%) 했으며, 건축허가면적도 5년만에 증가(2.1%) 전환했다.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남기인 사무관

〈표 2-24〉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8년	2019년	2020년p				
				1/4	2/4	3/4	4/4
건설투자	△4.6	△1.7	△0.4	4.4	△0.4	△1.5	△2.9
- 주거용건물	△5.3	△9.8	△2.6	△3.1	△6.7	0.1	△0.4
- 비주거용건물	△5.5	2.3	△2.5	3.7	△1.8	△5.2	△4.9
- 토목	△2.7	4.7	4.8	16.7	8.2	1.9	△3.4
건설수주	0.2	7.6	16.4	△1.2	25.1	40.0	8.7
- 건축	△5.0	7.0	29.0	11.3	30.3	63.8	20.0
- 토목	17.3	9.4	△16.1	△30.7	4.1	△11.8	△18.1
건축허가면적	△6.3	△10.4	2.1	△5.1	4.0	12.6	△2.1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국토교통부

④ 수출입 · 경상수지[17)]

(1) 수출입

2020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5,12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6%), 석유제품(△40.6%), 석유화학(△16.4%), 일반기계(△8.9%), 철강(△14.5%), 디스플레이(△12.3%), 무선통신기기 (△6.1%), 선박(△2.0%)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7%), 일본(△11.7%), EU(△9.3%), 아세안 (△6.4%), 중남미(△26.0%), 중동(△16.9%) 등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태경 사무관

〈표 2-25〉 수출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수출액	4,954	5,737	6,049	5,422	5,125	1,302	1,103	1,301	1,419
증감률	△5.9	15.8	5.4	△10.4	△5.5	△1.9	△20.3	△3.5	4.1

자료 : 관세청

2020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4,676억달러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원자재(△18.8%), 소비재(△0.4%)는 감소하였으나 자본재(7.4%) 수입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0.6%)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미국(△7.1%), EU(△0.5), 아세안(△2.4%), 일본(△3.3%), 중동(△37.9%) 등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감소했다.

〈표 2-26〉 수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수입액	4,062	4,785	5,352	5,033	4,676	1,215	1,084	1,141	1,237
증감률	△6.9	17.8	11.9	△6.0	△7.1	△1.9	△15.8	△8.7	△1.7

자료 : 관세청

2020년 무역수지는 499억달러로 2009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37억달러), 아세안(342억달러), 베트남 (286억달러), 미국(166억달러), 홍콩(291억달러), 중남미(74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동(△300억달러), 일본(△209억달러), EU(△76억 달러) 등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표 2-27〉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무역수지	892	952	697	389	499	87	19	160	182

자료 : 관세청

〈표 2-28〉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체	542,232	512,498	△5.5
반도체	93,930	99,177	5.6
일반기계	52,581	47,885	△8.9
자동차	43,036	37,399	△13.1
석유화학	40,691	35,589	△16.4
철강제품	31,043	26,557	△14.5
석유제품	42,567	24,168	△40.6
선박류	20,159	19,749	△2.0
자동차부품	22,535	18,640	△17.3
디스플레이	20,492	17,983	△12.2
컴퓨터	8,540	13,426	57.2
무선통신기기	14,082	13,181	△6.4
섬유류	12,959	11,238	△13.3
가전	6,957	6,989	0.5

자료 : 무역협회

〈표 2-29〉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체	542,232	512,498	△5.5
중국	136,203	132,565	△2.7
아세안	95,086	89,017	△6.4
미국	73,343	74,116	1.1
베트남	48,178	48,511	0.7
EU	52,758	47,870	△9.3
일본	28,420	25,098	△11.7
중남미	26,337	19,501	△26.0
중동	17,661	14,675	△16.9
인도	15,106	11,937	△21.0
CIS	13,609	11,441	△15.9

자료 : 무역협회

〈표 2-30〉 용도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체	503,343	467,633	△7.1
소비재	84,533	84,204	△0.4
원자재	253,953	206,327	△18.8
자본재	164,857	177,102	7.4

자료 : 관세청

〈표 2-31〉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전체	38,890	44,865	5,975
중국	28,974	23,681	△5,293
아세안	38,900	34,187	△4,713
미국	11,465	16,629	5,164
EU	△3,213	△7,647	△4,434
베트남	28,519	28,581	62
홍콩	42,820	29,113	△13,707
일본	△19,161	△20,925	△1,764
중남미	8,213	7,380	△833
중동	△63,761	△30,050	33,711
인도	9,907	9,993	86
CIS	△8,230	△8,249	△19

자료 : 무역협회

(2) 경상수지

2020년 경상수지는 752.8억달러 흑자로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2-32〉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경상수지	774.7	596.8	752.8	129.3	61.1	240.0	322.4
- 상품수지	1,100.9	798.1	819.5	156.3	95.0	262.0	306.1
(수 출)	6,262.7	5,566.7	5,166.0	1,296.2	1,087.8	1,321.0	1,461.0
(수 입)	5,161.8	4,768.6	4,346.6	1,139.9	992.8	1,059.0	1,154.9
- 서비스수지	△293.7	△268.5	△161.9	△60.8	△35.1	△42.6	△23.4
(수 입)	1,036.8	1,038.4	901.1	232.4	201.9	209.2	257.5
(지 급)	1,330.5	1,306.8	1,063.0	293.2	237.0	251.8	280.9
- 본원소득수지	49.0	128.6	120.5	37.0	1.1	30.8	51.7
(수 입)	348.2	413.7	354.0	84.0	89.0	78.1	102.9
(지 급)	299.2	285.2	233.5	47.0	87.9	47.4	51.3
- 이전소득수지	△81.5	△61.5	△25.3	△3.2	0.1	△10.2	△12.0
(수 입)	94.8	104.3	105.9	30.6	29.9	22.5	23.0
(지 급)	176.3	165.8	131.2	33.8	29.8	32.6	35.0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하며 2019년(597억달러)보다 증가한 7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18)]

18) 통관수출입과 경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점,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표 2-33〉 상품수지

(단위 : 억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상품수지	1,100.9	798.1	819.5	156.3	95.0	262.0	306.1
- 수 출(FOB)	6,262.7	5,566.7	5,166.0	1,296.2	1,087.8	1,321.0	1,461.0
〈통관수출〉	6,048.6	5,422.3	5,125.0	1,301.8	1,103.4	1,300.7	1,419.0
- 수 입(FOB)	5,161.8	4,768.6	4,346.6	1,139.9	992.8	1,059.0	1,154.9
〈통관수입〉	5,352.0	4,676.3	4,676.3	1,215.0	1,083.9	1,140.7	1,236.8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운송·여행수지 등이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축소 되었다. (2019: △269억달러 → 2020: △162억달러)

여행수지는 해외여행이 감소하며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운송수지는 운임상승 등 영향으로 흑자로 전환 되었다.

〈표 2-34〉 서비스수지

(단위 : 억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서비스수지	△293.7	△268.5	△161.9	△60.8	△35.1	△42.6	△23.4
- 가 공	△73.2	△76.1	△56.9	△14.7	△12.3	△14.9	△14.9
- 운 송	△25.1	△17.3	21.3	△2.3	1.4	7.2	15.1
- 여 행	△165.7	△118.7	△56.3	△22.5	△8.2	△11.3	△14.3
- 건 설	97.2	67.8	47.7	13.5	10.5	9.3	14.5
- 지재권사용료	△20.6	△21.6	△30.3	△10.3	△5.7	△7.9	△6.5
- 기타사업서비스	△122.1	△123.9	△104.1	△27.7	△24.6	△26.0	△25.8

자료 : 한국은행 ECOS

본원소득수지는 12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9년(129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적자폭이 2019년보다 소폭 축소되었으나,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이전소득수지는 △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62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표 2-35〉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달러)

	2018년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49.0	128.6	120.5	37.0	1.1	30.8	51.7
- 급료및임금	△11.7	△8.5	△6.6	△2.0	△1.3	△1.4	△1.8
- 투자소득	60.8	137.1	127.1	39.0	2.4	32.2	53.5
이전소득수지	△81.5	△61.5	△25.3	△3.2	0.1	△10.2	△12.0

자료 : 한국은행 ECOS

5 고용[19)]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1.8만명 감소하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 등 영향으로 일시휴직자는 80만명을 상회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실업률도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용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1분기는 20만명 후반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분기 이후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며 4분기에는 40만명 이상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정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업에서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조정 등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제조업은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취업자는 30만명대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연령별로는 인구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감소하였다.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이지혜 사무관

〈표 2-36〉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18년	'19년	'20년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9.7	30.1	-21.8	28.8	-40.7	-31.4	-44.1
〈산업별〉							
제조업	-5.6	-8.1	-5.3	0.6	-5.5	-5.7	-10.7
건설업	4.7	-1.5	-0.4	-0.8	-6.1	0.9	4.5
서비스업	5.1	34.8	-21.8	18.8	-35.3	-27.9	-41.8
· 도소매·숙박음식업	-11.7	0.1	-31.9	-12.6	-35.5	-37.6	-41.8
· 전문·과학기술업	0.4	6.0	0.7	2.0	1.2	-0.1	-0.2
· 보건·사회복지업	12.5	16.0	13.0	15.8	12.4	15.2	8.8
· 공공행정	5.2	-3.3	3.6	-1.5	-2.2	5.7	12.2
· 사업시설관리·지원	-6.3	0.1	3.5	4.0	0.3	4.1	5.7
농림어업	6.2	5.5	5.0	9.8	6.0	1.0	3.4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5.0	35.7	-10.8	31.1	-26.2	-15.1	-33.0
· 상용직	34.5	44.4	30.5	58.0	38.1	24.1	1.9
· 임시·일용직	-19.5	-8.7	-41.4	-26.9	-64.4	-39.2	-34.9
비임금근로자	-5.2	-5.6	-11.0	-2.3	-14.5	-16.3	-11.1
· 자영업자	-4.4	-3.2	-7.5	-2.6	-10.3	-10.4	-6.7
· 무급가족종사자	-0.9	-2.4	-3.5	0.3	-4.1	-5.9	-4.4
〈연령별〉							
청년층(15~29세)	-0.3	4.1	-18.3	-7.1	-19.9	-19.5	-26.5
30대	-6.1	-5.3	-16.5	-2.4	-18.4	-22.8	-22.7
40대	-11.7	-16.2	-15.8	-10.3	-18.6	-17.4	-17.0
50대	4.4	9.8	-8.8	1.5	-14.3	-11.1	-11.1
60대 이상	23.4	37.7	37.5	47.1	30.5	39.4	33.2

자료 : 통계청

〈표 2-37〉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18년	'19년	'20년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4,418	4,450	4,479	4,469	4,475	4,481	4,488
경제활동인구	2,790	2,819	2,801	2,791	2,808	2,807	2,800
· 경제활동참가율	63.1	63.3	62.5	62.5	62.7	62.6	62.4
취업자	2,682	2,712	2,690	2,675	2,685	2,707	2,696
· 고용률(15세 이상)	60.7	60.9	60.1	59.9	60.0	60.4	60.0
· 고용률(15~64세)	66.6	66.8	65.9	66.1	65.6	65.9	65.8
실업자	107	106	111	116	123	100	104
· 실업률	3.8	3.8	4.0	4.2	4.4	3.6	3.7
비경제활동인구	1,629	1,632	1,677	1,678	1,668	1,674	1,689

자료 : 통계청

❻ 물가[20)]

2020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5% 상승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 감소, 국제 유가 하락, 복지정책 확대 등 하락 요인과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의 상승 요인이 공존하여 전년(0.4%)의 상승률 수준을 유지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대비 6.7% 상승했다. 코로나 19로 가정 내 식재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역대 최장기간 장마, 온난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해 농산물(6.4%), 축산물(7.3%), 수산물(6.4%) 가격 모두 상승했다.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김선익 사무관

공업제품은 전년대비 0.2%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1.4% 상승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7.3% 하락하며 공업제품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기료는 보합세(△0.0%)를 보이고, 도시가스(△3.5%)가 정부의 요금인하로 인해 하락하며 전년대비 1.4% 하락했고, 집세는 전년대비 0.2%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무상교육 확대 시행, 10월 통신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9%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고교납입금(△60.9%), 휴대전화료(△3.4%) 등이 하락하였다. 개인서비스는 무상급식 확대 실시, 코로나 19에 따른 여행·문화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전년(1.9%)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며 1.2%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학교급식비(△54.4%), 호텔숙박료(△6.1%) 등이 하락했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 측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0.7% 상승했고, 소비자 체감지표 성격을 갖는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전년대비 0.4% 상승했다.

〈표 2-38〉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전년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비자물가	1.9	1.5	0.4	0.5
농축수산물	5.5	3.7	△1.7	6.7
(농산물)	4.6	8.1	△3.0	6.4
(축산물)	6.5	△3.5	0.0	7.3
(수산물)	6.8	3.2	0.1	6.4
공업제품	1.4	1.3	△0.2	△0.2
(가공식품)	0.7	1.3	2.0	1.4
(석유류제품)	7.7	6.8	△5.7	△7.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기·수도·가스	△1.4	△2.9	1.5	△1.4
(전기료)	△6.3	△2.9	0.2	0.0
(도시가스)	3.5	△4.3	3.5	△3.5
집세	1.6	0.6	△0.1	0.2
공공서비스	1.0	0.2	△0.5	△1.9
개인서비스	2.5	2.5	1.9	1.2
(외식)	2.4	3.0	1.9	0.8
(외식 제외)	2.6	2.2	1.8	1.5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1.5	1.2	0.9	0.7
생활물가지수	2.5	1.6	0.2	0.4

자료 : 통계청

7 재정[21)]

2020년 정부 총수입은 2020년 추경 기준(470.7조원)대비 8.1조원 많은 478.8조원이며, 총지출은 추경 기준(554.7조원) 대비 4.8조원 적은 549.9조원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추경 기준(△84.0조원)보다 12.8조원 증가한 7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0조원 적자로 2020년 추경 기준(△118.6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6.6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로 추경 기준(△6.1%) 보다 0.4%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말 기준 43.8%로 추경 기준(43.9%)보다 0.1%p 감소했다.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박준영 사무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 2019년 재정수지와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0.8%와 42.1%로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3.0%, 2019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3.8%이다.

〈표 2-39〉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

(단위 : GDP 대비 %)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OECD평균
재정수지 비율(2019)	0.8	0.5	△6.4	△2.3	△2.9	△3.0
부채 비율(2019)	42.1	92.7	108.5	118.5	223.0	109.9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21.12), 한국은 정부산출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기준

8 금융시장[22)]

(1) 금리동향

2020년 중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지원 및 물가 둔화 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총 두 차례 인하 하였다.(1.25% → 0.75% → 0.50%) 2월까지는 1.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1분기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3월과 5월중 각각 0.50%p와 0.25%p 인하했다.

2020년말 국고채(3년) 금리는 0.976%를 기록하며, 2019년말(1.360%)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3년)는 미중 갈등의 지속, 코로나19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유진 사무관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3년) 금리는 8월 5일 사상 최저치인 0.79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추경 관련 수급경계감, 미 대선을 앞둔 재정확대 기대 등으로 소폭 반등했다.

회사채(3년) 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채권투자 자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9년말 대비 0.27%p 하락했다. (2020년말 2.21%, AA- 기준)

〈표 2-40〉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p, 기말기준)

	2019	2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1.39	1.25	1.26	0.80	0.76	0.49	0.57	0.51	0.55	0.55	0.52	0.60	0..61
CD(91일)	1.53	1.42	1.41	1.10	1.10	0.81	0.79	0.78	0.63	0.63	0.63	0.66	0.66
국고채(3년)	1.36	1.30	1.10	1.07	1.01	0.83	0.84	0.80	0.94	0.85	0.94	0.98	0.98
회사채 (3년, AA-)	1.94	1.90	1.71	2.08	2.22	2.16	2.25	2.18	2.26	2.19	2.25	2.24	2.21
회사채 (3년, BBB-)	8.05	8.01	7.84	8.29	8.46	8.44	8.55	8.52	8.61	8.55	8.62	8.64	8.62
수신금리[1)]	1.60	1.54	1.43	1.27	1.20	1.07	0.89	0.82	0.81	0.88	0.88	0.90	0.90
여신금리[2)]	3.22	3.19	3.08	2.91	2.80	2.82	2.72	2.70	2.63	2.66	2.66	2.71	2.74
장단기금리차[3)]	△0.17	△0.12	△0.31	△0.03	△0.09	0.02	0.05	0.02	0.31	0.22	0.31	0.32	0.32
회사채프리미엄[4)]	0.58	0.60	0.61	1.01	1.21	1.33	1.41	1.38	1.32	1.34	1.31	1.26	1.23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5)]	6.11	6.11	6.13	6.21	6.24	6.28	6.30	6.34	6.35	6.36	6.37	6.40	6.41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

은행 여수신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하 및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했다. 2020년말 수신금리는 0.90%로 전년말 대비 0.70%p 하락했고, 2020년말 여신금리는 2.74%로 전년말 대비 0.48%p 하락했다.

(2) 주식시장 동향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코로나19 지원정책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2019년말 대비 +30.8% 상승한 2,873.5pt로 마감했다. 연초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요국과 더불어 대폭 하락했다. 특히 3월 19일에는 2009년 7월 17일(1,440pt) 이후 가장 낮은 1,458pt를 기록하여 1,500선을 하회하였다. 그러나 3월, 5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 대응정책 및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등으로 하반기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에 따른 바이오주, 방역조치 시행 및 재택근무 활성화에 수혜를 입은 반도체주의 강세로 업종 중 의약품업(+91.1%), 전기전자업(+47.4%)이 코스피의 오름세를 주도했다. 반면 대면활동 감소, 금리 하락세 등으로 섬유·의복업(△11.9%), 은행업(△24.9%) 등은 하락했다.

〈표 2-41〉 주식시장 동향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2,197.7	2,873.5	1,754.6	2,108.3	2,327.9	2,873.5
거래량(일평균, 억주)	4.7	9.0	7.1	9.4	8.8	10.5
코스닥 지수(기말)	669.8	968.4	569.1	738.0	848.2	968.4
거래량(일평균, 억주)	8.3	16.3	12.3	16.0	17.2	20.0

코스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요인의 전개영상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2019년말 대비 44.6% 상승한 968pt로 마감했다.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기술주, 성장주의 약진으로 상승했다.

2019년 순매수세를 보인 외국인 유가증권 주식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으로 금융업, 운수·장비업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이어가며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38.2%에서 36.5%로 △1.7%p 하락했다.

기관 투자자는 지난해와 달리 순매도로 전환하였으나, 개인은 54.1조원을 순매수하였다.

〈표 2-42〉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단위 : 조원, 체결기준)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1.1	△22.2	△14.3	△7.2	△1.8	+1.0
기관합계	+10.2	△34.7	△13.6	△5.9	△11.4	△3.8
개인	△11.0	+54.1	+25.6	+12.3	+13.2	+3.0

(3) 자금흐름

2020년중 은행수신 증감폭은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에 따른 수시입출식 예금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82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정기예금의 경우 LCR 등 금융규제 한시적 유연화 조치에 따른 은행의 예금유치 유인 약화, 예금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과 달리 감소 전환했다.

자산운용사 수신 증감폭은 상반기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 하반기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성향이 제고되면서 전년 대비 56.4조원 감소했다. 특히 채권형 펀드의 경우 채권시장의 신용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감소 전환했다.

〈표 2-43〉 금융기관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은행[1]	106.3	188.4	53.9	54.8	32.1	47.6
(수시입출식[2])	65.9	189.3	44.2	63.4	30.0	51.7
(정기예금)	48.3	△14.4	12.0	△14.3	△5.2	△7.0
(단기시장성[3])	△7.6	△6.5	△0.3	0.0	△4.6	△1.7
(은행채)	△6.9	21.8	1.7	6.1	10.3	3.7
자산운용사	98.6	42.2	9.4	22.8	7.6	2.5
(MMF)	15.2	21.0	15.2	14.9	△0.7	△8.3
(주식형)	2.5	△10.0	△9.8	△4.1	△2.8	6.6
(채권형)	15.7	△0.4	△4.2	△1.0	3.7	1.2
(기타펀드)[4]	68.0	33.4	9.1	13.7	7.2	3.5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2)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3) CD, RP, 표지어음 기준
4)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기업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하락하고 부도업체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44〉 기업자금사정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08	0.06	0.07	0.06	0.04	0.06
부도업체수(개)	414	292	63	71	73	85
기업대출 연체율[1](%)	0.5	0.3	0.5	0.4	0.4	0.3

1) 기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은 2019년 대비 큰 폭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코로나19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초저금리 대출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과 같은 지원 정책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 폭 확대되었다.

〈표 2-45〉 기업자금조달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2019년	2020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1]	44.9	107.4	32.3	45.4	19.4	10.3
(대기업)	△2.4	19.5	13.6	10.6	△0.5	△4.2
(중소기업)	47.3	87.9	18.7	34.8	19.8	14.6
직접금융	20.8	27.1	8.3	7.6	5.7	5.5
(회사채 순발행)[2]	15.8	15.5	2.9	7.8	3.1	1.7
(CP 순발행)[3]	△1.3	0.6	4.7	△1.9	△0.9	△1.3
(주식발행)[4]	6.3	11.0	0.7	1.7	3.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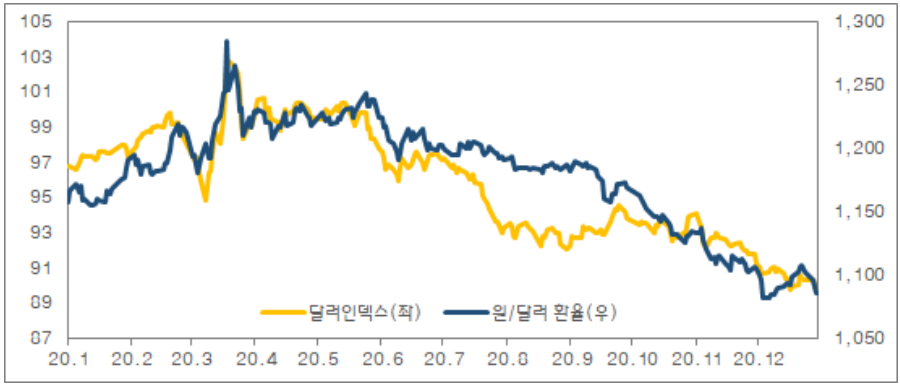
1) 신탁대출 포함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3)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할인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전년에 이어 순발행을 지속하였다. CP의 경우 2019년 순상환에서 회사채·CP 매입·차환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 등으로 발행여건이 개선되며 순발행으로 전환되었다.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은 일부 기업의 기업공개 흥행 등으로 2019년 대비 4.7조원 증가했다.

9 외환시장[23)]

(1) 환율 동향

〈그림 2-6〉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팬데믹 공포에 따른 급격한 달러 강세, 외환수급상 대규모 달러 매수 등 영향으로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90원대(3월 19일, 장중 최고치 1,296.0원)까지 급등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상민 사무관

3월 중순 이후 美·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팬데믹 공포에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달러조달 여건도 급격히 경색되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해외주가 급락으로 증권사의 파생거래(ELS 등) 관련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입)이 발생하면서 외화자금시장 내 단기 외화수요가 급증하며 달러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3월 19일 韓美 통화스왑이 체결되고, 국내 외환규제 완화(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외화 LCR 한시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경감) 등 영향으로 달러 유동성 경색이 다소 해소되었다. 이후, 주요국 통화·재정 완화정책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되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갔으며 환율 변동성도 완화되었다.

9월 이후부터는 글로벌 달러 약세, 국내 수출 호조, 외국인 주식 매수 등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12월에는 1,080원대(12월 7일, 장중 최저치 1,080.9원)까지 하락했다.

〈표 2-46〉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2018	2019	2020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폭(원)	4.1	3.5	5.0	8.0	5.5	2.9	3.7
변동율(%)	0.37	0.30	0.42	0.66	0.45	0.24	0.33

(2) 외환거래 동향

2020년 국내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 기준)는 257.6억달러로 전년(262.2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1~2분기에는 환율 및 외환스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후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표 2-47〉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2018	2019	2020				
				1/4	2/4	3/4	4/4
현 물 환	97.8	92.2	97.3	95.8	100.2	100.1	92.9
(원/달러)	79.6	69.1	74.9	77.1	78.1	73.8	70.8
(원/위안)	18.2	23.1	22.4	18.7	22.1	26.3	22.2
선 물 환	4.7	6.2	6.0	5.9	4.2	6.3	7.5
외환스왑	121.2	138.6	129.9	142.2	131.5	120.9	125.3
기타파생상품	21.3	25.1	24.4	26.6	26.0	24.3	20.7
계	245.0	262.2	257.6	270.5	261.9	251.6	246.4

* 외국환 중개회사 경유 거래 기준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24)]

2020년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31억달러로 전년 대비 343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홍콩, 사우디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으로, 대외 충격을 완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48〉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1998말	2008말	2010말	2012말	2015말	2016말	2017말	2018말	2019말	2020말
485	2,012	2,916	3,270	3,680	3,711	3,893	4,037	4,088	4,431

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유이 서기관

〈표 2-49〉 2020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2,165	6	대 만	5,299
2	일 본	13,947	7	홍 콩	4,918
3	스위스	10,836	8	사우디	4,534
4	러시아	5,958	9	한 국	4,431
5	인도	5,858	10	브라질	3,537

또한, 2020년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약 2.8배, 경상지급액의 약 9.1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외환보유액 적정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 美 정권교체,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외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했다.

(2) 국가신용등급[25)]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가운데, 무디스(Moody's), S&P 및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각국의 경제충격·대응을 국가신용등급에 신속하게 반영했다. 정부는 팬데믹 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신용평가사들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경제 대응, 건실한 경제 기초체력 및 위기 대응 능력 등을 공유했다.

25) 집필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민주 사무관

이동제한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화상회의와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연례협의와 고위급 면담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동향과 정부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관련 정보들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방향·예산안 등 주요 영문 정책자료를 공유하고, 실무급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2020년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112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조정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견조한 기초체력, 우수한 대외건전성,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 우리 경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정부와 각 신용평가사의 연례협의 및 신용평가사 등급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무디스: "Aa2, 안정적"으로 유지

무디스와의 연례협의는 4월중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4월 24일 실시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연례협의였던 만큼, 무디스측은 우리의 방역·경제 대응 동향과 향후 정책기조 등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피해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프로그램 마련,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등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20~'24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5월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양호한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제한적이고, 국내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기초체력과 재정·금융부문 강점은 유지되고 있으면서 제도적 역량은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가 성장을 제약하고 정부의 부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제고시켜 고령화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과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S&P, “AA, 안정적”으로 유지

S&P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팬데믹이 주요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도 2019년 11월에 발표한 지 5개월만인 2020년 4월 21일에 발표했다. S&P는 한국경제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지만, 이러한 충격은 일시적이며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경기부양조치와 경기 부진으로 2020년은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장기간의 재정흑자 흐름이 중단되었지만, 점진적으로 균형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북한 관련 잠재적 안보위협은 한국의 제도적 강점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유연한 환율, 경상수지 흑자 등 건전한 대외지표는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S&P 연례협의는 2020년 10월~11월중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됐다. 기획재정부와는 11월 17일 협의를 통해 한국경제 동향과 성장 전망,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K-방역의 “4T+α” 전략 및 4차례에 걸친 추경, 310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3/4분기 +1.9% 성장률로 전환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도 상승했으나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S&P는 이 연례협의 결과를 2021년 4월 28일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AA, 안정적"으로 유지)에 반영했다.

다. 피치, "AA-, 안정적"으로 유지

피치 연례협의는 한국은행(9월 2일) 및 기획재정부(9월 4일)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로 실시됐다. 피치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동향과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노력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부문별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조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피치는 10월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장기적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효과적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년 성장률은 AA등급의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라고 봤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는 증가하겠으나, 그간 한국은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을 보여줬으며 단기적 재정여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투자·지출의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신용등급을 제약하는 요인이고, 가계부채 규모 지속 증가도 취약요인으로 지적되었으나, 견조한 대외건전성은 외부충격에 대한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3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제3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제1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1 방역대응체계 가동[26)]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전세계적 감염병 재난에 직면하여,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발생 지속 억제 및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에 참여),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투명성(방역정보 신속공개)의 원칙 아래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라는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발생 발표가 있자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2020년 1월 20일 오전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반장: 질병관리본부장)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를 강화했다. 1월 27일 국내에 4명의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코로나19박영대응팀 박칠균 사무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내 검사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환자 유입 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전국 288개 선별진료소가 즉각 운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경찰청· 지자체 등 250여명의 인력이 검역현장에 투입되었다. 1월 31일부터는 1회 검사로 6시간 이내에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Real Time RT-PCR[27])'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해지게 되어 검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2월 18일 대구 소재 종교시설에서 31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대구·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8,000명에 이르는 등 1차 유행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2월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를 가동했다. 개인 필수방역물품인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공급에 충당하는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를 시행했고, 3월 9일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작했다. 2월 말 최초로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28]는 약 1개월 만에 집합금지 등 행정 제재를 동반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대되었고,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거쳐 6월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되었다(사회적

27) RT-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28) 사회적 거리두기(2.29~3.21일)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1~4.19일)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일) → 생활 속 거리두기(5.6~6.28일)

거리두기 1차 개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 4개월간 시행된 후, 11월부터는 5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었는데,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단계를 세분화하고, 시설·활동 위험도별 방역수칙과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것이었다(사회적 거리두기 2차 개편).

하루 9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9일을 정점으로 3월 중순부터는 확진자 발생 추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 기간의 환자 병상부족 경험을 토대로 3월 2일 운영을 개시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를 시작으로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에 설치·운영하고, 3월 4일 운영지침이 마련된 차량이동형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도보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양한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확충해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감염확산을 억제하고자 했다. 3월 중순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에 마련되었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4월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2주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방역 강화대상 국가, 추이 감시 국가, 교류가능 국가 등을 지정해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출항 국가의 위험도 평가에 따른 승선검역을 확대하는 등 항만감역에도 만전을 도모했다. 국경 봉쇄 없이 위험국가 관리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채택한 이 같은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통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해외입국자들의 안전한 입국을 유지하였으며, 우한 교민(1월 31일 등 3차례), 일본 크루즈, 이란 및 스페인 등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수도권 1일 확진자 발생이 100명을 초과한 8월 중순부터 병상 공동대응 체계(3단계)를 본격 가동했다. 일주일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6월 10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6월 28에 마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은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원화하여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당시 적용되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8월 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가 마련된 6월말 이후 처음으로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수도권 긴급대응반·코로나19 수도권 역학조사 지원단 설치 및 수도권 코로나19 현장대응반 가동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8월 중순 이후 2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에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가 8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이에 더해 수도권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 9월 20일까지 유지되었다. 9월 말에 2차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주간의 전국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일)을 거쳐 10월 12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수도권은 2단계 일부조치 유지)했다. 11월 1일 발표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독감 등 동절기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응전략의 일환이었다.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을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9월 하순 이후 100명 내외로 유지되던 일평균 확진자 수가 11월 중순 이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11월 19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격상하였으나, 12월 13일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초과하고, 12월 25일에는 1,241명이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한편,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6월 말부터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 끝에, 12월 31일에 모더나社의 백신 4천만 회분 선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억 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❷ 마스크 수급불안 대응[29)]

'20. 2월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마스크 시장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했다. 특히 2월 중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절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게[30)]되었고 마스크 확보가 최우선 국가·사회적 과제로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마스크 수급의 신속한 개선을 목표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급 + 공급 + 소비' 全영역에 걸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3.5일 발표)을 마련하여 ①국내 마스크 공급 및 생산 확대, ②마스크 수요의 합리적 관리, ③매점매석 등 반시장적 조치의 억제 등을 추진했다.

첫째, 국내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제정(2.12일)하여 수출 금지[31)], 공적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진숙 사무관(행안부 파견)
30) 마스크 가격(온라인): (1.10일)927원 → (2.21일)3,750원 → (2.25일)4,250원
마스크 품절률(약국·마트) : (2.6일)28.4% → (2.21일)56.5% → (2.25일)82.9%

마스크 출고 명령[32]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인허가를 신속히 하고 단가인상[33] 및 마스크 비축 확대 등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했다.

둘째,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1인당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시행(3.9일)하였으며, 대구·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등 필수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정책물량을 배분하여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시 보완조치[34]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관합동 마스크 상황반」을 운영하여 매일 국내 마스크 수급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매점매석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2.5일)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12월)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매점매석시 물수·추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1인당 구매제한량[35]을 2매에서 10매로 점차 확대한 후 7.12일 이후에는 구매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급불안이 빠르게 해소됐다. 또한 공적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에 힘입어 마스크 가격도 빠르게 정상화되어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다.

---

31) 수출제한 : 생산량의 10% 허용(2.26~3.5) → 원칙적 금지(3.6~5.31)
32) 출고명령 : 생산량의 50% 공적판매처 출고(2.26~3.5) → 80% 출고(3.6~5.31)
33)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 및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
34) 예 : 고령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등
35) 1인당 구매제한 : (3.2주~4.4주)2매 (4.5주~6.2주)3매 (6.3주~7.2주)10매

제2절 비상경제체계 구축 및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1 비상경제체계 회의체 운영[36)]

(1) 비상경제회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19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 19 관련 즉각적 시장대응 및 신속한 애로 해소, 적기 의사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기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했으며,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제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했다.

1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논의한데 이어 3차 회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5차 회의 「일자리 위기극복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등이 2020년 9월 10일 제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어 논의되었다.

한편, 4월 이후 코로나 초기부터 긴급선제적인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비상경제회의 체제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2단계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본격적 경제방역을 실시했다.

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류성열 사무관

〈표 3-1〉 비상경제회의 주요 내용

일시/회차	주요 논의 안건
3.19 / 제1차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 금융안정 패키 프로그램
3.24 / 제2차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30 / 제3차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4.8 / 제4차	•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 수출활력 제고방안 • 스타트업, 벤처지원방안
4.22 / 제5차	• 일자리 위기극복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 비상경제 중대본 운영방안
6.1 / 제6차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14 / 제7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9.10 / 제8차	•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추석 민생안정 대책

(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운영

정부는 2020년 4월 29일 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를 통해 기존의 경제장관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확대 개편한 비상경제 중대본 체제를 가동했다. 비상경제 중대본을 통해 정부는 국내외 경제흐름과 리스크 요인 사전 점검 및 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 및 추가적 보완, 위기극복 추가 대책 발굴 및 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 및 브리핑 등을 실행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거시·산업·금융·고용대응반을 통해 분야별 동향/흐름/이슈/현장 애로 등을 정례 점검/보고하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고용·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논의, 추진했다.

〈표 3-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일시/회차	주요 논의 안건
4.29 / 제1차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5.7 / 제2차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5.14 / 제3차	•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5.20 / 제4차	•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5.28 / 제5차	•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안)
6.11 / 제6차	•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6.19 / 제7차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6.25 / 제8차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7.2 / 제9차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7.10 / 제10차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23 / 제11차	• '20.2/4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7.30 / 제12차	•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13 / 제13차	•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8.20 / 제14차	•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
8.27 / 제15차	•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점검 및 대응방안 •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9.17 / 제16차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9.28 / 제17차	•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 추진계획
10.16 / 제18차	• 최근 고용·소비 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방안
11.12 / 제19차	•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11.19 / 제20차	•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11.26 / 제21차	•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12.7 / 제22차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2021년 경제정책방향(안) • 2020 크리스마스마켓 추진계획
12.23 / 제23차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12.29 / 제24차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❷ 추경예산 편성 및 재정 조기집행 및 이·불용 최소화[37)]

20년 1월말부터 국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고, 방역·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민생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59년만의 4차례 추경 등 총 66.9조원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추진했다.

(1) 1차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추경 당시 코로나19 발생 1달여만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상황이었다. 또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의 조기회복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11.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1차 추경 규모 중 세출확대는 8.5조원, 세입경정은 3.2조원이며, 중점 투자방향으로 ①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②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③ 민생·고용안정 ④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설정하였다.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안준영 사무관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김지수 주무관

규모	11.7조원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

중점 투자방향		
	1 감염병 검역 · 진단 ·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 고도화	2.1조원
	❶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0.2
	❷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1.9
	2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회복 지원	4.1조원
	❶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3.1
	❷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0.6
	❸ 코로나19 피해점포 · 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0.4
	3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5조원
	❶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2.9
	❷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0.6
	4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1.2조원
	❶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0.2
	❷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0.2
	❸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0.8

(2)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민생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12.2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2차 추경은 全 국민을 대상으로 약 2,274만 가구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2.2조원 중 3.4조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그 외 8.8조원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되었다. 지출구조조정은 주로 ①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② 공무원 연가보상비, 청사신축 등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사업 ③ 금리 및 유가하락과 연동된 이자비용·유류비 등을 감액하였다.

(3) 3차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코로나 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총력지원하였다. 3차 추경 규모 중 세출확대는 23.7조원, 세입경정은 11.4조원이며, 중점 투자방향으로 ①방역체계 보강·고도화, ②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③ 민생·고용안정 ④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설정하였다.

규모	35.1조원 (세출확대 23.7조원 + 세입경정 11.4조원)	
중점 투자방향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❶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❷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2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❶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9
	❷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1
	3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7조원*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 간 중복 약 1.8조원	
	■ 고용 · 사회안전망 확충	10.0
	❶ 고용유지 · 직접일자리 · 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9.1
	❷ 저소득층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9
	■ 경기보강 패키지	10.0
	❶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2
	❷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4
	❸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4.8

(4) 4차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4분기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반면, 소상공인 매출감소·고용불안·저소득층 생계곤란·육아부담 등 민생의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4차 추경예산안을 7.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4차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고용안정·생계지원·돌봄의‘4대 패키지 프로그램’지원이다.

규모	7.8조원	
중점 투자방향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
	❶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3.3
	❷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0.5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❶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
	❷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❸ 실직자 지원	0.3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❶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❷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	0.03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
	❶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❷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❸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❹ 목적예비비	0.1

(5) 재정 조기집행

2020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반도체경기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0%, 하반기 2.2%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이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총 305.5조원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2.0%(189.6조원)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생활SOC 사업은 중점관리 분야로 별도 선정하여, 집행실적 중점관리를 실시했다.

경제 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지출원인행위 등을 2020 회계연도 개시 전인 2019년말 추진했다.

〈표 3-3〉 2020년 상반기 집행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연간 계획 (A)	상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		계획 대비 달성도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C-B)	비율 (C/B)	(C/A) -(B/A)
□ 합 계	305.5	189.6	62.0	203.3	66.5	13.6	107.2	4.5
○ 중앙부처	261.4	164.6	63.0	175.6	67.2	10.9	106.7	4.2
• 예 산	210.9	134.1	63.6	140.9	66.8	6.7	105.0	3.2
• 기 금	50.5	30.5	60.4	34.7	68.7	4.2	113.8	8.3
○ 공공기관	44.1	25.0	56.7	27.7	62.8	2.7	110.7	6.1

관리대상사업 상반기 집행실적은 66.5%(203.3조원)로 목표를 4.5%p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 △0.9% 중 정부 성장기여도는 1.0%p를 기록했다.

(6)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보강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이월 및 불용 규모 최소화를 위한 집행 관리를 실시했다. 선제적으로 부처별 이월 및 불용 요소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된 정부의 예산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불용률은 1.4%로 1%대를 달성했다.

〈표 3-4〉 연도별 불용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08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불용액	5.6	5.5	5.7	17.5	10.8	11.0	7.1	8.6	7.9	6.6
(불용률)	(2.4)	(2.1)	(2.7)	(5.5)	(3.2)	(3.2)	(2.0)	(2.3)	(1.9)	(1.4)

* 불용률: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❸ 위기극복을 위한 통화정책[38)]

1) 기준금리 인하

2020년 한국은행은 전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연중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75%p 인하(1.25→0.5%)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1~2월 중 코로나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 기준금리를 0.5%p 인하(1.25→0.75%)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0.75→0.5%)했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정책의 파급효과 관찰 필요성 등 때문이다.

---

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이재헌 사무관

2) 유동성 공급 확대

2020년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기업 등의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중 유동성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첫째, 국고채 단순 매입이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하고, 9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조원 규모로 국고채를 매입함으로써 2020년 중 국고채 누적 매입 규모는 총 11조원에 달했다.

둘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2020년 3월 중 한국은행은 총 3.5조원에 달하는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를 매입했다. 4월부터는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를 도입하여 매주 1회 정례 RP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도록 했으며, RP매매 대상기관을 확대(5→16개사)하고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시킴으로써 7월까지 총 19.43조원 규모의 매입을 실시했다.

셋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이다. 2020년 4월 금통위 임시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 발행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의 대출 공급을 내용으로 한다. 동 제도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39]했다.

39) 최초 '20.8월에서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된 끝에 '21.2월 종료

3)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등 필요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세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총 18조원 증액(25→43조원)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등을 위하여 3월 17일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했다.(0.5~0.75→0.25%)

한도 증액을 반영한 2020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43조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 한도유보분 16.1조원으로 구분된다.

〈표 3-5〉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2020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연 %)

프로그램		한도		금리
		조정전	조정후	
무역금융지원		2.5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6.5	5.5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	13.0	0.25
	소상공인 지원	-	3.0	0.25
	기타	0.1	0.1	0.25
합계		25.0	43.0	-

자료: 한국은행

4)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일명 SPV를 설립하였다.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중앙은행(한은)-정책금융기관(산은)이 공조한 모델로,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SPV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2020년 7월 14일 총 10조원 규모로 계획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의 SPV 출자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의 선순위 대출 8조원으로 구성되어, 정부·한은·산은이 각각 1:1:8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영되었다.

2020년 12월 24일에는 SPV의 매입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21.1.13일→7.13일)하는 한편,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채(AA등급) 매입비중을 낮추고(30→25%) 비우량채(BBB등급 이하) 비중을 확대(70→75%)했다.

5) 평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방지 및 금융시장 불안 진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각종 유동성 공급조치, 금융중개지원대출 및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간 위기대응협업의 결과물인 SPV 설립 등은 바람직한 선례로 자리 잡아 향후 우리나라에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시 발 빠른 극복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3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❶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기업 자금 지원[40)]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총 89.9조원을 지원(2020년말)하는 등 전례없이 과감한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또한, 총 31차례의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41)]를 통해 관계기관 간 금융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표 3-6〉「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단위: 조원)

구분		목표[42)]	실적[3)]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16.4	14.8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10.0	3.5
	▪ 소상공인·중기 특례·전액 보증	12.9	16.3
	▪ 캠코 신용회복 지원	2.0	0
2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7.9	6.9
	▪ 정책금융기관 대출 확대	21.2	26.0
3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증권사 유동성 지원	5.0	10.5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	6.1	2.2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지원	20.0	2.5
	▪ 코로나 피해 P-CBO	11.7	3.6

4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심승미 사무관
41) 금융위 개최, 기재부·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은행·정책금융기관 등 참여

구분	목표[42]	실적[3]
4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40.0	0.3
5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0.7	0.3
6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20.0	3.0
합계	183.8	89.9

(1)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총 34.6조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차,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79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18.3조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특히, 1차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출시 2개월만에 대부분(약 76%)이 소진될 만큼 빠르게 집행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신보·기보·지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목표치(12.9조원)를 초과한 16.3조원 (집행률 126.4%)의 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1차 프로그램) 전체 소상공인을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1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20.4월)
  *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1~3등급)·기은(4~6등급)·소진공(7등급 이하)이 분담 지원

- (2차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소진,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20.5월)
  * 한도증액(1천→2천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1차 프로그램 旣수급자의 중복신청 허용) 등 프로그램 개편('20.9월)

42) 2020년 12월 31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치(29.1조원)를 초과하여 총 32.9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2020년 4월부터는 全금융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당초에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속 등으로 시행기간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했으며, 2020년말 기준으로 총 160조원(81만건) 규모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표 3-7〉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프로그램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지원 대상	지원 기관/프로그램	목표	실적
중소기업 중견기업 (필요시 대기업 포함)	•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5.0	3.6
	•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10.0	14.9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6.2	7.5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5.4	5.4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2.5	1.5
	합계	29.1	32.9

이러한 금융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2020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은 2019년(210개사) 대비 △53개사가 감소(157개사)하였으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43]도 2019년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43)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 [중소법인] '19년말 0.57% → '20년말 0.48%
[개인사업자] '19년말 0.29% → '20년말 0.21%

(2) 기업 자금조달 애로 경감 지원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P-CBO,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도입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 협업을 통해 SPV를 설립하고, 2020년말까지 비우량채 1.9조원을 포함한 총 2.5조원의 회사채·CP를 매입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P-CBO 발행(3.6조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0.2조원),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2.0조원) 등을 통해 총 5.8조원의 회사채·CP 발행을 지원했다.

한편, 경제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설립하여 항공사,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을 지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 발표 (‘20.4월)	산업은행 법령 개정 (5월)	기금 발족 (5월말)	기간산업 기업 지원 * 항공사 2개사, 3,321억원 지원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가동 * 88건, 2,659억원 지원

이외에도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도입,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를 위해 정부-지자체-완성차업체-정책금융기관 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했다.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44]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며 시장 전반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4) 회사채 스프레드(3y, AA-, bp): (’19말)42.0 (’20.6.1,高)78.0 (‘20말)41.8

❷ 금융시장 안정 유지[45)]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래, 전세계적 봉쇄조치 강화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제심리가 위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증권과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46)]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크게 '증권사 유동성 지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영', '증권시장 안정펀드 운영'의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했다.

(1)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통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단기 자금시장 불안 완화를 통해 증권금융과 한국은행을 통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대책 발표 당일에 즉각적으로 2.5조원의 RP를 매수하여 증권업계에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컸던 2020년 3월 당시 5.6조원을 지원하여 시장심리 안정에 기여했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 당초 5.0조원 목표치를 초과한 총 10.5조원을 지원, 210%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2)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및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목표 규모 총 20조원의 펀드를 가동했다.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

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유진 사무관
46) KOSPI 지수(pt) : ('19말)2,198 ('20.1말)2,119 (2말)1,987 (3말)1,755
신용 스프레드(3y, AA-, 민평, bp) - 국고채(3년)) : ('20.1말)41.8 (2말)40.9 (3말)60.7

등을 감안, 가동 당시 캐피탈 콜 규모는 3조원이었다.

‘20.12월말 기준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원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통해 우량채 시장을 우선 안정시켜 과도한 불안심리를 차단했으며, 연이어 비우량채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여 채권시장 전반에 시장안정 효과를 확산시켰다.[47]

(3) 증권시장 안정펀드 운영

주식시장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원 등)이 0.7조원을 우선 조성하고,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가 10조원을 조성하여, 총 목표 규모 10.7조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2020년 3월 24일 발표하였다.

대책 발표 이틀 뒤인 3월 26일부터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신속히 가동함으로써, 주식시장 반등의 계기[48]를 마련하고 투자심리의 안정[49]을 유도했다. 다만, 펀드 조성 이후 증시의 빠른 반등으로 최초로 조성된 1.2조원이 실제 증시에 투자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불안심리의 전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금융부문으로의 위기전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이에 ‘20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안정화되며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었다.

---

47) 신용 스프레드(3y, AA-(우량), 민평, bp): (’20.3말)60.7 (6말)72.7 (9말)59.0 (‘20말)41.8
(3y, A-(비우량), 민평, bp): (’20.3말)150.1 (6말)166.5 (9말)162.8 (‘20말)145.9
48) KOSPI 지수(pt): (‘20.3.19.)1458 (3말)1,755 (4말)1,948 (5말)2,030 (6말)2,108
49) 한국 CDS 프리미엄(bp): (’20.3말)38 (4말)34 (5말)28 (6말)27

제4절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보강

1 내수 회복지원[50)]

민간소비가 우리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2월 중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3~7월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15~40% → 30~80%) 하는 등 소비 유인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5월중에는 가계소득 확충, 코로나발 경영·고용위축에 따른 민생피해 최소화,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하였다.

6.1일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른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3차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하여,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할인율 상향(5→10%), 피해업종 대상 8대 소비쿠폰(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농수산물, 외식, 체육) 도입,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사업(10%) 등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고안하였다. 또한, 하반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200~300만원 → 230~300만원) 하는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종민 사무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김문수 사무관

인센티브 제고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위축된 상반기 소비를 진작시키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6.26일~7.12일)을 최초로 개최했다.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유통업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1일~11.15일)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전년동기 대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대한민국 동행세일: 4.6%↑, 코리아세일페스타 6.3%↑)및 유통·제조업계 매출·판매 확대 등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었다.

〈표 3-8〉 '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매출

구분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백화점	매출 4.0%↑	매출 5.4%↑
대형마트	매출 감소폭 축소 (5월△9.7%→△1.4%)	매출 1.4%↑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 10.7%↑	일평균 방문객 30%, 매출 25.5%↑
자동차	판매량 20.5%↑	일평균 판매량 31.9%↑
가전	으뜸효율가전 매출 8.5%↑	주요 2개社 매출 39.5%↑
패션·의류	코리아패션마켓 기간 매출 약 60%↑	지난 코리아패션마켓 대비 매출 4배 이상↑

❷ 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51]

(1) 투자활성화

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 수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빠른 경제회복 및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강화해 왔다.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로 구성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기업·민간 투자 관련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은 즉각 해소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도 개선했다.

기업투자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총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투자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발굴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집행목표 5조원을 달성하고, 10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발굴했다. 그 과정에서 그린스마트 스쿨 등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해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했다. 또한, 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자 중심 행정을 추진했다.

---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주해인 사무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심민준 사무관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계획대로 추진해,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1.0조원 집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를 두 차례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집행 노력을 강화했다. 또한, 10차례 이상의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시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투자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밖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했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종전 10개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1개로 과감히 통합하여 단순화했다. 투자시 공제되는 자산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투자 공제율을 우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이 제한되어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의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했다.

우선,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해 범부처·민관합동의 전방위적 수출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20.2.20)을 논의하여, 단기적인 수출 현장애로 해소와 함께 중장기적인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기업의 단기적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추가 공급하고, 수출이행자금 우대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집중 지원했다.

아울러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인의 해외출장 등 기업 활동을 위한 국가·국경간 이동을 적극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접수 및 전세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인의 출입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먼저,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20.8.13)을 마련했다. 수출 유망 6대 K-서비스(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를 선정하고, 분야별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전용 무역금융 지원 강화 및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방식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무역 2조불 및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3대 공공 B2B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온라인 상설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비대면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화상상담 및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기반 마련[52)]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2월, 3월,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9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월)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지원을 실시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반영하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업체 등 총 251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현금지원을 통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6.4조원의 금융지원도 병행하였다. 1차로 16.4조원 규모의 1.5% 초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후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지속 등을 적극 고려하여

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한필 사무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금융절벽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2) 소상공인 부담완화 지원

임대료, 이자비용, 사회보험료·공과금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우선,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민간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를 추진했다.

민간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18.1만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 수준(1인당 평균 262만원 인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재산가액의 3→1%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코로나로 시설폐쇄·휴업시 사용료 면제, 임대료 최대 6개월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7~10→5%) 등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소유재산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전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대출차주의 이자비용 및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유예를 허용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20.3~8월 6개월간 30% 보험료를 직접 감면하고, 소득하위 50%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20.3

~5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 30% 감면도 병행·실시했다.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를 허용, 6개월간 분할납부를 실시했다. 전기요금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 6개월간('20.4~9월) 50% 감면도 실시했다.

(3)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수요 보강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20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추경예산 +1.5조원), 지역사랑상품권 9조원 (추경예산 +6조원) 발행 지원 및 숙박, 관광, 공연, 전시, 체육 등 소비쿠폰을 통해 피해가 집중된 전통시장·음식점·숙박시설 등 대면서비스 업종 매출회복도 측면지원 했다. 아울러 전반적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20.4~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인상했다.

(4)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2백만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원활한 폐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5백만원) 지급,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신사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재창업을 유도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등 신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 체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우수제품은 1인 미디어 플롯폼(가치삽시다 플랫폼) 및 민간의 온라인 채널 입점 등 총 4.8만여개 사업체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서 스마트상점의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시스템을 보급했으며, 스마트 기술개발과 스마트 서비스 혁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4 고용충격 최소화[53)]

2020년 초반 고용시장은 2019년부터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한국 고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었다. 미국, 유럽 등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지역에서 이미 실물경제 충격과 그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관찰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실업률은 2020년 3월 4.4%에서 4월 14.7%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첫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한국 고용시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3월 계절조정취업자수가 전월대비 67.6만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종과 쉽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에서 타격이 컸으며, 이들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고용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영향이 컸던 고용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지원하였다. 이와

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변재만 사무관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송재열 사무관

동시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고용충격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휴직 등 고용유지를 통해 완충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휴업·휴직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본예산(약 351억원) 대비 약 75배 확대(약 2.65조원)하였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최대 90%(대기업은 2/3)까지 상향(~'20.9월)하고, 지원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기인 1분기 이후부터 2020년 전반에 걸쳐 민간의 고용유지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임금 감소와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먼저 자금을 대부하고 이후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등을 신설하여 다각적인 고용유지지원방안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을 일시 상향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히 업황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에 직면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근로자 대부 등 고용유지 관련 제도에서 우대지원을 받게 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업황이 어려운 업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98년 외환위기시와 같은 대규모 사업체의 부도 및 폐업에 잇따르는 대량실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이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일자리를 적극 지원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10만명),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 청년 디지털일자리(+6.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명)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고용안정특별대책(4월)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속 공급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하였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 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총 2차례(1차: '20.6월~9월, 2차: '20.9월~12월)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근로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고용안전망에 포괄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의 결과, 한국은 2020년 전년대비 실업률 상승폭(0.2%p)을 미국(4.4%p), 독일(0.6%p) 등 주요 해외선진국의 실업률 상승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일부 고용취약계층의 복귀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산업 성장, 재택근무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 및 근로환경에 근로자들이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1 부동산 안정화 노력[54)]

2020년 주택가격은 2019년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12.16 대책(2019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기대로 인한 상승세가 확산되며 2020년 6월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신규지정(2020. 6. 17.) 이후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과열현상도 발생했다.

〈표 3-9〉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단위 : %, 만건)

		2019	2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가격	전국	△0.36	5.36	0.28	0.34	0.54	0.27	0.14	0.41	0.61	0.47	0.42	0.32	0.54	0.90
	수도권	0.45	6.49	0.39	0.51	0.93	0.51	0.25	0.49	0.81	0.52	0.43	0.30	0.49	0.66
	지방	△1.09	4.34	0.17	0.18	0.19	0.05	0.03	0.33	0.44	0.43	0.41	0.34	0.58	1.12
거래량	전국	80.5	127.9	10.1	11.5	10.9	7.4	8.3	13.9	14.1	8.5	8.2	9.3	11.7	14.0
	수도권	39.9	64.3	5.5	6.6	6.5	3.7	4.0	7.6	7.6	4.3	3.8	4.2	4.1	6.3
	지방	40.6	63.6	4.6	4.9	4.4	3.7	4.3	6.3	6.6	4.2	4.4	5.1	7.6	7.7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박영우 사무관

주택거래량은 2019년 대비 전국기준 약47.4만호 증가한 127.9만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2019년 39.9만건에서 2020년 64.3만건으로 증가, 지방은 2019년 40.6만건에서 2020년 63.6만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전년도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기준 4.61% 상승하여 2019년(1.26% 하락)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전환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한 해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표 3-10〉 주택전세가격상승률(전기비)

(단위 : %)

		2019	20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세가격	전국	△1.26	4.61	0.28	0.21	0.19	0.11	0.09	0.26	0.32	0.44	0.53	0.47	0.66	0.97
	수도권	△0.76	5.59	0.39	0.32	0.27	0.18	0.15	0.35	0.42	0.54	0.65	0.56	0.74	0.89
	지방	△1.72	3.71	0.17	0.11	0.12	0.04	0.04	0.18	0.24	0.34	0.41	0.39	0.58	1.03

자료 :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020년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 하에서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 요인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서울 연간아파트 가격 상승세(+3.11%)가 전년수준을 넘어섰고,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전년 수준을 크게(+30.7%) 상회했다. 특히, 비규제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 등 국지적 과열 현상 등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 먼저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서 투기차단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세율(0.6~3.2% → 1.2~6.0%)을 인상했고 양도세(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취득세율(다주택자·법인 해당. 1.0~4.0% → 8.0%(2주택), 12%(3주택이상, 법인)) 역시 인상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주거복지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제정했다. 임대차신고제의 근거를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의 경우 버팀목대출을 도입하여 0.03%p의 금리 우대를 제공했다. 월세 대출의 경우, 0.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등 대출지원을 강화했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특공 물량을 확대(20 → 25%)배정하고 사전분양 물량을 증가(0.9 → 3만 호)시켰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심내 군부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규공공택지로 지정하고 3.3만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심 주택 용적률을 상향하여 2.4만호의 주택 추가 공급을 가능토록 했다. 11월 19일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22년까지 전세형주택 11.4만 호(전국 4.9, 수도권 2.4만 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6월 17일에 가격불안세 지속되던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 20일에 경기 김포시, 부산 수영·동래·연제·남구 및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데 이어 12월 18일에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지역,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 광주 전지역,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표 3-11〉 '20년 부동산 관련 주요대책 내용

대 책	세 제	대 출	규제지역 등
'20년, **6.17 대책**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법인 대상 세제 강화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10→20%p)	√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 투기지역·투과지구는 1년내,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 규제지역 6개월내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과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 지정 * 투과지구 : 경기·인천·대전 일부 * 조정대상 : 경기 전역, 대전, 청주 √ 잠실 MICE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과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 全 주택
'20년, **7.10 대책**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0.6~3.2% → 1.2~6.0% √ 단기보유 양도세 강화 (1년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2주택)기본세율 + 20%p (3주택)기본세율 + 30%p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인상 * 1~4% → 8%(2주택) 또는 12%(3주택 이상, 법인)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100% 1.5~3억(수도권4억) 50%	√ LTV·DTI 10%p 우대 요건 완화 * 연소득 7천(생초8천) 이하 → 연소득 8천(생초9천) 이하 √ 잔금대출 규제 보완 * 무주택자 등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지정 前 규제 적용 √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버팀목대출(전세) 30bp, 월세대출 50bp 인하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폐지 √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 국민주택 20→25% * 소득요건 완화 √ 사전분양 물량 확대 (0.9만호 → 3만호 이상) √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공급 확대방안 마련

대 책	세 제	대 출	규제지역 등
	신규택지개발(5.7만호)	**공공정비사업**(7.0만호)	**도시규제 완화 등**(0.5만호)
'20년, **8.4 공급대책** **부총리**,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 **신규택지 24곳, 3.3만호** √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사업 고밀화, 2.4만호** * 3기 신도시 용적 상향 2만호, 서울의료원 및 용산정비창 고밀화 0.4만호 √ **사전청약제 6만호 분양** ('21.3분기)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통해 **서울에 5만호 공급** - √ **정비해제구역** 등에서도 **공공재개발 추진, 2만호 공급** * 흑석2구역 등 1차 선정('21.1) 상계3구역 등 2차 선정('21.3)	√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연내 시범단지, 0.3만호** √ **민간**이 **오피스·상가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 0.2만호** * 공공(LH·SH)에 지원 → 민간사업자에게도 리모델링 비용 융자지원 등 √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공공임대 입주요건 완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50% 이하
	공공임대 공실 활용(3.9만호)	**공공 전세주택** (1.8만호)	**신축매입, 비주택 리모델링**(5.7만호)
'20년, **11.19 대책** **부총리**,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공급」	√ **'21년 상반기까지 3.9만호** * 기존입주자 대상 2만호 공급 완료('20.12) * 신규 입주자 모집 후 1.9만호 순차 입주 중	√ **무주택실수요자, 1.8만호** 공공전세: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보증금 거주 가능 * 근거지침 마련('20.12), '21.6부터 입주자 모집	√ **신축매입, 4.5만호** * 4.5만호 매입공고 개시, 3월 중 첫 매입약정 체결(1,500호) √ **비주택리모델링, 1.2만호** * 선도모델(안암 청년주택) 개소('20.12), 호텔매입 추진

❷ 가계부채 관리 강화[55]

(1) 가계부채 동향

2020년말 가계신용 규모는 1,727.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0% 증가했다. 2017년「가계부채 종합대책」등 관리 노력으로 2017~20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56]되었다.

2020년 중 가계대출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수요 및 저금리 하 주식, 부동산 등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10.7%)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던 비은행 가계대출[57]도 2020년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표 3-12〉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2019	2020			
	4/4	1/4	2/4	3/4	4/4
가계신용 잔액	1,600.6	1,611.4	1,637.3	1,681.8	1,727.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2)	(4.6)	(5.1)	(6.9)	(8.0)
- 가계대출 잔액	1,504.9	1,522.2	1,546.0	1,585.7	1,632.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0)	(4.8)	(5.3)	(7.0)	(8.4)
- 판매신용 잔액	95.7	89.3	91.2	96.1	95.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6.3)	(1.3)	(2.8)	(5.5)	(0.2)

자료 : 한국은행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심승미 사무관
56)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비) : ('17)8.1 ('18)5.9 ('19)4.2 ('20)8.0
57)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 : ('20.1/4)△1.2 (2/4)△0.6 (3/4)2.1 (4/4)4.2

(2) 가계부채 관리 주요 내용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소득증가→부채축소" 선순환 유도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차주 부실화 및 자산시장으로 쏠림 등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등 유례 없는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그간의 관행적인 총량 규제에서 탈피하여 가계부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했다. 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당초계획(7.2조원) 대비 +1.7조원 확대하여 총 8.9조원을 공급했다. 특히, 저신용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youth를 출시(2020년 1월)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로 가계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대상으로 다층적인 신용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58]」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동 방안의 신청기한을 당초 2020년말에서 6개월 연장('20.11월)하여 위기극복 지원을 지속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3]〉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까지 확대 및 원금 상환유예 지원 → 단일채무자 연체 방지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상환유예·원금감면)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 방지·재기 지원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2조원 규모) 신설 → 과잉추심 방지

58) 2020.4.8.일, 4차 비상경제회의

2) 자산시장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코로나19 위기로 크게 확대된 유동성이 주택 등 자산시장 투기 수요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산버블 가능성 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 등 부동산부문 대출 규제를 지속 강화[59]했으며,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초점을 맞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20.11월)」을 마련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내용〉

①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 지도,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예: 연소득 2배 초과)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②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차주단위 DSR(은행 40% /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③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신용대출 총액 1억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內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대출 회수

한편, 정부의 지원조치 등으로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연체율[60]이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2019년말 2.12배에서 2020년말 2.21배로 상승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013년말 15.9%에서 2020년 말 50.0%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8.7%에서 54.2%로 상승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되었다.

---

59) ('19.12.16) 고가주택 주담대 LTV 강화 및 DSR 차주단위 적용, 실수요요건 강화 등 ('20.2.20)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LTV 강화(60%→9억 이하 50%, 9억초과 30%) 등 ('20.6.17) 규제지역 주담대 실수요요건 강화(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등

60)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18말)0.26 ('19말)0.26 ('20말)0.20

제4장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제4장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제1절 디지털 뉴딜[6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해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로나 이후 post-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뉴딜이 수립·추진되었다.

디지털뉴딜은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20년 3차 추경을 통해 2.4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 개방 · 활용, 1 · 2 · 3차 全산업 5G · AI 융합 확산, 5G ·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D(데이터).N(네트워크). A(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과제를 추진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개방, 5G 국가망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비대면 맞춤행정 및 5G·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공공행정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였다.

61) 집필자 :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 허지수 사무관

교육 부문에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휴교실 등을 제외한 초중고 학교 교실 약 38만실에 WiFi 구축을 착수하고,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선정하여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일반국민 등이 온라인으로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매치업 과정 등을 확대하였다.

의료·근무·직업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원격 중환자실, 감염관리 등 3개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사업의 착수 및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의료 SW(닥터앤서 1.0)로 난치성 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 실증을 진행하였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공장 2만개를 보급하여 스마트 제조 저변을 크게 확대하였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만 개사에 온라인 판로 지원하였다.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실현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과 디지털트윈의 범용 기반이 되는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선도 사업을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108개 도시에 보급하였다.

한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뉴딜펀드 조성 추진하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을 담은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하였고, 산업계·금융계 의견을 수렴하여 펀드 투자대상 선별·자산운용 등에 활용하기 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제2절 그린뉴딜[62)]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은 단순히 단기적 경기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력한 경기부양을 추진하되, 그 방향성은 '기후·생태위기 해결'까지 아우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재건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그린뉴딜'을 주요한 축으로 포함했다.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의미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혁을 감행하되, 그 방향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를 선도하는 저탄소·친환경 '선도형 경제'의 모델이 되겠다는 것이 그린뉴딜에 담긴 구상이다.

'20년부터 '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대 방향과 8대 프로젝트에 국비 총 42.7조원(총 사업비 73.4조원)을 투입하여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린뉴딜의 첫 해인 '20년에는 앞으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해나가기 위한 기반 구축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분야에서는 1만여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834동의 어린이집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5만 호와 공공건축물 5,500동으로 사업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 한상윤 사무관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는 '20년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를 초과 달성(목표 4.2GW, 실적 4.8GW)하였고, 전기충전기 6.4만기, 수소 충전소를 70기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작업에 주력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5년까지 42.7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보급해 수송 분야의 저탄소화를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산단 7개소를 구축하고 스마트생태공장 11개소와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소를 선정·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2020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2월에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21년에는 그 후속조치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의 장기 방향성이 구체화된 만큼 그린뉴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반영하여 외연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확대된 그린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목표를 더 상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3절 안전망 강화[63)]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고용 충격은 임시·일용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여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은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자의 디지털 적응력 강화도 요구되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을 강화하였다. 2020년 12월에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다. 우선, 예술인 고용보험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어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이 2020년 6월 제정되었다. 또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사업 확대 등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휴먼뉴딜팀 이용우 사무관

창업과 재기를 지원하고, 산업재해로 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약 17.6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폐지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사람투자를 위해서는 인재양성, 디지털 배움터 등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확대, 키우리(KIURI) 연구단 추가 선정, 권역별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충 등을 추진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을 위해 생물소재·포스트플라스틱 분야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해 K 디지털 트레이닝 등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운영해 전자 상거래, 모바일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

제4절 지역균형 뉴딜[64)]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경제혁신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 균형발전이 긴요함에 따라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20.10.13)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47%인 75.3조원이 지역균형뉴딜에 투자되며,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앙·지방의 협업체계인 '지역균형뉴딜 분과' 신설('20.10.29)과 시도 뉴딜추진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표 4-1〉 지역균형뉴딜 유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용	주요정책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지방비 매칭사업 등)	•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 고려 • 규제자유특구·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 기존 지역정책과 연계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 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 공공기관 선도사업 및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협업과제 발굴·추진

자료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21.10.13)

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실무지원단 박효영 서기관

향후, 한국판 뉴딜과 기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선의의 경쟁·협업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5장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제5장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제1절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65)]

1 개관

2020년에는 창업-투자-성장-회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벤처창업 열기가 지속했다. 특히, 2019년에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추진성과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성과

2020년 창업기업 수(148.4만개), 신규 기술창업 수(22.9만개)와 법인창업(12.3만개) 모두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벤처기업 수도 2019년보다 6.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인 39,511개를 기록했다.

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류한솔 사무관

〈표 5-1〉 연도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동향

(단위: 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규창업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 기술창업	190,674	198,911	212,237	220,607	228,949
- 법인창업	96,625	97,549	102,372	109,520	123,305
벤처기업 수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등

벤처기업 고용(72.4만명)과 평균 고용인력(19.6명)도 2019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의 버팀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벤처투자 부문에서 특히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바, 신규벤처투자(4.3조원), 신규벤처펀드 결성금(6.6조원)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기업(75개)도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벤처투자 회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바, 코스닥시장 IPO 기업 86개 중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은 55개로 63.9%를 차지하였다. 유니콘 기업 수는 2020년에 무신사, 야놀자, 쏘카 3개가 추가되면서 13개를 기록하였으며, CB insights 등재기준으로는 11개를 기록하며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표 5-2〉 벤처투자 및 유니콘 관련 통계

(단위: 억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규 벤처투자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신규벤처펀드 결성금	37,793	45,881	48,470	42,433	65,676
100억원 이상 투자 유기 기업	20	29	54	70	75
코스닥 IPO 기업 중 VC 투자기업	36	40	47	53	55
국내 유니콘 기업 수	2	3	6	10	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등

❸ 주요정책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2020년 9월에 기술창업을 저해하는 20가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11월에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하여 R&D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벤처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2020년 4월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벤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총 2.2조원 규모의 융자·투자 자금을 추가공급하고, 신속 집행하는 방안 등을 담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6월, 일자리 창출과 성장 가능성이 큰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6년(2020~2025년) 간 6조원 이상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벤처투자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혁신적인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2020년 7월, 대기업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 조치로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2020년 11월에는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스케일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유망스타트업 200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증프로그램 확대, 최대 200억원을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 도입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진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수출 대행 서비스,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의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을 추진했고, 2020년 10월에는 대기업·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4 향후 계획

창업실적, 벤처투자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제2벤처 붐의 성과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비대면·BIG3·그린뉴딜 등 유망·혁신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지주기업의 제한적 CVC 보유 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관련 입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실리콘밸리식 금융 제도 등 혁신적인 벤처 제도 도입을 지속할 계획이다.

스케일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단계별로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풍부하게 유입된 벤처투자가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 구주 매각 등 다양한 벤처 회수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제2절 산업 고도화

1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66)]

(1)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했다.

먼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산단을 적극 조성했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 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항만 산업의 경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을 추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 차량·선박과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주력산업의 생태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 구체적으로 `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보급 및 `25년까지 LNG·수소추진선 140척 시장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태웅 서기관

마지막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유망품목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서비스를 융합한 신상품 R&D와 공공실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했다.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특히,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3대 품목(불화수소·EUV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및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이루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양산에 성공했으며,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일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아울러, 100대 품목은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투자유치·대규모 설비투자·M&A 등 국내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금융지원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원스탑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다음으로, 소부장 산업 생태계 내 기업 및 산·학·연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조성되었다. 수요·공급기업 및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진행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 금융, 규제특례 등 협력모델의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소재혁신선도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소재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로 개발하고, 연구기간 내 기술이전을 추진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하여, 협력 생태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소부장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 정책 컨트롤 타워로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연내 3회(제3·4·5차) 개최하여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아울러, `01년에 제정된 「부품소재특별법」의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만에 전면개정하여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정비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20.1)하고, `20년 2.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역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지속 발굴과 '소부장1.0' 및 '소부장2.0' 대책의 차질없는 점검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❷ 서비스산업 혁신 제도 기반 구축[67]

2020년 1월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대면·다중이용 중심의 서비스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여 피해가 집중[68]되었다. 2020년은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 지원에 중점 노력하면서, 동시에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 한 해였다.

2020년 1월부터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관련 대책에는 관광·공연·면세·영화·스포츠·전시업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서비스 분야의 피해 경감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무담보특별융자 도입, 융자원금 상환유예, 피해업체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고용유지지원금, 각종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이 추진되었다.

〈표 5-3〉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종 긴급 지원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도입, 관광기금 융자 상환 유예,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호텔등급 평가 유예 등
항공	LCC 대상 운영자금 긴급융자 및 각종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착륙료 증가분 감면,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 확대 등
공연	기초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 기초공연 제작비 지원, 관람객 관람료 지원 등
외식	외식업체 대상 운영자원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외식업체 방역물품 지원,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
전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경감 등

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박정주 사무관
68) 서비스업 생산('20, 전년비, %): (총지수)△2.0 (도소매)△2.5 (운수)△14.2 (음식숙박)△18.5 (교육)△4.7 (예술·스포츠·여가)△32.6 (개인 등)△8.2 (금융)14.0 (부동산)5.5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했다. 2020년 1월,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대응하여 체계적·종합적인 서비스산업 혁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로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발족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TF(팀장: 기재부 1차관)는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7개 작업반[69]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업반별로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으로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통해 논의·추진된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新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①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② 농어촌 유휴자원 활용 공유숙박, ③ 산림관광 등 3개 우선 적용과제를 선정하고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상생안 도출을 추진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원천이지만 주요국 대비 부족한 서비스 R&D 혁신을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향후 5년간('21~'25년) 약 7조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비스 R&D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R&D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 및 업종이 디지털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마련하여,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 스마트 상점 보급·확산 등을

69) (기능별 작업반) 총괄·규제혁신반, 생산성 혁신반, 인프라 조성반
(업종별 작업반) 관광·콘텐츠반, 교통·물류반, 핀테크반, 사회서비스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스케일업 기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여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디지털 금융종합 혁신방안」 등도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19년 16위)을 목표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도 마련·발표했다. 제조-서비스 융합, ICT활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플랫폼 서비스 급성장 등 최근 서비스 무역 트렌드 분석에 기반 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6대 K-서비스[70]를 도출했으며, ① 기업애로해소, ② 경쟁력 제고, ③ 인프라 보강의 3대 지원체계 혁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추가로, 코로나 확산 등 최근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71]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시계의 추진전략 및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3 규제 혁신 가속화[72]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新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0대 규제개선 TF」(단장: 기재부 1차관)를 발족하여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작지만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

70) (문화) 콘텐츠, (보건) 의료·헬스케어, (교육) 에듀테크, (ICT) 디지털 서비스
(금융) 핀테크, (기술) 엔지니어링
71) 코로나 19확산,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서비스교역 확대 등
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심정민 사무관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고 성과를 확산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10대 규제개선 TF」는 민간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표 5-4〉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5개 영역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산업	제조혁신	서비스산업
10대 분야	①데이터·AI	③의료신기술	⑤핀테크	⑦산업단지	⑨관광
	②미래차·모빌리티	④헬스케어	⑥기술창업	⑧자원순환	⑩전자상거래·물류

이후 분야별 작업반을 가동하여 산업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표 5-5〉 10대 규제개선 TF 주요 성과

대책명	주요 내용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 ('20.4월)	• ①민감정보 활용범위 명확화, ②친환경차 안전검사 기준 마련, ③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등 로드맵 과제 65건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0.5월)	• ①관광숙박업 분류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②공유숙박 제도화, ③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 등 9건
핀테크·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20.8월)	• ①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허용, ②통신 · 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등 27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Ⅱ) ('20.9월)	• ①화학물질업체 정기검사 추가유예, ②신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진입장벽 제거, ③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등 43건

대책명	주요 내용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방안 ('20.12월)	• ①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보완, ②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절차 간소화, ③바이오산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부담 완화 등 5건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20.12월)	• ①데이터 기본법제 마련, ②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③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기준 마련/건강보험 적용개선 등 30건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기업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2020년 6월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Ⅶ」을 발표했다. 노동·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진입규제 및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제단체와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특별연장근로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 부담 완화 등 현장규제 11건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73],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 기존 제도를 정비·확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정 미비·모호 등으로 신기술·신산업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실증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입증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규제법령 정비 지연 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① 법령정비 지연 시 자동연장 규정, ② 필요시 실증특례→임시허가 전환 규정, ③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제 등을 반영한 「샌드박스 5법」[74]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209건을 승인하여 누적 404건의 승인사례를 창출했다.

73)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74)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표 5-6〉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현황('19 · '20년)

구분	계	혁신금융	산업융합	ICT융합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계	404	135	102	86	65	16
'19년	195	77	39	40	39	-
'20년	209	58	63	46	26	16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존치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 완화하는 제도이다. 2019년 제도 도입 후 2020년에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등 144개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를 보급했다. 공공기관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설치 완료했다.

제6장

포용국가 기반 확충

제6장

포용국가 기반 확충

제1절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1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마련[75)]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자 160만명에게 10.9조원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했다.

최근 IT 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화·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도 보다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 방식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이면서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배달 서비스 제공자로 일하는 등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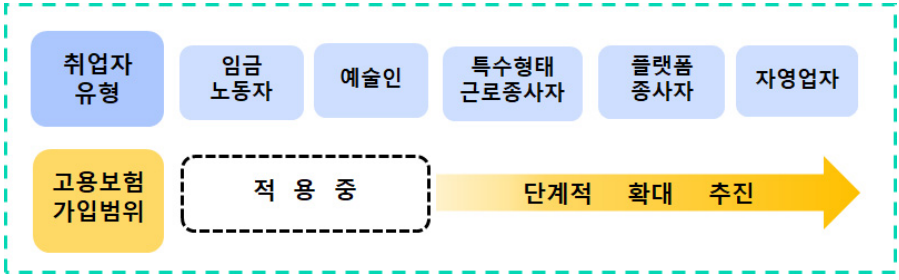
그런데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는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7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김윤 사무관

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은 기존 고용안전망의 범위에 포섭되지 못한 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고정된 사업장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틀을 넘어 '일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고용보험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고 동 로드맵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보호의 시급성과 제도 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중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들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직종들의 노무제공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주·종사자단체·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2년 1월부터 실시된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년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하고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련 플랫폼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22년 7월부터는 앞서 두 단계에서 제외된 기타 특고 직종과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관련 실태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영업제한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21년 상반기부터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22년중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별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와 사회보험제도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행정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 편의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대상자의 가입 누락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❷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지원[76)]

(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성 강화

1)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정부는 그간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해온 내일배움카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자 · 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이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다.('20.1.1.)

이를 통해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업자, 재직자, 특고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에 더해 카드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한도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을 확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생애에 걸쳐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K-Digital 훈련사업 실시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K-Digital 훈련사업(Training)을 처음으로 도입했다('20.7.14). 인공지능 (AI)·빅데이터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7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이보영 사무관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9월에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교육과정 운영 역량이 있는 우수대학과 전문대, 민간혁신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43개의 훈련제공 기관이 선정되었고, 훈련생 모집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2009년부터 정부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왔다. 그러나 정부 예산 사정에 따른 지원규모 변화나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약으로 구직활동기간 중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9년 3월 5일 사회적 합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근거 법률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마련되었다. ’20년 5월 20일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됨으로써,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구직촉진수당(6개월×50만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21년 1월 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개별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여가부-지자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20.12.30). 고용부의 고용센터가 중심이 되어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역 수요에 맞는 구인기업 및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고용센터, 새일센터, 일자리센터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는 등 기관간 긴밀한 협력하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포용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77]

정부는 그간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소득, 의료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78]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다만, 꾸준한 복지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과 함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상상황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1 저소득·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생계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동 제도의 수급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요건이 있어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79]한 바 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지은 사무관, 박꽃보라 사무관, 이나연 주무관
78)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16) 0.355 ('17) 0.354 ('18) 0.345 ('19) 0.339
소득5분위 배율: ('16) 6.98 ('17) 6.96 ('18) 6.54 ('19) 6.25
79) ('17.10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9.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는 2017년 158만명에서 2020년 213만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7.14일)하면서 사회안전망 분야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8월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여 1·2인 가구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원도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그간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기존 월 최대 20만원→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해 왔으며,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80]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승했다. 장애인연금 또한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최대 20만원→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했으며, 최대 지급액 대상 확대도 추진[81]하고 있다.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기존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2020년에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에도 노인·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긴급지원 방안들도 신속히 이루어졌다.

---

80) 기초연금: ('19) 소득하위 20% → ('20) 소득하위 20~40% → ('21) 소득하위 40~70%
81) 장애인연금: ('19) 생계·의료 → ('20) 주거·교육·차상위 → ('21) 차상위~소득하위 70%

먼저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했다. 긴급복지는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2020년 긴급복지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019년 11.2→2020년 23.3만 가구)하면서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어려움 완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의 조치도 실시했다.

❷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저소득 노인의 빈곤완화와 건강 증진,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82] 해 왔으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10만개 추가 확대한 74만개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 비대면 전환 및 조기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공백, 사회활동 위축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보육·돌봄, 건강 등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82) 노인일자리 : ('17) 44만개 → ('18) 51만개 → ('19) 64만개 → ('20) 74만개

창출[83]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민디지털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권역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총 10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보육·돌봄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분야뿐 아니라 안전·환경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신규 발굴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저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해소를 위한 종사자의 임금인상, 휴게시간 확보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도 지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과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일자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3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안전망 강화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지만 비급여 항목이었던 여성생식기 초음파(2월~), 안과 초음파(9월~)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감염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계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천억원 경감하였으며, 약 3,700만명의 국민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인 경우 3개월분(3~5월) 보험료의 50%를 감면하고,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30%를 감면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83) 사회서비스일자리: (`17) 1.5만개 → (`18) 4.1만개 → (`19) 9.3만개 → (`20) 9.3만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하위 50%까지 보험료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업무와 관련없이 아프더라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20년에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부상,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을 통해 2021년부터 연구용역,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7.28일)을 체결하면서 상병수당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제3절 공정경제와 상생협력[84)]

1 개관

정부는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 투자자,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64개(세부과제 기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86개 과제를 추가해,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국정과제 47개 포함 122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갑을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대폭 확대되었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했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도 확충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먼저,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 관계가 고착화된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을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보완하고 감시·

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서지현 사무관, 배민우 사무관

감독을 강화해,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하도급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었다. 대금지급 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활용실적이 '17년 9.8조원에서 '20년 43.4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다. 또, 상생결제 실적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정부의 노력으로 상생결제 금액이 '17년 93.6조원에서 '20년 119.8조원으로 약 28% 증가하였다.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활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된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소상공인은 통상 거래관계에서 을이 되므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2020년 3월에 가맹점·대리점 등 소상공인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지침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또, 2020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폐업 부담은 완화하는 등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고, 그 결과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2020년 12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상법이 개정되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의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므로 앞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되도록 규정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가 확대되었다.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현재 지분율 3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계열사에 한해 15%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 20%→30%, 비상장 40%→50%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금융복합기업감독법이 개정되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이 강화되었다. 금융그룹내 위험관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금융위원회 보고·공시하도록 하였다.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現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9년말 관계부처 합동 상생대책을 마련했다. 동 대책을 바탕으로 2020년 자발적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거래관행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상생활동을 독려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자상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2020년 역대 최대규모인 2,572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생결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그 외에도 2020년 국내외 대기업과 혁신기업 간 협업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개방형 상생혁신을 촉진하였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해외동반진출, 구매조건부 R&D 등 대·중소기업 상생형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 법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수탁업체가 2020년 1,836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법 위반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도 2018년 3건에서 2020년 13건으로 확대하였다. 또,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였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갱신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을 추진하였다.

제4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85)]

1 개관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년),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2018년)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그간 마련한 대책의 이행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집중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 바이소셜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도 기울였다.

2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목표인 4,275억원을 크게 상회한 5,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대출 심사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을 마련·공개하고, '사회적금융 한눈에'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는 등 사회적금융 핵심 인프라도 구축했다.

판로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을 88개소로 확대하는 등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쇼핑몰 'e-store 36.5'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35개사의 신규입점을 지원했다. 6월에는 '온라인기획전'을 개최

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강유신 사무관

하여, 457개 기업이 참여하고, 총 15.9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11월에는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사회적경제 특판장'도 운영했다.

사회적경제분야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4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선도대학 31개교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했다. 초·중·고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교원(장) 1,000명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했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 3개소, 혁신타운 3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민과 함께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공동 취득하여 활용하는 지역자산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9년 2개소에서 2020년 11개소로 크게 확대했다.

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사회적경제기업이 새로운 사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사회서비스 등 유망 진출분야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역할 확대를 지원했다.

그린뉴딜 추진과 녹색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7.22)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업사이클 센터(9개소)를 소셜벤처 육성거점으로 활용하여 업사이클 소셜벤처가 2019년 67개사에서 2020년 86개사로 증가했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건강관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2.28)을 수립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사업 지원을 2019년 7개에서 2020년 10개로 확대하고, 6개 지자체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4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사회적경제의 인지도 및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2020년 사회적경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기업가·전문가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를 추진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3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차년도로 연기하고, '2020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대통령 서면 축사, 정부 포상자 공적스토리, 온라인 기획전 등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했다.

또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바이소셜(Buy-Social)'을 7월부터 국내에 도입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가치소비를 적극 독려했다. 그 결과, 바이소셜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수가 2020년말 기준 14만명을 달성했다.

제7장

선제적 미래 대비

제7장

선제적 미래 대비

제1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86)]

1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영향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이하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년수는 프랑스가 143년, 미국이 88년 등을 기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5년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더 큰 변화와 충격이 전망된다. 2019년 3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정점)에서 '67년에는 4,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김형구 사무관, 인구경제과 김범석 사무관

〈표 7-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만명, 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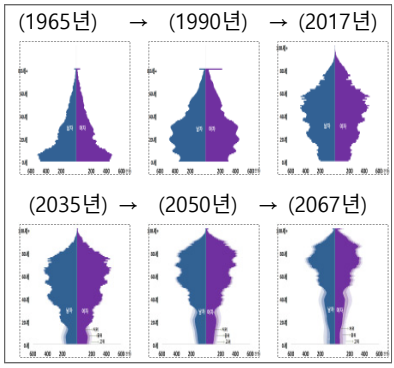
	'90	'95	'00	'05	'10	'15	'16	'17	'18	'19
총인구수	4,287	4,509	4,701	4,818	4,955	5,101	5,122	5,136	5,161	5,171
합계출산율	1.57	1.63	1.48	1.09	1.23	1.24	1.17	1.05	0.98	0.92
노년부양비	7.4	8.3	10.1	12.5	14.8	17.5	18.0	18.8	19.6	20.4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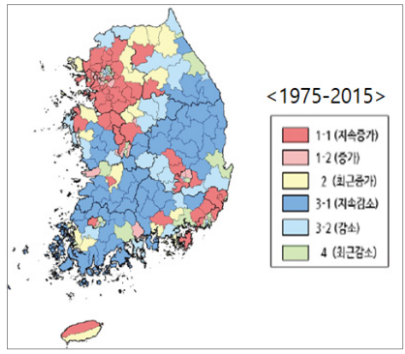
이러한 인구감소는 내수 위축,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고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등 국내시장 전반이 축소되고, 특히 유소년·청년층 대상 산업은 연령 순서대로 규모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력공급이 줄어 향후 10년간 경제 전반의 신규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38.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고, 부양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등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확충과 질적 측면에서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시급해지고 있다.

한편, 고령층의 비중증가로 지역·제도·산업 등 사회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고령화 등으로 지역공동화 위험이 증가하면서 빈집 등 유휴자원이 증가하고, 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 관련 교통, 복지, 주거, 금융 등 제도개선·인프라 확충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고령층 중심의 새로운 소비수요 급증으로 요양·돌봄 건강관리, 여가·문화 등 고령친화산업 성장 기회는 확대되었다. 이에 지역·제도·산업 등을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7-1〉 인구 피라미드 영향



〈그림 7-2〉 지역별 인구변화



❷ 그간의 대응

정부는 '19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계기로 인구구조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년 4월부터 범정부 「제1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4개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둘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 공동화 선제대응을 위한 교육·국방·지역행정 시스템 효율화, 셋째, 복지지출 및 노인 복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 넷째,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산업, 국토, 금융분야의 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❸ 제2기 인구정책 TF 운영

1기 TF 운영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미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에 필요하지만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도 존재한다.

인구구조는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주제인 만큼, 지속적인 신규과제 발굴과 기존 정책의 보완·개선이 중요하다. 따라서, '20년 1월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고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1기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의 구체화를 추진했다. 대책은 총 4개 전략, 11개의 과제로 구성되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❹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인적자원의 양적 보완을 위해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육아·가사부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예술인·특고 대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제출 했고, 각 부처에 분산된 경력단절 여성전문인력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청년의 경우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활동 및 진로탐색 참여를 촉진했다. 이미 발표된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조기 집행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구직포기 청년층의 현황 파악 지표를 개발하고, 주민센터·지방 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효율적 노동시장 조성 차원에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22년까지 도입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추진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22년까지 고령자 고용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진행 후 동 논의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을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인력유형별 맞춤형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확대, 과학기술분야 인재 비자 혜택 강화, 이공계 학부 졸업 유학생의 비전문인력 자격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부족 지역의 필요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가칭)이주민 사회통합 TF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 노동생산성 제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양적 측면에서의 대응은 앞서 언급한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대응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을 높이고, 양자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전 공동 대담 개최 등을 통해 평생교육-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부터 상호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업예산분야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협약반, 미래 신산업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규모화·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자 관점에서 평생교육·직업훈련 포털을 통합하고, 비대면 교육·훈련 과정 육성, 평생학습 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6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늘어나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 대비 교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실태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도하고, 개별 기관이 관리중인 데이터를 통합한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미거주 농어촌 빈집의 숙박업 활용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빈집정비 촉진을 위해서는 LH가 비축사업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빈집정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인력 유입 및 활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ICT를 활용한 농업 생산·유통방식 다변화,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온라인농산물 거래소(양파·마늘)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층 대상 심층교육 및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경영이양 직불금 도입 및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등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도 구축한다. 철도 승강설비 확충·정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속도 기준 하향 조정 등 교통제도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7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금융·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고령친화산업진흥위를 구성·운영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R&D·사업화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주택·등 분야별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 강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 상한을 5세 내외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통해 고령층 차별·불완전 판매·금융사기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 등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20년 3차 계획(’16~‘20)이 만료됨에 따라 4차 계획을 마련했다. 4차 계획은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응하여 근본적 사회 혁신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여성(부부)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5대 시그니처 과제」를 마련하여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반전을 도모했다.

「5대 시그니처 과제」에는 첫째, 생후 12개월 내 부부 공동 휴직시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의 육아 유직 급여를 지급해 부부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했다. 둘째, 영아수당을 신설해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다른 지원 체계를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셋째, 임신바우처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꾸러미를 신설해 출산시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넷째,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씩 지어 ’25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예정이다. 다섯째,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다저녀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을 2.75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제2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87)]

1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형성 및 시장 창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확대됐고, '장기저탄소배출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월)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도 가속화됐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 추진경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대통령 주재 범부처 전략회의(11.27일), 당정협의(12.7일) 등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마련한 산물이다. 또한, 2차례의 녹실회의(11.3, 25일)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검토, 탄소중립 추진체계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쟁점을 조정했고, 4차례의 관계부처 회의(10.20일, 11월 16, 19일, 12월 3일)에서 추진전략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하여 대외 발표(12.7일)했다.

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김민진 사무관, 이창형 사무관

❷ 2050 탄소중립 전략 주요내용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뒀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가장 먼저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이다. 이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등의 대책을 포함한다.

다음 과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포함된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의 추진'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 과제는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의 조성을 의미하는 '수송 분야 저탄소화'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 과제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뿐 아니라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하려 한다.

(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정책방향은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첫 번째 과제는 '저탄소 신유망산업의 육성'이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과제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는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이다. 이 기업들을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고, 2021년 기준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확대하여 혁신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 과제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철강산업 분야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재생자원 이용 목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마지막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전환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첫 번째 과제는 '취약 산업 및 계층 보호'이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으로,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점을 고려해서,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려 한다.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마지막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이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4)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이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하려 한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R&D의 중요성 감안해서,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려 한다.

❸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1) 추진체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2) 향후계획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국가계획 반영 등 정책과제를 질서 있게 추진하려 한다. 또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저탄소배출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최대한 빨리 상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제3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대비[88)]

1 추진배경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양극화 확대, GVC 재편 등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범정부 TF 및 경제분야 TF를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전략의 구체화를 추진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가 출범(4.8일)했다. 총괄분과 회의(총 5회)를 통해 4대 분야 정책과제[89)]를 마련해서, 국정현안조정회의(7.2일)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산업분야 TF를 구성해서, 2차례 TF 회의(4.23일, 6.10일), 실무 TF회의(5.12일), 작업반[90)] 회의(수시)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했다. 이후 주요과제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일), 한국판 뉴딜(7.14일) 등에 반영했다.

---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김민진 사무관, 이창형 사무관
89) 4대 분야 : 경제·산업, 사회·문화·공공, 보건·방역, 국제관계·안보
90) 작업반 : 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산업, 국토·교통, 과학·IT, 대외경제 등 7개 작업반

제8장

2021년 예산

제8장

2021년 예산

제1절 2021년 예산 편성[91)]

1 2021년 예산의 모습

(1) 2021년 재정총량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21년 나라전체 총수입은 2020년 예산보다 0.2% 증가한 482.6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예산수입은 2020년 예산 대비 △2.6% 감소한 311.6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한 282.7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86.9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4.7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20년 대비 5.6% 증가한 171.0조원으로 예상되었다.

9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안준영 사무관

〈표 8-1〉 2021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수 입	481.8	470.7	482.6	0.2	2.5
○ 예 산	319.9	308.8	311.6	△2.6	0.9
- 일반회계	295.9	284.8	286.9	△3.0	0.7
- 특별회계	24.0	24.0	24.7	2.9	2.9
○ 기 금	161.9	161.9	171.0	5.6	5.6

2021년 총지출은 2020년 예산 대비 8.9% 증가한 558.0조원이다. 코로나 완전극복과 포용적 회복을 지원하고,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예산지출은 375.0조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6.8%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 증가한 314.8조원, 특별회계는 9.3% 증가한 60.2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의 증가에 따라 2020년 계획 대비 13.5% 증가한 182.9조원 수준이다.

〈표 8-2〉 2021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A	(C-B)/B
총 지 출	512.3	554.7	558.0	8.9	7.8
○ 예 산	351.1	377.5	375.0	6.8	△0.5
- 일반회계	296.0	323.5	314.8	6.4	△2.7
- 특별회계	55.1	54.0	60.2	9.3	11.5
- 기 금	161.1	177.3	182.9	13.5	3.2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7% 수준(△75.4조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GDP 대비 △5.6% (△112.5조원) 적자로 예상되었다. 이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코로나 취약계층 피해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례의 추경 등을 포함하여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을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는 '지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8-3〉 재정수지

(단위 : 조원, %, %p)

구 분	2020년		2021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Ⅰ) (GDP 대비, %, %p)	△30.5 (△1.5)	△84.0 (△4.4)	△75.4 (△3.7)	△105.9 (△2.2)	△159.4 (0.7)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1.0	34.6	37.1	△3.9	2.5
○ 관리재정수지(Ⅰ-Ⅱ) (GDP 대비, %, %p)	△71.5 (△3.6)	△118.6 (△6.1)	△112.5 (△5.6)	△41.0 (△2.0)	6.1 (0.5)

2021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이다. 2021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956.0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3.2% 수준인 603.8조원이며, 나머지 36.8% 수준인 352.2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표 8-4〉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ㅇ 국가채무 (GDP대비, %)	723.2 (37.7)	805.2 (39.8)	956.0 (47.3)
① 적자성 채무	407.6	476.6	603.8
• 일반회계 적자보전	334.7	397.0	532.2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2.9	79.6	71.6
② 금융성 채무	315.6	328.6	352.2
• 외환시장 안정용	247.2	260.7	264.2
• 서민주거 안정용 등	68.5	67.9	87.9

* 2019년, 2020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 2021년 예산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2021년 예산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0.7%로 가장 증가율이 높고, 이후 환경 분야 17.8%, SOC 분야가 14.2% 순이다.

〈표 8-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본예산(A)	본예산(B)	(B-A)	%
총 지 출	512.3	558.0	45.7	8.9
1. 보건 · 복지 · 고용(일자리)	180.5 (25.5)	199.7 (30.1)	19.2 (4.6)	10.6 (18.2)
2.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6 (55.4)	71.2 (53.2)	△1.4 (△2.2)	△1.9 (△4.0)
3. 문화 · 체육 · 관광	8.0	8.5	0.5	6.3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본예산(A)	본예산(B)	(B-A)	%
4. 환 경	9.0	10.6	1.6	17.8
5. R&D	24.2	27.4	3.2	13.2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3.7	28.6	4.9	20.7
7. SOC	23.2	26.5	3.3	14.2
8. 농림 · 수산 · 식품	21.5	22.7	1.2	5.6
9. 국 방	50.2	52.8	2.6	5.2
10. 외교 · 통일	5.5	5.7	0.2	3.6
11. 공공질서 · 안전	20.8	22.3	1.5	7.2
12. 일반 · 지방행정(지방교부세)	79.0 (52.2)	84.7 (51.8)	5.7 (△0.4)	7.2 (△0.8)

❷ 2021년 중점 추진과제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20년 3차 추경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을 4.8조원 편성한 상황이었다. '21년에는 디지털·그린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에 21.0조원을 투자하여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였다.

첫째, 디지털 뉴딜에 7.6조원을 투자하였다. 데이터 댐,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 등에 5.2조원을 지원하여 D.N.A. 생태계 강화에 힘썼다. 의료·돌봄·근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 0.5조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시·산단·물류체계 등 SOC의

디지털화를 위한 소요 1.8조원도 반영하였다.

둘째, 그린 뉴딜에는 8.0조원을 투자하였다.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해 2.5조원을 투자했다. 또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을 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그린 모빌리티 공급 사업 등에 4.3조원을 편성하였으며, R&D·금융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5.4조원을 투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4.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사람투자를 위한 소요 0.7조원도 반영하였다.

(2)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던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조기회복과 반등 모멘텀의 공고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였다.

첫째,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8.9조원을 투자하였다. 근로자 78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확대했다. 청년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내일채움공제 지원 및 중장년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6만개 등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도 103만개를 제공했다.

둘째, 소비활력·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각각 2.1조원, 1.1조원을 투자했다.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4+4 바우처· 쿠폰 지급에

0.5조원을 지원하여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유도하였다. 지역상권회복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하였고(1.8조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시범실시 소요 0.2조원도 반영했다.

셋째, 민간·공공 투자 확충을 위해 65.9조원을 투자했다. 민간 투자 확충을 위해서는 7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재정소요 33.0조원), 벤처·창업 인프라 및 유턴기업·외투기업 맞춤형 사업들을 지원 등 총 38.7조원을 집중 투자했다. 공공투자 확충에는 도로·철도·공항 등 SOC 디지털화를 추진, 국가기간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기반시설 안전·재해 예방 투자 등에 총 26.5조원을 지원했다.

넷째, 국가 균형발전 본격 투자를 위해 16.1조원을 투자했다.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0.7조원을 지원하여 설계·착공 및 R&D 실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생활 SOC에도 전년보다 확대된 11.0조원을 지원하여 지역발전투자를 본격 추진하였다.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 5개소, 청년자립마을 12개소 추가 등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적극지원 하였으며, 지방채인수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도 충분히 보강하였다.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유망 신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D.N.A, BIG3, 그린 산업 등 핵심사업의 R&D 및 생태계 확산에 집중 투자하였다.

첫째, R&D·인재·금융·조달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29.9조원을 투자했다. 우선 핵심·원천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27.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특히 소부장·BIG3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를 집중하였다. 또한 혁신모험자금 6.9조원 공급(재정소요 1.9조원)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금융·조달 지원도 강화했다.

둘째,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에 7.1조원을 투자했다. D.N.A 분야는 3.1조원을 투자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全주기 생태계를 강화하였고,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 AI+X 융합프로젝트 추진 등 네트워크, AI 분야 투자도 확충하였다. BIG3 분야는 4.1조원을 투자하여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였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에는 2.1조원을 투자하였다. 태양광·풍력산업에 자금·R&D·인프라 등 패키지를 1.3조원 규모로 지원했고, 수소산업도 생산기지 10개소, 수소충전소 56개소, 수소도시 3개소 등 핵심 인프라 구축소요 0.6조원을 반영하였다.

(4)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코로나19 펜데믹의 지속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상황이 지속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다.

첫째,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50.5조원을 지원하였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보의 기준중위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씩 단계적 인상하였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노인·한부모 가구 15.7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의료급여에 7.7조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151만명의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했고,

22.2조원 투자를 통한 공적임대 공급확대·단가인상, 고교무상교육 전학년 실시 등 주거·교육 분야의 지원소요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1조원을 투자했다.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지원 하고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여, 40만명에게 月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총 0.8조원을 신규 지원했다. 또한 구직급여 수혜자도 164만명으로 확대하여 11.3조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대폭 지원을 확대 하였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4.0% 인상했고,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 추가 등 돌봄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11.4만호 공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등 육아를 위한 생활·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를 확충하여 노인 빈곤층의 소득기반을 보강하였으며, IoT·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고도화,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5)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교통사고·수해·범죄 등 기존의 위험요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집중투자 하면서, 국방전력 강화와 외교·통일정책 뒷받침을 위한 투자도 적정히 보강하였다.

첫째, K-방역 고도화와 글로벌 선도 지원에 1.9조원을 투자했다.

개인보호구,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호흡기전담 클리닉 2배확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 등 방역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0.7조원을 투자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요 0.9조원도 반영하였다.

둘째, 국민생명 및 인권보호를 위해 5.4조원을 투자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7조원을 지원하여 교통안전·산재예방·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에 3.0조원을 투자하여 공기·물 등 국민생활의 밀접한 환경들을 개선하였다. 수해예방을 위한 소요도 2.6조원을 편성하여 풍수해 시설 개보수, 산사태 사방댐 추가설치(296→390개소), 국가하천제방 보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15개 증설,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 등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지원하였다.

셋째, 스마트 강군 구축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52.8조원을 투자하였다. F-35A 등 핵심 전력보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14.5조원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개발·부품 국산화 등에도 0.7조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해안지역 첨단 AI CCTV 설치에 0.2조원을 투자하는 등 전투역량 과학화를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다.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병 인건비 12.5% 인상, 급식단가 3.5% 인상 등으로 구성된 총 3.8조원의 "사기진작 7종 패키지"를 지원하였다.

넷째,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를 위해 1.7조원을 투자했다. 전략적 양자·다자외교 강화 및 다면적 공공외교 지원을 위해 0.1조원을 지원하였다. 개도국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남·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융합 ODA를 확대했으며(0.27→0.33조원), 남북철도연결·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남북 평화경제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소요도 0.05조원 반영하였다.

제2절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92)]

1 재정운용 기본방향

(1) 재정운용 여건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었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을 2021년 예산부터 본격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역동성 회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포용국가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경제기반을 조성하여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 역시 적극 추진했다.

9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이수지 사무관

(2)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 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조정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수입기반 확충 등 과감한 재정혁신 노력도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유사·중복 사업 및 관행적 보조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 재정수요 변화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자성과는 제고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예산을 재정 전반으로 확산하여 부처간 연계·협력을 촉진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연금·보험 등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운용의 혁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자산종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자산 개념 정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했다.

❷ 중기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총수입)은 2020~2024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세수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세외수입은 동 기간 중 28 ~ 30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중심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8-6〉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증가율)	481.8 (1.2)	470.7 (△1.1)	483.0 (0.3)	505.4 (4.6)	527.8 (4.4)	552.2 (4.6)	3.5
• 국세수입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2.8
• 세외수입	27.9	29.1	28.6	28.9	29.9	30.2	2.0
• 기금수입	161.9	161.9	171.6	180.0	187.8	196.6	5.0

(2) 재정지출

정부는 2020~2024년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7% 수준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한국판 뉴딜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마련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에 따라 연평균 5.3% 증가하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량지출을 2020~2024년 중 연평균 6.2%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했다. 다만, 유사·중복사업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했다.

〈표 8-7〉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512.3	546.9	555.8	589.1	615.7	640.3	5.7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51.1	374.1	370.9	394.8	411.3	423.8	4.8
(비중)	(68.5)	(68.4)	(66.7)	(67.0)	(66.8)	(66.2)	
• 기금지출	161.1	172.8	184.9	194.3	204.4	216.5	7.7
(비중)	(31.5)	(31.6)	(33.3)	(33.0)	(33.2)	(33.8)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55.6	255.1	267.3	282.5	295.7	314.2	5.3
(비중)	(49.9)	(46.7)	(48.1)	(48.0)	(48.0)	(49.1)	
• 재량지출	256.6	291.8	288.5	306.6	320.0	326.1	6.2
(비중)	(50.1)	(53.3)	(51.9)	(52.0)	(52.0)	(50.9)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2020~2024년 기간 중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2024년 GDP 대비 △5%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4차례에 걸친 추경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운용에 따라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는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여, 2024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표 8-8〉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123.2	△128.2	△127.5
(GDP대비, %)	(△3.5)	(△5.8)	(△5.4)	(△5.9)	(△5.9)	(△5.6)
※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83.7	△87.9	△88.1
(GDP대비, %)	(△1.5)	(△3.9)	(△3.6)	(△4.0)	(△4.0)	(△3.9)
○ 국가채무	805.2	839.4	945.0	1,070.3	1,196.3	1,327.0
(GDP대비, %)	(39.8)	(43.5)	(46.7)	(50.9)	(54.6)	(58.3)
○ 경상GDP성장률		0.6	4.8	4.0	4.0	4.0

❸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인구구조 변화 대응투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의료보장성 강화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보육 인프라 구축, 노후 소득기반 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2) 선도형 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D·N·A(데이터 · 네트워크 · 인공지능), BIG3(미래차 · 바이오 · 시스템반도체) 등 신기술 ·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그린 뉴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디지털분야 인재양성과 SOC ·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3) 안보,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안전 투자 지속 확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방위력을 보강하고,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국방전력을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해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0	’21	’22	’23	’24	연평균증가율
1. 보건 · 복지 · 고용	180.5 (12.1)	199.9 (10.7)	217.4 (8.8)	230.2 (5.9)	242.7 (5.4)	(7.7)
2. 교육	72.6 (2.8)	71.0 (△2.2)	74.2 (4.4)	75.4 (1.6)	77.9 (3.4)	(1.8)
3. 문화 · 체육 · 관광	8.0 (10.6)	8.4 (5.1)	8.8 (4.7)	9.2 (4.0)	9.4 (3.0)	(4.2)
4. 환경	9.0 (21.8)	10.5 (16.7)	11.4 (8.3)	12.1 (6.1)	12.6 (4.0)	(8.7)
5. R&D	24.2 (18.0)	27.2 (12.3)	29.1 (6.9)	30.7 (5.4)	32.0 (4.3)	(7.2)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23.7 (26.4)	29.1 (22.9)	32.3 (10.9)	34.2 (5.8)	35.6 (4.0)	(10.7)
7. SOC	23.2 (17.6)	26.0 (11.9)	27.8 (6.8)	28.7 (3.4)	29.3 (2.0)	(6.0)
8. 농림 · 수산 · 식품	21.5 (7.4)	22.4 (4.0)	23.0 (2.7)	23.3 (1.3)	23.5 (1.1)	(2.3)
9. 국방	50.2 (7.4)	52.9 (5.5)	56.1 (6.0)	58.6 (4.5)	60.9 (4.0)	(5.0)
10. 외교 · 통일	5.5 (8.8)	5.7 (4.3)	6.0 (4.0)	6.2 (4.0)	6.5 (3.9)	(4.1)
11. 공공질서 · 안전	20.8 (3.5)	21.8 (4.4)	22.8 (4.8)	23.7 (4.1)	24.6 (3.4)	(4.2)
12. 일반 · 지방행정	79.0 (3.2)	86.5 (9.5)	87.6 (1.3)	92.0 (5.0)	94.9 (3.2)	(4.7)

제9장

2020년 세법 개정

제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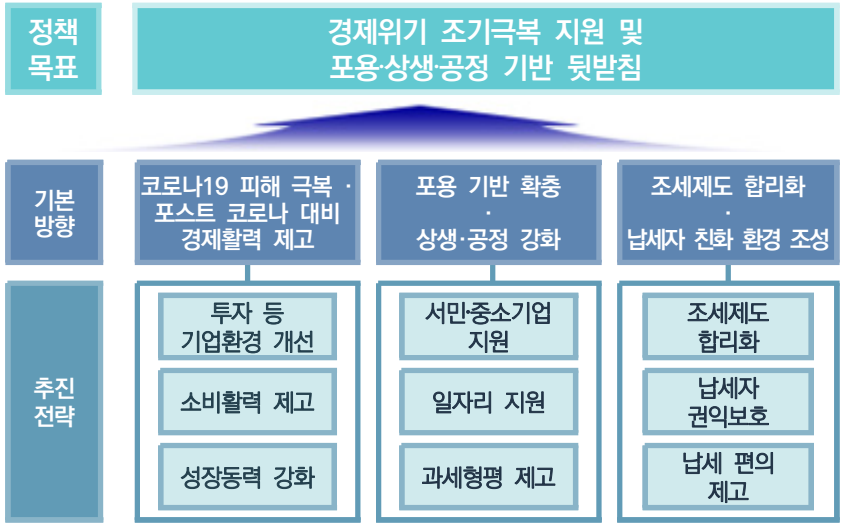
2020년 세법 개정

제1절 세법개정 기본방향

1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

2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투자세액공제 확대[93)]

기업투자 활성화 및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종전에 비해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2%p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미래 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9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영민 사무관

(2)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94]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95]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4) 주류산업 규제 개선[96]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제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주류법령 개정을 통해 제조 분야에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을 허용하고, 유통 분야에서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의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9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영민 사무관, 법인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9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박현애 사무관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도회 사무관

❷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97)]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20.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한 바 있으며, 추가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했다.

(2)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98)]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개별소비세 300만원에 교육세 90만원 총 390만원 한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❸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99)]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우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하고, 2023년 추가로 0.08%p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주식형 펀드 이익과 상장주식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준영 서기관
9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권순배 사무관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준하 사무관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하며,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이와 같은 개편으로 복잡·상이한 과세방식이 쉽고 단순하게 되어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이 기대되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9%로 저율 분리 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투자를 허용했다.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100)]

획일적인 신탁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세제를 종합 개편했다.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며,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을 허용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했다.

10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준영 서기관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10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하도록 우선 개정하였으며, 추가로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 해외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지원[102)]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벤처캐피탈 등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강소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5) 벤처기업 지원[103)]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의 출자주식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

10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남원우 사무관
10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강효석 사무관
103)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민중 사무관, 금융세제과 김종완 사무관

제3절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104)]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제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했다. 또한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0.5%로 신설했다.

(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105)]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 누락시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

10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서기관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신영 사무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0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더 연장했다.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7)]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관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하고 있다.

(5)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108)]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제도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은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비중 50% 이상'에서 '수출비중 3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

10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강효석 사무관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강효석 사무관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서기관

❷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109)]

2020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 하는 제도이며,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하는 제도이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세액공제 하는 제도이다.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110)]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했다. 기존 우대대상 근로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였으며, 우대대상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

---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영민 사무관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영민 사무관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개정으로 고령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됨에 따라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111)]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을 추가했다. 기존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도 촉진하고자 했다.

❸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112)]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기존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42%였으나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했다. 그 결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8개가 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는 45%이다.

---

1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강효석 사무관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박준영 서기관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고령자 세액공제율 상향[113)]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연령 구간별로 10%p씩 상향했으며,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의 합인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했다.

(3)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제도 개편[114)]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여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10%p,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20%p'를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30%p'로 개정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기간에 대해 최대 80%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보유기간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의 합으로 조정하였으며, 10년 이상의 경우 보유 10년 및 거주 10년 이상이 되어야 기존과 같은 8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정 사무관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경수 사무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했다.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이를 개정했다.

(4)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115)]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2주택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은 6%가 적용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했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5)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116)]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주식 및 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해외 주요국의 과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가 필요함에 따라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1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정 사무관
1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고대현 사무관

(6)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117)]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담배 범위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등을 추가했다.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변유호 주무관

제4절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11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의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그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같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세수 중립적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119)]

「법인세법」의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상증세법」의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했다. 또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을 폐지했다.

공익활동 강화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다.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 제재도 일원화했다.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했다.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결산서류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및 세정협력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3)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12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했다.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이전한 기업도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4) 국제조세 관련 조세제도 합리화[121)]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제도인 중재 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남원우 사무관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현수 사무관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하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5) 통관 관련 제도개선[122)]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던 「관세법」을 개정하여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국민보건·사회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2 납세자 권익보호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123)]

세무조사 사전통지 하는 항목으로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가 있었으며,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했다.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124)]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오미영 사무관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이석원 사무관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이석원 사무관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 및 명확화 했다.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 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추가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125)]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수입자가 수입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발급사유를 확대했다.

❸ 납세 편의 제고

(1)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126)]

학교법인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 법인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했다.

(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127)]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 및 보관 대상자 범위를 축소했다. 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 법인으로 대상자 범위를 축소했다.

---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영현 서기관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3)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128)]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했으나 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종락 사무관

제10장

재정 혁신

제10장

재정 혁신

제1절 지출구조 혁신[129)]

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전반의 구조적·질적 개혁을 총괄하는 재정혁신TF(2020.2월~)를 구성·운영했다. 재정혁신TF는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 등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①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구축, ②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 재정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했다.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구축'은 그간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발표된 각 분야별 종합대책이 로드맵·제도개선 위주로 구성되어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에 착안, 정책과 재정을 연계하고 가시적, 구체적인 혁신성과를 도출·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3C전략(Concrete :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 창출, Collaboration : 부처-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Community : 즉시 적용될 수 있는 현장 중심모델)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TF를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2021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했다.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김민형 사무관

분야별 종합지출구조조정은 저출산·고령화 등 대외환경변화가 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적절한 재정투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과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평가품질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과 4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병행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2005년 도입된 이후 재정 운용의 낭비 요소를 지속점검·개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효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보였다. 이에 ① 평가 주기와 예산순기 일치를 위한 조기평가 착수, ② 재정제도 혁신, 신사업 발굴 등으로 평가유형을 다양화, ③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 ④ 피드백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 및 평가결과 공개확대를 추진했다.

이러한 개선 방향에 입각하여 민간,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군, 노인의료지원 사업군, 전자정부 지원체계,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4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의 예산안 반영을 추진했다.

〈표 10-1〉 심층평가 주요 주요결과

과제	주요결과
국립대 재정지원사업군	국립대 지원사업과 타 대학재정지원 사업간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지원기준 명확화를 통해 재정효율성 제고
노인의료 지원사업군	노인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재정 확충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전자정부 지원체계	유사·중복 가능성 해결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 명확화, 성과지표 마련 및 성과결과 환류 강화
스마트 시티 사업모델	혁신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송로봇, 무인 편의점 등 생활밀접 분야와 서비스 선정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130)]

우리나라의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43.8%, 2019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1%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중이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국가채무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했다.

첫째, 최근의 경제 ·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20.10월) 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2월)했다.

둘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하고 관행적 보조사업을 폐지 · 축소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셋째,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재정성과DB를 구축하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 마련을 추진했다.

넷째, 민간투자대상 신규 발굴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추진하는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박준영 사무관

제3절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및 성과 중심 재정운용[131)]

1 성과관리체계 개편

정부는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관리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2020년 2월, 차관회의). 개편안은 ① 성과목표관리제도(성과계획서·보고서), ② 성과평가제도, ③ 성과관리 인프라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성과목표관리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성과목표관리 단위를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했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53개 중앙관서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계획서('21회계연도 시범 성과계획서) 작성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결과, 기존 단위사업에서보다 성과관리대상[132)]이 효율화되었고, 국민체감형 결과지표의 비중[133)]이 증가했다. 하지만 보완되어야할 사항으로는, R&D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 성과지표 개발,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다부처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있다.

또한 정부는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대응조직인 '재정성과평가관리단'을 구성했다. '재정성과평가관리단'은 각 중앙관서가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때 이에 대해 협의 및 조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성과관리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제도팀 권순영 사무관
132) 성과관리대상 : (단위사업) 1,778개 → (시범 프로그램) 410개
133) 결과지표 비중 : (단위사업) 51.3% → (시범 프로그램) 76.8%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거시적 차원의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보완하고, 예산 간 연계가 강화되어 그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성과평가 제도를 세부사업 단위로 통일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과정보 DB 구축을 추진토록 했다. 이러한 성과재정성과관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정부는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성과관리의 개념 및 목적, 성과정보의 관리·공개, 예산 환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재정업무 혁신·투명성 확보

1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134)]

2020년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참여 기회 확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체제 개편을 시행했다.

기존 예산국민참여단은 400명 규모로 매년 5월 모집 후 6~7월 중 1박2일 집중토론 등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논의와 선호도 투표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개월 내외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여단 활동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인원을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1년으로 설정했다. 온라인 접근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병행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은 명칭을 '토론형'으로 바꾸면서 내용에도 일부 변화를 주었다. '문제해결형' 방식은 기재부가 특정 사회 현안을 선정하여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사업화하는 제도였는데, 주제 선정 방식을 국민 공모로 바꾸고 이를 토론형(공모형)으로 명명했다. 또한 각 부처가 직접 2~3개씩의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토론형(부처참여형)' 참여방식도 도입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개편 시행의 효과로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전년대비 25개 사업, 111억원(10.5%)이 증가한 총 63개 사업, 1,168억원이 1,168억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김소연 사무관

❷ 재정정보공개 강화[135)]

정부는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국민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전면 오픈하여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다. 이후 정보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2018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재정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0년에도 공개 정보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정보의 활용성을 고려한 공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열린재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웹 접근성을 제고했다. 또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대한 분류별 및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정부 발주 사업 정보를 OpenAPI로 새롭게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및 연구수행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청·한국은행·OECD 등 국내외 경제·사회 통계지표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재정과 관련된 외부 통계들을 '열린재정'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추가경정예산 정보 제공,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 사업별 경비 세분화, 지방재정 관련 통계 확대 등을 통해 정보 사용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 제고에 기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공개되는 정보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유동석 사무관

제5절 재정분권 추진[136)]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전분을 10%p 인상(2019년 11→15%, 2020년 15→21%)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3.6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2020년에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방재정 규모는 2018년 대비 3.6조원 가량 순확충되었으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7.7:22.3에서 2020년 73.7:26.3으로 2년간에 거쳐 4%p 상승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표 10-2〉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단위 : 조원, %)

	'19년 ('18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18년 대비)
①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3.3조원 (+4%p)	5.1조원 (+6%p)	8.5조원 (+10%p)
② 소방직 지원 (소방교부세율)	- -	0.4 (+25%p)	0.4 (+25%p)
③ 기능이양	-	△3.6조원	△3.6조원
④ 교부세감소분	△0.7조원	△1.0조원	△1.7조원
순확충	2.6조원	0.9조원	3.6조원
국세:지방세(%)	76:24	74:26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박재홍 사무관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완료하지 못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11장

국유재산 관리·공공조달 혁신

제11장

국유재산 관리·공공조달 혁신

제1절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강화

1 국유재산의 적극 개발·활용 및 체계적 관리[137)]

최근 국유재산 정책은 경제 활력 제고와 공익 달성을 위해 적극 개발·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19년 8월 「2020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정책목표로 '경제 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재산가치 증대,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라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1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각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국유재산 개발을 본격화했다. 도심과 근접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위탁개발을 적극 확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의 안정적 투자처를 발굴한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청·관사를 청년 혁신지원센터, 창업·벤처 지원 공간 등과 복합개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입지의 업무공간에 입주할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최현화 사무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유지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 추진과제를 담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국유지 위에 지자체가 생활SOC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고, 생활SOC 건립 목적으로 지자체가 국유지 매각·대부 요청시에도 적극 협조하여 약 250건을 지자체에 매각 또는 대부했다.

세 번째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했다. 활용 잠재력 높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비축하고, 기존 노후재산을 리모델링하여 보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국유 일반재산 건물 중 친환경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3건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재산 활용제고와 함께 저탄소 개발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예정일자가 상반기에 도래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개발·활용이 제한되어 온 국유재산의 실효 이후 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차세대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에 착수했으며, 대법원 등기정보 등 주요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국유재산 대장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GIS기능을 강화해 개발·활용 의사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재산 특례제도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정책 방향	◇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으로 국민 편익 증진 ◇ 국유재산의 권리 보호와 효과적 활용으로 재산가치 증대 ◇ 관리기반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화

정책 과제	1. 경제 활력 제고	2. 국민 편익 증진	3. 재산가치 증대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화 ② 도심 노후 청·관사의 공익적 개발 확대 ③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지원 강화 ④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지 특례 활용 ⑤ 유휴 국유재산의 관리 강화 및 국민참여 개발	① 생활SOC 시설 확충 지원 ②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 확대 ③ 국유지 활용 및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④ 국유지 매수·사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 해소	① 국유재산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② 활용 잠재력 높은 국유재산 취득 및 리모델링 ③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재산 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④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4.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
	①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미활용 국유재산 특례규정 존치평가 추진 ③ 국유재산 취득·관리의 전문성 강화

올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도 국유재산 정책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일환으로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각각 1%, 3%로 2%p씩 인하하고, 사용료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 유예하며,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5% 수준으로 경감해 연말 기준 총 35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11-1〉 국유일반재산 사용부담 완화 지원

① 사용료 인하(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구 분	지원 내용		
	사용요율 인하	지원기간	지원한도
소상공인 (위탁개발재산)	재산가액의 3→1% (임대료 50%)	'20.4.1~'21.6.30	회계연도별 2천만원
중소기업 (위탁개발재산)	재산가액의 5→3% (임대료 50%)	'20.8.1~'21.6.30	

② 납부유예

구 분	지원 내용		
	유예기간	지원기간	지원제외
모든 입주자 (대기업제외)	3개월 (3개월 연장 가능)	'20.8.1~'21.6.30	대기업, 변상금 등

③ 연체이자율 경감

구 분	지원 내용		
	연체이자율 조정	지원기간	지원제외
모든 입주자 (대기업제외)	재산가액의 7~10%→5%	'20.3.1~'21.6.30 (연체기간에 불산입)	대기업, 변상금 등

❷ 국유지 개발사업의 추진 및 확대[138)]

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으로 발생된 전국 11곳의 대규모 유휴지를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혁신성장공간 등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① 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 고양 舊삼송초, ③ 수원 舊서울대 농대부지,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추가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총 15곳의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약 2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2018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하여 16건의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청·관사를 공공 청·관사와 신혼·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성남위례 군부지 개발사업 등 5건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설계단계에 착수하였다. 영등포 선관위 복합개발 사업 등 3건의 사업은 공사 착공에 들어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부산 동남통계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나라키움 부산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는 사업도 착수하였다. 서울 역삼동 청년허브에 이어 청년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두 번째 사례이다.

---

1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강중호 사무관, 손주연 사무관

제2절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139)]

1 개관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135조원, 이는 2018년(123조원) 대비 10%, 2011년(100조원)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출과 공공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조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2019년 정부혁신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 후, 혁신적 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공공분야(복지·환경·안전·행정 등)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조달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2019.7.11.)'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했다.

〈표 11-2〉 전체 공공조달 규모 및 중소기업 조달 실적

(단위 : 조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99.8	106.4	113.0	111.5	119.2	116.9	122.4	123.4	134.9
중소기업	67.7	72.0	78.8	78.0	85.5	86.1	92.2	93.9	104.9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조선형 사무관

❷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정부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기존 조달 실적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지정절차(패스트트랙)와 혁신구매목표제를 마련했다.

'혁신제품'은 국가R&D 결과물, 상용화전 시제품, 부처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공공성 평가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020.10.29.)에서 345개의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공공구매 지원을 통해 실제 '이동식 음압캐리어'와 같은 우수 혁신제품이 공공현장에 도입되어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는 '혁신구매목표제'를 기관평가(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적극적인 실적점검 회의 개최, 구매 독려 등을 통해 2020년 혁신구매목표(4,173억원, 2018년 물품구매액의 1%)를 초과 달성(4,690억원, 목표 대비 112%)했다.

〈표 11-3〉 혁신제품 종류

	내 용
패스트트랙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각 부처→위원회)
패스트트랙Ⅱ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조달청→위원회)
패스트트랙Ⅲ	그 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기재부·조달청 평가→위원회)

❸ 인센티브 강화

공공조달은 법령·규정에 의해 집행되고, 가격과 품질 기준이 엄격하게 요구되어 새로운 제품을 도전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기존 조달실적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는 이러한 경직적인 조달행정 환경에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달특례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조달특례의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을 적용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각 기관 계약담당자는 혁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신속히 구매할 수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기업, 담당 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엑스포, 권역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여 정책 참여를 독려했다.

〈표 11-4〉 혁신조달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법령	시행일	내용
조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0.10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 운영 근거, 혁신제품 종류 정의 (법 제5조, 시행령 제33조) •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공구매 지원 규정(법 제27조) • 혁신제품 구매자 면책 보장(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20.10월	• 혁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 허용(시행령 제26조) • 1인 견적 수의계약 허용(시행령 제27조)
계약예규	'20.12월	• 혁신제품 발주자 외 계약상대자까지 혁신제품 사용 면책 확대 (제품 하자로 인한 준공 지연 등)

④ 공공조달 범정부 협업체계 마련

그 간 조달정책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특정 정책·산업 지원을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TF인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추진단'을 출범·개최(19.7.29, 19.10.16, 20.2.12, 20.6.24.)했고, 2020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계획, 혁신제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후, 「조달사업법」 개정(2020.10.1.)을 통해 범부처추진단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혁신제품 심의·지정을 포함하여 국내 조달정책 기본방향 수립, 부처 간 조달제도 조정 등을 수행하고, 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당연직 위원(10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6인)이 참여한다.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0.10.29.)에서는 혁신조달 거버넌스(위원회 운영규정,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마련 등) 구축, 혁신제품 신규 지정(345개) 등을 의결했다.

〈표 11-5〉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근거 및 역할(「조달사업법」제5조)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절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140)]

❶ 2020년 국채시장 동향

2020년 국채시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며 그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재정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전년 대비 72.8조원 증가한 총 174.5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중 115.2조원은 일반회계 등의 재정자금 보전에 사용되었고, 59.3조원은 만기도래, 조기상환 등 상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11-6〉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행량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전년비)	(+12.1)	(△7.5)	(△0.3)	(△3.5)	(+4.4)	(+71.6)
발행잔액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전년비)	(+10.7)	(+6.6)	(+5.8)	(+3.7)	(+7.8)	(+18.9)

2020년 전세계 국채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초부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상반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패닉으로 3월중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미국 연준이 3월 정책금리를 제로수준으로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역대 최저인 0.5%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4월 이후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김지수 사무관

하반기 국고채 금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및 미국 부양책 논의,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른 글로벌 금리 급등에 영향받으며 반등했다. 정부는 금리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PD 인수여력 강화, 월별·연물별 발행량 탄력 조정 등 수요·공급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연말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년말 대비 +3.0bp 상승한 1.713%로 마감했다.

〈표 11-7〉 2020년 국고채 금리 동향

(단위 : %, bp)

구 분	2019년말	2020년말	전년말비	연중최고	연중최저
국고채(3년)	1.360	0.976	△38.4	1.455	0.795
국고채(5년)	1.480	1.335	△14.5	1.583	1.031
국고채(10년)	1.683	1.713	+3.0	1.762	1.281
국고채(20년)	1.691	1.824	+13.3	1.825	1.334
국고채(30년)	1.682	1.823	+14.1	1.831	1.350

2020년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도 크게 부각되는 한 해였다. 신흥국 채권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채권자금이 26.5조원 유입되며 연말 잔액기준 150.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치의 순투자 규모와 보유잔액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국가 펀더멘탈 대비 높은 금리 메리트와 재정차익거래 유인 등이 우리나라 채권 매력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표 11-8〉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규모

(단위 : 조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101.4	89.3	98.5	113.8	123.7	150.1
국고채	67.9	72.5	77.8	86.3	98.3	121.6
통안채	32.7	15.5	19.5	26.2	24.3	23.1

❷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금 조달에 있어 국채 역할도 확대되었다. 국채 발행량 급증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2020년 10월, “새로운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로 이루어져 국채시장의 틀을 개편·보강했다.

첫째, 국채 발행 물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탄탄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 먼저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수여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수요기반인 외국인과 개인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개인 투자용 국채 신설 등 각종 제도를 검토했다.

둘째, 효과적인 공급전략을 마련했다.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을 추진하는 등 라인업을 정비하고, 모집 방식의 새로운 비경쟁인수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시장수요에 맞게 입찰일정을 개편하는 등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전판인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자동호가조성 시스템,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 등 대내외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국채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채와 스트립시장 및 국채 선물시장 등 유관시장을 활성화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을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채 관련 정보를 일원화한 국채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표 11-9〉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20.10.20)

4대 전략	10대 과제
탄탄한 수요기반	①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 확충 · 인수 등에 대한 PD 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 중위권까지 공자기금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 우수PPD의 PD 조기승격을 위한 Fast-track 제도 신설 ②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사전검토 착수 · 주요 투자자 협력채널 구축 및 IR 강화 ·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별 경보 및 대응체계 운영 ③ 개인 국채투자 유인 및 관심 제고 ·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 추진 ·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효과적 공급전략	④ 시장 수급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 물량증가 부담의 분산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 시장수급 여건을 고려한 20년물 물량 탄력 조정 ·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 검토 ⑤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적정 배분 ·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Ⅳ) 도입 · 국채 투자자금 소요 분산을 위한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 ⑥ 旣 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총 발행액 → 순 발행액)
안정적 시장운영	⑦ 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채시장 대응기반 구축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22년 도입 · 국고채 전문딜러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 보완 · 시장안정 목적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신설 ·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채널 확립 ⑧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 · 물가채 발행방식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로 변경 ·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범위를 이자→원금스트립까지 확대 · 30년 국채 선물 도입 중장기 검토
전문적 지원기반	⑨ 국채 전문 연구기능 강화 ⑩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제12장

공공기관 혁신

제12장

공공기관 혁신

제1절 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선도

1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141)]

2017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월)을 수립했다. 동 대책에는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충원 계획(2022년까지 6~8만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2020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43.6만명으로 전년대비 1.5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분야 0.3만명, 안전조직 신설 등 SOC분야 0.2만명, 전력설비 확충 등 에너지 분야 0.1만명 등 인력증원과 공공기관 신규지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6월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고영록 사무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기인력운영계획, 재배치계획, 외부 조직진단을 도입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이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하여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인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재배치계획을 도입하여 증원요구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업무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 하였다.

공공기관 증원 및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정부의 일자리 확충 노력에 따라 2020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3.1만명 수준으로, 3년 연속 3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안전·SOC·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1〉 공공기관 신규채용

(단위 : 만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채용	2.1	2.3	3.4	4.1	3.1

자료 :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정부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균형인사[142)]

정부는 포용적 성장 및 기회평등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성, 장애인, 청년, 지역인재 등 공공기관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성의 경우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임원임명 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데, 각 공공기관에서 설정한 임원임명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여성임원(22.1%) 및 여성관리자(26.4%) 비율은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따른 목표(21.8%, 25.4%)를 상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2020년 6월 장애인 고용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 실시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을 적극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46%로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법정 비율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다.

정부는 청년·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지역인재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모든

1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이지혜 사무관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지역 지역인재를 24% 이상 채용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 (1.4~1.8점→2점)하고, 균형인사 컨설팅을 연중 10회 실시하는 등 관심을 유도하는 가운데 담당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으로 청년은 5.8%,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 59.8%, 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율 28.6%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균형인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❸ 공정채용 문화 확산[143)]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2017년 이후부터 채용비위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전체공공기관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수행했고, 채용비위로 볼 수 있는 수사의뢰 내지 징계요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70건 대비 76.5% 감소, 2018년 84건 대비 52.4% 감소한 결과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채용컨설팅 등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채용관련 제도개선,

1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강동근 사무관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년도의 주요한 논의결과로는 4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3월, 채용비위자의 승진제한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6개월로 연장했다. 둘째, 2020년 10월,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채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셋째, 2020년 10월, 채용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넷째, 2018년 채용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의 평가참여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하였으나, 채용현장에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 담당자가 외부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와 산업인력공단의 평가위원 Pool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2020년 2월,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과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사례를 담아 공정채용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체공공기관에 배포했고, 공공기관 채용담당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정채용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맞춤형 채용컨설팅을 총 10회 실시했다. 2020년 11월에는 「공정채용으로 시작하는 공정 사회」 이러닝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전체 6개 강좌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채용비위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채용공정성 인식도 조사결과 2017년 45점에서 2020년 64점으로 상승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④ 혁신성장 선도: 통합기술마켓 운영[144)]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혁신제품·기술 공모 및 검증을 통해 상품화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 제출 및 기술입증 한계 등으로 공공부문 공사 참여와 납품이 어려운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해 2019년에 「SOC기술마켓」을 개통한 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SOC분야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운영중이다. 2020년에는 「에너지 기술마켓」을 추가로 개통(2020.10.28.)하여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다.

SOC·에너지 기술마켓은 개통한 이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회 공모(SOC 3회, 에너지 1회)를 실시하여 각각 79건, 28건의 혁신제품·기술을 발굴·인증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인 바, 주요 골자는 ①통합기술마켓을 공공기관 전 분야로 확산 ② 기술마켓 인증제품의 판로를 확대 ③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등이다.

특히 기술마켓 인증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 혁신제품에 선정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20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34개의 SOC·에너지 기술마켓 인증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이채영 사무관

정부는 앞으로 ICT기술마켓을 구축하는 등 통합기술마켓을 공공기관 전 분야로 확산시키고, 혁신구매 목표제 활용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통합기술마켓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 12-2〉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 주요 내용

과제	내용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전분야로 확산	• **(통합 기술마켓 확산)** ICT, 교육 등 분야로 확대 • **(근거 마련)** 설치 근거규정, 기술마켓 운영규정 마련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 **(혁신제품 진입)** 인증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 혁신제품 지정 지원 • **(구매자 면책)** 혁신제품 지정시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외에는 면책
중소기업 성장지원과 공공기관 참여 활성화	• **(공공기관 참여)** 혁신구매목표제에 인증제품·기술 포함,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통합기술마켓 활용 및 지원 노력을 반영 • **(중소기업 종합 지원)** 기술마켓에서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 지원, 보증한도 우대, 공공기관 보유 특허공개 등 지원

5 안전관리 강화[145)]

2018년 12월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도 도입하였다.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류남욱 사무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분야에 대하여 안전경영체계 등 안전역량, 현장 작동성에 관한 안전수준 및 중대사고 등 안전성과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2020년 6월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2021년에는 30여명의 외부 안전전문가를 주축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안전관리 중점기관 및 연구기관 등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사결과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여 공개하고 안전관리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경영진 안전교육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2022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2020년 6월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제도화하였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2월에 전년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주무부처의 점검결과, 산업재해 현황, 당해 연도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4월에 공시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각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결과에 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2절 효율·지속가능성 제고

1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146)]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객관적 직무의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지원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중심 인사체계 따라잡기(고용노동부)' 등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기관별 직무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무급 협의회를 실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기관의 사례와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공유했다.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지표 체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존에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3점)에 포함되어 있던 직무급 평가를 분리하여 직무급 도입준비와 도입수준에 대한 평가(2점)로 체계화하여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했다.

또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이희한 사무관

강화하였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7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임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목표와 추진원칙을 공유하고 노동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에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직무급 도입의 추진방향 및 추진원칙에 합의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20.11월, 경사노위)〉

□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1.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2.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 ·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❷ 재무 건전성 확보[147]

정부는 그간 경영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부채관리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개선하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영환경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투자·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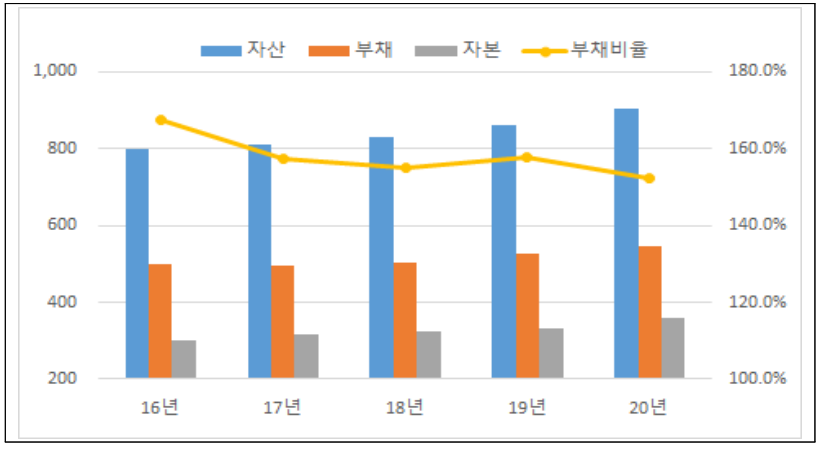
올해 전체 공공기관[148]의 부채규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강화에 따른 투자·지출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권오영 사무관
148) 전체 공공기관 수는 340개이나 부채산정 시 산은·수은·기은 등 3개 은행 제외

544.8조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자산과 자본도 함께 증가하여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6%p 하락한 152%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객수요 감소로 인해 레저·운송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4.5조원이 증가한 5.3조원을 실현하였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우선,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기관을 대상 현재 LH, 한전, 철도·도로공사 등 39개 기관이 해당된다. 동 계획에는 기관별로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와 그에 기반한 투자방향과 사업계획이 포함되며, 자산, 부채 등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전망과 이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작성된 '20~'2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부채비율은 170% 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2016~2020년 공공기관 부채규모·비율 현황〉



한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외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그간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예타 이후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예타 이후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예타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있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 공공투자·지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제3절 자율·책임·투명성 강화[149)]

1 혁신형 맞춤 경영평가체계 구축

정부는 경영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최초 도입 이후 35년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에 기여하였으나, 기관·국민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수용성·신뢰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 및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정부와 평가단, 공공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 규모·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 대상 유형을 세분화, 기관 유형에 맞춘 지표 차별화, 유사업무 기관간 공통지표 발굴, 기관장 경영계약과 평가지표간 연계 강화, 평가주기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상대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관의 실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지급률 산정시 실적 향상도를 추가 반영하여 기관의 실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경영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21년도 경영평가편람 마련시 기관과 주무부처에 제공하는 지표개선 가이드라인에 일부를 반영하였다(2020.11.).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체계를 계속 유지하되,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유연정 사무관

국정과제와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기관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전략과제를 반영하였으며, 기관장 경영계약,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된 핵심업무 위주로 지표를 설정했다.

한편, '20년도 평가편람 수정 시 코로나19의 영향을 '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2020.9.) 평가편람 상 '통제불능성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의 실적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코로나 19영향과 정부정책 대응에 따른 지표 영향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간 연관성,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결측처리 및 보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을 신설했다.

혁신형 맞춤 경영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평가의 수용성, 신뢰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최종적으로는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기반한 실적 개선을 유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❷ 혁신포털 사용자 편의성 강화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인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 구축을 완료하고, 검색기능을 보다 강화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기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알리오플러스(Alioplus)를 통해 공공기관 시설, 행사, 사업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중인 바, 금년에는 개설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제공 정보를 통합검색하는 포털(portal)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동영상 관련 신규 콘텐츠를 대폭 추가했다. 우선 알리오플러스에 전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자동 수집하는 웹크롤러 기능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알리오플러스를 한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수집된 정보는 자료실, 카드뉴스, 보도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여러 기관의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예시) 검색어로 「4차 산업혁명」을 입력한 궁금해 씨, 클릭 한번에
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등 3,843건,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등 4,481건,
③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정보 등 74건,
④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행사정보 등 189건 포함 총 11,358건 검색

이와 함께 영상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동영상' 코너를 신설하여 알리오플러스 방문자가 공공기관의 유용한 동영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공공기관 제공 동영상 1,62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빅데이터 사례' 코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표 12-3〉 주요 동영상 제목

기관명	동영상 제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보건 인프라는 안전할까요?
국립암센터	암환자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와 함께 하는 '집콕운동'
인천국제공항공사	눈이 많이 와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유!
한국관광공사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피해예방법 알려드림

이 밖에도 '혁신포털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혁신포털 체계 개편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으며, 소극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축적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알리오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혁신포털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유용한 약 24천건의 공공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정보포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340개 공공기관 정보가 매년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향후 혁신포털 시스템이 공공기관 통합 데이터포털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4〉 혁신포털 콘텐츠 누적 규모

(단위: 건)

구 분	'19년	'20년	전년대비증가율(%)
새소식	6,455	11,594	79.6
시설 · 행사 · 사업정보	9,930	10,591	6.7
동영상정보	-	1,620	('20.8월 신규 구축)
계	16,385	23,805	45.3

제13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13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150)]

(1)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2020년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인 확산 가운데 미·중간 글로벌 패권 경쟁의 고조,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적인 수출통제 및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한 해였다.

2018년부터 상호 관세부과 등의 분쟁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발발 이후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제재 및 코로나 책임론 논쟁 등 미중분쟁이 통상 이외의 전방위적 분야로 심화되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경제·외교 정책 방향이 급변하는 등 중요한 대외환경 변화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150) 집필자: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김교중 사무관, 홍가영 사무관, 김나윤 사무관, 통상조정과 신승현 사무관

또한,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통상규범의 발전방향에 주목했다.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다. 특히 EU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추진했다.

(2) 대외리스크 관리

우리 정부는 미중분쟁 심화로 우리 핵심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미국 대선 직후로는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다자 협상으로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양자 협상으로 타결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했다. 동시에 국내 제도와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조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신규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여 해외석탄발전 중단관련 논의를 선도했다. 다른 한편 국내적인 대응 노력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적응적 온실가스 감축에서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능동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의

전환을 추진했다.

(3) FTA 추진 현황

정부는 안정적 글로벌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장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FTA는 총 16건이 발효했으며, 협상이 타결된 4건은 발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 추진 또는 재개를 준비 중인 FTA는 총 9건이다.

특히, 11월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국 정상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151]에 서명했다. 전 세계 무역규모, GDP,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인 RCEP은 역내에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무역규범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WTO 체제를 보완하고 다자간 무역규범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RCEP 외에도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했으며, 태평양동맹과는 협상개시에 앞서 필요한 협상세칙에 합의했다. 또한 MERCOSUR, 칠레, 필리핀, 중국, 러시아 등과 무역협정 및 서비스·투자분야 개방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한-캄보디아 FTA는 7월 개시 이후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15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도는 무역불균형 등을 이유로 최종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표 13-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2.31. 기준)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발효 (16건)		칠레	'04.4.1. 발효
		싱가포르	'06.3.2. 발효
		EFTA(4개국)[1]	'06.9.1. 발효
		ASEAN(10개국)[2]	'07.6.1. 상품 / '09.5.1.서비스 / '09.9.1. 투자 협정문 발효
		인도	'10.1.1. 발효
		EU(27개국)[3]	'11.7.1. 잠정발효 / '15.12.13. 전체발효
		페루	'11.8.1. 발효
		미국	'12.3.15. 발효 / '19.1.1. 개정 발효
		터키	'13.5.1. 기본협정 / '18.8.1. 서비스·투자 협정 발효
		호주	'14.12.12. 발효
		캐나다	'15.1.1. 발효
		중국	'15.12.20. 발효
		베트남	'15.12.20. 발효
		뉴질랜드	'15.12.20. 발효
		콜롬비아	'16.7.15. 발효
		중미5개국[4]	'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 '19.11.1. 코스타리카 / '20.1.1. 엘살바도르 발효
	후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18.3.~'20.10. 9차례 협상
	개선	한-ASEAN FTA 개선협상	'19.2.12.~14. 제17차 이행위원회
		한-인도 CEPA 개선협상	'16.10.~'19.6. 8차례 협상
		한-칠레 FTA 개선협상	'18.11.~'20.11. 4차례 협상
서명		영국	'19.8.22. 서명
		RCEP(15개국)[5]	'20.11.15. 서명
		인도네시아	'20.12.18. 서명
타결		이스라엘	'19.8.21. 타결 선언
진행		한중일	'13.3.~'19.11. 16차례 협상
		Mercosur(4개국)[6]	'18.9.~'20.2. 5차례 협상
		에콰도르	'15.8.~'16.11. 5차례 협상
		필리핀	'19.6.~'20.1. 5차례 협상
		러시아	'19.6.~'20.7. 서비스·투자 부문 5차례 협상
		말레이시아	'19.7.~9. 3차례 협상
		캄보디아	'20.7.~11. 4차례 협상
재개, 개시 여건 조성		PA(4개국)[7]	'20.12. 협상세칙 합의
		EAEU(5개국)[8]	'17.9.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2)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3)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4)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 5)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6)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7)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 8)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❷ 신북방·신남방 등 신시장 진출 확대

(1) 신북방정책을 통한 진출 확대[152)]

1) 추진배경

90년대 초 이후 역대 정부는 북방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지원체계 미비 및 대북관계 경색 등에 가로막혀 우리 경제의 협력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북방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한-러시아 수교 30주년 계기 협력 강화

2020년은 신북방 주요 국가인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2018년 6월 정상회의에서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 및 확산 등으로 2020년 한-러 간 총 교역액은 전년 대비 21.5% 감소한 175.3억불에 그쳐 2017년부터 이어지던 증가세가 위축되었다.

정부는 유례없는 국제적인 감염병 위기 속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러 수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협력성과 도출을 위해 2020년 2월 「한-러 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 활동을 본격화하여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이지우 사무관, 이현지 사무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했다. 10.27일에는 러시아 측과 「한-러 수교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간 회의」를 화상개최하여 양국 협력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비대면·대면 방식을 혼합하여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협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나.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한 경제협력 고도화

한편 위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는 '9개다리 행동계획 2.0 (9-Bridge Action Plan 2.0)'에 서명했다. '9개 다리 행동계획'은 한-러 경협의 기본틀로서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협력 전략'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이다. 행동계획 2.0은 2019년 2월 합의되었던 기존의 활동계획에서 투자·혁신플랫폼 등 유망 협력분야가 추가·업그레이드되었다. 이에 더해 양국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과 한-러 간 서비스·투자 FTA 체결, 공동투자펀드 설립 등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2020년은 중앙아시아 지역 중점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도 경제부총리 회의,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해였다. 5.6일에는 제3차 경제부총리 회의를 화상개최하고, 우즈벡 농산물 한국수입, 우즈벡 WTO 가입지원 등 무역 분야와 공동 투자프로젝트 실현, 유무상 ODA 협력 등 투자분야를 논의하여 경제 분야 전반의 현안을 조율했다.

또한 7.7일에는 한국-우즈벡 경제부총리 면담을 개최하여 5월 화상회의를 통한 경제부총리간 회의 이후의 코로나19 공조 및 분야별 경제협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양자간 실질 협력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여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2) 신남방정책을 통한 진출 확대[153)]

1) 추진배경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완충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 2017년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수준을 미·중·일·러 4대 강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후 2018년 신남방정책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아래 신남방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2020년 11월에는 일방향적 경제사업 중심의 기존 신남방정책에서 상대국을 고려한 정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람 중심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신남방플러스 발표를 통해 기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신남방국가와의 협력 강화

2020년 코로나19라는 큰 악재로 고위급 경제협력채널과 신남방국가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인프라·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했고, 새로운 경제협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남방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국제적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남방국가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EDCF · KSP 등 기존 협력수단을 활용하여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오승상 사무관

보건 · 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필리핀(1억불) · 캄보디아(0.5억불)를 대상으로 보건 ·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자재 도입을 위해 EDCF 긴급자금을 승인하고, K-방역에 대한 정책자문 수요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KSP 정책자문을 신속하게 착수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신남방국가 진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 금융 협력 강화 노력을 지속했다.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미얀마·캄보디아 등과 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G2G 심화 정책자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신설하여 인니(수도이전) · 미얀마(전력· 에너지)를 대상으로 자문에 착수했다. 특히, 인니 수도이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신설 · 운영하여 대형 인프라 수주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지원분야는 신남방 4개국(인도 · 베트남 · 캄보디아 · 필리핀) 앞 전대금융 한도 승인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 금융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베 석유가스공사, 인니 석유 가스 공사 등 신남방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 (FA)를 체결 함으로써 발릭파판 정유설비 현대화사업(현대 ENG, 23.4억불)의 수주 지원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나. 신남방정책 플러스

기존 경제사업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하여 교육· 보건사업 중심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 회의를 계기로 발표했다.

먼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중심의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사람(People)에 초점을 맞춰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였으며 협력 사업을 분야에 따라 보건·의료, 문화교류, 무역·투자 등 7개의 이니셔티브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사업으로는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해외인프라 투자·수주 지원체계 구축, 대외경제협력기금 협력, 인니 수도이전사업 협력 등이 포함되고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❸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154)]

우리의 해외 인프라 수주 실적은 저유가 기조 지속, 글로벌 수주 경쟁 심화, 우리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최근 수년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로 2020년 수주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각국의 입국제한, 발주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해외수주 실적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매진했고 '20.6월 ① 既 발굴된 핵심 프로젝트 수주의 체계적 지원과 ② 신규 추가 프로젝트 발굴·수주 역량 제고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시행했다.

* 해외수주액(억불): (2015) 461 → (2016) 282 → (2017) 290 → (2018) 321 → (2019) 223

(1) 既 발굴 핵심 프로젝트 수주 체계적 지원

우선 정부는 그간 발굴된 프로젝트 중 사업의 경제적 효과, 지역 다각화,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천억불 규모의 3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총력지원을 통해 수주달성을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염철민 사무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합동 전담지원체계인 팀코리아를 구축하여 수주지원단의 현지 파견 및 비대면 수주협상 지원, 각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처 금융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3.7조원 규모 패키지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글로벌 PIS 펀드 1.5조원을 조성하고, 0.4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고위험국 대상 신시장 인프라 수요 대응을 위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1.8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 신규 추가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역량 제고

이미 발굴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신규 유망사업 수주를 위해 사업발굴, 기획, 금융조달 등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의 핵심주체인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했다. 각 부처 예산사업 외에 수출입은행도 새롭게 타당성조사 지원을 도입했다. 또한 수주 대상국의 국책사업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등 대정부 정책자문도 확대했다. 3년 이상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안착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와 초청연수를 지원하는 K-City Network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유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해외의 우량 발주처에 장기 금융지원 총액한도를 10.5조원 규모로 선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대형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저양허성 차관인 경협증진자금(EDPF)도 0.4조원 규모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유망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 해외진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실적을 반영하고 가점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 수주노력을 통해 2020년 해외수주 실적은 최근 5년간 최고 실적인 351억불을 달성했다. 플랜트와 토목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에서 수주실적을 회복했으며 중남미에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멕시코 정유공장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진출지역도 다변화했다.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155)]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상황에도 한·중 양국 교역액은 0.8% 감소에 그쳤다. 양국은 기업인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여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이어나갔다. 또한 2020년 12월 2일 중국 정부는 약 4년 만에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서머너스워", 컴투스社)에 대해 판호(서비스 허가권)을 발급했다.

양국은 고위급에서의 협력도 지속했다.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ttee)는 2020년 10월 16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제16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18년 2월 개최된 15차 회의 이후 2년 반 만에 개최된 회의로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됐던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양국 최고위급 경제당국 간 협력채널을 공고히 했다. 양국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 및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서비스산업·신산업에서의 협력과 중국 동북3성에서의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기존에 구축된 협력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며,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을 제안하고 관광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고,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조성을 위한 MOU협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서명하기로 했다.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신승헌 사무관, 국제경제과 정희진 사무관

한편,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여 중동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건설 등 전통적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신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ICT, 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7일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번째 경제공동위로써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인 UAE와 우호적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갔다. 양측은 이전 공동위 합의사항 및 정상회담시 논의된 협력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신규·후속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미래지향 기술·혁신,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인적 교류 등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❷ 상생의 ODA 지속 추진[156)]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1차 2010~2015년, 2차 2016~2020년)을 통해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20년 11월 시행)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추진 중이다.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허성용 사무관, 개발전략과 정동현 사무관

2020년 잠정통계 기준, 우리나라는 22.5억달러(증여등가액)의 ODA를 지원함으로써 전년 대비 △8.7%의 감소세를 보였다. ODA 지원규모는 29개 DAC 회원국 중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한 16위를 기록하였고, GNI 대비 ODA 규모도 전년 대비 △0.01%p 감소하여 0.1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사업 중단, 국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앞 출자·출연 납입 일정 조정 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2020년 일시적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OECD DAC 가입 이후 ODA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전체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등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동 기간 OECD 평균 2.7%, 1위 헝가리)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ODA 규모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공약 이행과 함께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13-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잠정)	’19년 대비 ’20년 증감률
ODA 규모	2,246	2,201	2,358	2,463	2,249	△8.7
양자간	1,548	1,615	1,734	1,857	1,764	△5.0
다자간	698	586	624	606	485	△19.9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도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ODA 중 원리금을 상환

받는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157]을 주로 지원한다.

EDCF는 2015년 SDGs 채택 이래 단순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전환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설립 당시 179억 원을 승인한 이후 지원 규모가 2019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18개 사업에 대해 8,853억 원을 승인하였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의 최초 승인(중미경제통합은행 앞 전대한도 설정을 통한 중미 5개국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 5,000만 달러)과 같이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크게 저해하였다. EDCF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의 경제·보건 위기 대응을 돕고자 2020년에 보건 분야에만 63.5%의 사업을 승인하는 한편, 개도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5,44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차관을 승인하였다. 더불어, 긴급 기자재차관 업무지침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개도국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개도국 채무상환 유예에 합의하여 27개국을 대상으로 693억 원의 채무를 4년간 유예하였다.

마지막으로 EDCF는 인프라 사업 활성화와 사업효과성 증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MOU를 체결하여 보건·

157)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 법적 채무를 동반한 현금 또는 현물 이전으로,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에 비해 수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4개국(우리나라, 일본, 중국, 태국) 원조기관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앞으로도 EDCF는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우리기업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산업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 등 SDGs가 제시하는 주요목표를 사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수원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함께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

1 G20을 통한 글로벌 정책공조 추진[158)]

(1) 개괄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진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논의 범위를 지속가능 발전, 포용적 성장, 공동번영을 위한 보건·개발·환경 등 이슈까지 확대하며 세계 경제 논의를 주도하는 포럼으로 발전해왔다.

2020년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라는 주제를 제시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확산됨에 따라 당면한 보건·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대비를 위한 논의가 거시경제, 국제금융, 보건, 국제조세, 금융 이슈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13-3〉 2020년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

주요 의제	주요 논의내용
세계경제 전망 및 거시정책공조	세계경제 동향 점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 방안
보건/방역	신속하고 공평한 진단기구, 백신 등 보급방안
국제금융체제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방안
금융이슈	국경 간 지급(송금) 개선방안
국제조세	디지털 경제 시대 조세체계 개편 방안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홍승균 사무관, 송상목 사무관, 한정연 사무관, 서민아 사무관, 윤영탁 선임조사역

(2) 주요 성과 및 평가 (재무트랙)

2020년 G20 정상회의는 그 간의 정상회의와 비교할 때 형식과 개최 횟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보건·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사상 최초),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8차례 개최되었으며 재무·보건장관회의도 1차례 개최

1) G20 특별 정상회의(3월)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억제와 함께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팬데믹 억제를 위한 모든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G20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G20 보건장관들에게 각 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WHO 코로나19 연대대응 기금에 적극적 재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진단도구와 백신 등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도 다짐했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세계경제 성장 회복 등을 위한 가용한 모든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대규모 재정지원 지속, 취약국 지원을 위한 채무부담 완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과 같은 상품의 국경 간 흐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2) G20 정상회의(11월)

11월 정상회의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액션플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세계경제 회복과 기후변화·지속가능 발전 등 중장기 과제 대응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공조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세계경제 회복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회복정도가 상이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바이러스 확산 억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지원을 다하겠다는 G20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와 관련하여 제12차 WTO 각료회의 등을 통한 개혁에 지지를 표명했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면역이 글로벌 공공재임을 인정하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기구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ACT-A)와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지지하는 한편, 이를 위한 재원 부족 해결을 약속했으며, 향후 팬데믹 발생에 대응한 국제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는 저소득국의 코로나19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이행(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을 지지하고, 저소득국 채무부담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채무재조정 원칙(Common Framework)을 승인했다.

한편, 현대적 조세시스템 마련을 위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필라1·2 보고서 환영 후속조치 촉구, G20 인프라 테크 아젠다에 대한 지지, 국경간 지급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지지 등 국제조세, 인프라, 금융이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졌다.

❷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159)]

(1) 국제기구 연차총회 참석 및 연례협의 개최 등

국제기구 연차총회는 각 국제기구별로 연간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공식회의로서, 주요국 장관, 중앙은행 총재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기구의 연간 및 중장기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제기구에서 연차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차 총회(3월, 화상),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세계은행(World Bank, WB) 춘계회의 및 연차총회(4월·10월, 화상),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연차총회(7월, 화상),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연차총회(8월, 화상),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연차총회(9월, 화상),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연차총회(10월, 화상)에 참석하여 기구별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개진했다.

국제기구들과의 연례협의는 각 기구들과의 양자회의 형식이며, 국제기구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며 각 국제기구에 출연한 한국 신탁기금의 운영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박은결 서기관, 박중민 사무관, 김지영 사무관, 박준석 사무관, 이우리 사무관, 개발금융총괄과 이현지 사무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연례협의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경우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WB(2월, 워싱턴 D.C.) 연례협의 개최 이후 EBRD(12월, 화상), IDB (12월, 화상)와 화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해 각 기구와의 협력, EDCF 협력, 신탁기금 활용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ADF-12에 이어 2019.11월, 2020.2월, 2020.9월 3차례의 ADF-13[160] 재원보충회의에 참석하여 향후 ADF의 정책방향 및 재원계획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담률을 직전 재원보충과 동일한 수준인 2.89%로 유지하여 저소득국 지원에 지속적으로 동참했다.

또한 한국은 AfDF-15[161] 재원보충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지역개발과 취약국 지원을 위한 AfDF의 전략 방향 및 운영 우선순위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 14차와 동일한 1.5% 분담률로 기여할 것을 약정했다.

(2) 한국 인력·기업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기획재정부는 채용설명회, 청년기술인재단(Tech Corps) 사업, 조달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월에는 화상으로 "제12회 국제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IMF, WB, ADB, AIIB, AfDB, CABEI, EBRD, IDB, OECD,

160)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상 자금 지원을 위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기금으로, 4년마다 정기 재원보충을 실시

161)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 : 아프리카 하위소득국가 지원을 위한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내 기금으로, 3년마다 정기 재원보충을 실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 10개 기구가 참여하여 한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를 소개하고, 기구별 심층세션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작년과 같이 각 기구 인사담당자가 직접 약 130건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11월 24~25일 이틀간 화상으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2020"을 개최했다. MDB 및 해외 발주처 20개 사와 40여 개의 국내기업이 참여한 동 행사에서는 MDB별 조달사업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해외발주처-한국 기업 간 1대 1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개도국과 인적·기술적 교류 강화를 위해 청년기술인재단(Tech Corps) 사업을 추진 중이다. Tech Corps는 한국 청년들을 개도국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에 파견하여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ICT 분야 등의 기술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IDB, ADB, AfDB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모델 협의를 시작했다.

2019년 IDB 1차 청년기술인재단을 통해 우루과이, 바베이도스 등 중남미 5개국의 8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 한국 청년 8명을 파견한 후,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선발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 2차 선발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ADB 청년기술인재단도 2021년 1분기까지 1차 파견을 목표로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채용된 인원은 전원 원격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ADB 청년기술인재단은 ADB 내부 채용규정에 따라 국제공개경쟁채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이 최대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ADB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에 국내인력의 활발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프로그램[162]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WB(2010년 도입) 및 EBRD(2017년 도입)에 JP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명의 JPO(WB 4, EBRD 2)를 선발·파견했다. 특히, 2020년까지 파견기간이 종료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 20명중 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누적)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우수한 국내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3)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보건·방역, ICT, 사회, 경제, 거버넌스 등 분야별로 정리하여 5권의 영문자료를 발간하고, 이를 WB, ADB, IDB 등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에 공유했다. 더불어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부와의 양자회의 및 WB, ADB, IDB 등 국제기구 주최 웹세미나를 통해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62)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공여국 정부의 부담으로 자국민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로서, 선발된 인원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정규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표 13-4〉 코로나19 대응 영문 정책자료 목록

	제목	주요 내용
1	Tackling COVID-19	보건·방역 및 경제 대응
2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ICT 활용 대응방안
3	COVID-19, Testing Time for Resilience	사회분야 대응
4	Safeguarding Economic Resilience	경제 대응 정책
5	FOReCAST	위기 대응 거버넌스

(4) 세계은행(WB) 한국 혁신주간 개최

세계은행(WB)은 2월 18~20일간 워싱턴 D.C의 세계은행 본사에서 한국 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WB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 분야를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 WB 동아시아태평양실(EAP)와 한국 이사실은 디지털 개발, 스마트 시티, 녹색 혁신 등 총 8개의 전시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혁신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WB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동 행사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약 49개가 참석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WB과 양해각서 및 참여의향서를 갱신 또는 체결하여 한국 기업 및 기관과 WB간 협력 기반이 확대되었다.

(5) 아시아개발은행(ADB) 의장국 수임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빈곤감축을 목표[163]로 1966년 발족한 지역 내 최대 국제기구이다.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 높은 지분(8위)을

163) ADB는 1997년 한국 IMF 사태 당시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보유하고, 영구 이사직을 수임하는 등 ADB와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제 3차(1970년, 서울) 및 제 37차(2004년, 제주) ADB 연차총회를 유치했으며, 2020년 제 53차 ADB 연차총회 인천 개최가 2019년 1월 ADB 거버너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ADB 연차총회를 제1부 화상 약식총회(5.22)와 제 2부 본총회(9.18~21, 인천)로 분리하여 개최키로 결정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5.22일 제1부 약식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아사카와 ADB 총재는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200억 달러 마련 등 ADB의 노력을 소개하고 ADB의 '전략 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정상화를 위해 ADB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지식공유 확대, 저소득국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9.18일, 제 2부 본총회 역시 코로나19로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부총리가 의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ADB는 거버너 총회를 통해 2019년 연차보고서와 2020년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승인하고 차기 의장국을 선출했다. 또한, 2023년 제 56차 연차총회를 한국 인천에서 5.2~5일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6)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신설

2020.5월 한-CABEI 간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5년 5,000만 달러 규모로 CABEI 내 최초로 단독 신탁기금을 개설하였으며, 2020.12월 중미 9개국에 300만 달러 규모의 Kf94 마스크 공급을 포함해 5건을

최초로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CABEI 신탁기금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중미지역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와 혁신 기술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해당 신탁기금은 운용액의 55%를 아국기업 참여 구속성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기업 중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164)]

(1)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

약 202억불 규모의 세계 최대 기후기금을 운용하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GCF는 2020년 총 세 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년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와 화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8월 및 11월 이사회는 각각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국은 GCF 유치국이자, 제 3기(2019~2021년) 이사진으로서, 2020년에는 대리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GCF 운영, 사업 및 이행기구 인증 등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GCF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GCF의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대응했다.

3월에 개최된 제 25차 이사회에서는 1차 재원보충기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GCF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전략적 계획을 논의한 것을 비롯해, 총 6건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GCF 지원금 1.7억 달러)을 승인했다.

1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정다운 사무관, 김연태 사무관

8월에 개최된 제 26차 이사회에서는 2020년 및 2021년 개도국의 기관 역량 강화 등 능력배양사업에 1.62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여 개도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 부양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회복 지원방안을 승인하고,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환경산업기술원 및 국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해 총 15건(GCF 지원금 8.7억 달러)의 사업을 승인하였다.

11월 개최된 제 27차 이사회에서는 25차 이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향후 4년간 GCF의 비전, 목표와 우선순위를 담은 전략적 계획이 승인되었고, 국내 기관인 APEC 기후센터가 참여하는 태평양 군도국가 기후정보체계 강화사업을 포함, 총 16건(GCF 지원액 10.1억 달러)의 사업을 승인하였다.

(2)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회복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 주요 외신, 주한 외국 공관, 주요 국제기구 등에 배포하여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8월 27일 콜롬비아 부통령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 8월 27일 주한외교단 대상 웹세미나, 9월 17일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등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했다.

(3) 기후변화 협상 재원 분야 적극 참여 등 기후 리더십 강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 26차 당사국 총회, 부속기구회의 등 주요 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기금(Adaptation Fund)[165] 이사회, 기후대화 등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후재원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사직을 수임하고 있는 적응 기금의 제35차 이사회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사업 총 6건, 3,420만 달러 규모 승인했다. 또한, 기존에 승인된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간 등의 유동적 조정을 허용하는 제도를 승인했다.

165) 적응 기금(Adaptation Fund)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적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다자기후기금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國 內

1월

03 ▷ 기획재정부, 「2020년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방안」 발표
08 ▷ 「정부,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발표
09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
15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2 ▷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마련
29 ▷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2.1일 시행)

2월

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0.8.5일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0.8.5.일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0.8.5.일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0.8.5.일 시행)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2021.2.5일 시행)
7 ▷ 정부, 중소·중견·소상공인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 발표
14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17 ▷ 정부,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발표
▷ 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19 ▷ 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지원방안」 발표
20 ▷ 정부,「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
24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개선방안 마련
26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28 ▷ 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3월

3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3.3일 시행)
4 ▷ 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7.1일 시행)
13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시행
1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발표
19 ▷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
24 ▷ 정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2021.3.25일 시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3.25일 시행)
25 ▷ 정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발표
26 ▷ 정부, 「외화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확정규정)」개정 추진
▷ 금융위원회,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의 합리적 개선방안」마련
30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발표
▷ 금융위원회,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발표
3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3.31.일 시행)

4월

1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발표
8 ▷ 정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발표
▷ 정부,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9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발표]
14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4.14.일 시행)
16 ▷ 금융감독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22 ▷ 정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발표
23 ▷ 정부,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마련

27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29 ▷ 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마련

5월

1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2020.5.1일 시행)
7 ▷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발표
12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 5.12일 시행)
14 ▷ 정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 」 발표
▷ 정부,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발표
15 ▷ 정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19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2020.5.19.일 시행)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2020.5.19일 시행)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2020.8.20일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2020.8.20일 시행)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2020.11.20일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0.11.20일 시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5.20일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5.20일 시행)
20 ▷ 정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 마련
▷ 정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5.27일 시행)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0.11.27일 시행)
2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6월

11 ▷ 정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발표
▷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 발표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7.1일 시행)
17 ▷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19 ▷ 정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발표
▷ 정부,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마련
23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6.23일 시행)
25 ▷ 정부,「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29 ▷ 금융위원회,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 승인
30 ▷ 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추진

7월

10 ▷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14 ▷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2 ▷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23 ▷ 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24 ▷ 금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30 ▷ 정부, 「'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정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발표
31 ▷ 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8월

4 ▷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2.4일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8.5일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8.5일 시행)

7 ▷ 기획재정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마련

13 ▷ 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 정부, 코로나19 대응 및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19 ▷ 금융위원회,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20 ▷ 정부,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 계획」 발표

▷ 정부, 「디지털 기반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2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8.27일 시행)

27 ▷ 정부,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 방안」 발표

▷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마련

9월

1 ▷ 기획재정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3 ▷ 정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지원방안」 발표

10 ▷ 정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14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수출지원 추진방향」 마련

15 ▷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17 ▷ 정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마련

21 ▷ 정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

22 ▷ 국회,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29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0.1일 시행)

10월

5 ▷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마련

13 ▷ 정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확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0.13일 시행)

16 ▷ 정부,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발표
19 ▷ 금융위원회,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20 ▷ 정부,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21 ▷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마련
27 ▷ 정부,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마련
▷ 정부,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발표

11월

12 ▷ 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정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
13 ▷ 정부,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발표
16 ▷ 금융위원회·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확정
17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1.20일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1.20일 시행)
19 ▷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추진
▷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24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11.27일 시행)
26 ▷ 정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발표
▷ 정부,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마련

12월

1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일 시행)
7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8 ▷ 「보험업법」 일부개정 (2020.12.8일 시행)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 (2020.12.10일 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20.12.8일 시행)
17 ▷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발표

21 ▷ 정부, 「BIG3 산업 분야별 정책 추진상황 및 '21년 계획」 발표

22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22일 시행)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2021.1.1일 시행)

23 ▷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9 ▷ 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2021.6.30일 시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6.30일 시행)

國 外

1월

➤ 아시아

9 ▷ 중국국가통계국, 12월 CPI(전년동기대비) 4.5%(11월 4.5%) 상승
14 ▷ 중국해관총서, 12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1.3%)보다 상승한 7.9% 기록
16 ▷ 중국인민은행, 12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7%(11월 8.2%)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0개시 및 38개시(11월 44개시 및 32개시
▷ 일본, 11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월대비) 18.0%
17 ▷ 중국국가통계국,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019.4/4분기 6.0%,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9%(11월 6.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4%(11월 5.2%),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0%(11월 8.0%)
23 ▷ 일본, 12월 수출 증가율(전월대비) 0.5%
24 ▷ 일본, 12월 CPI 상승률(전월대비) 0.1%
31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0으로 기준치(50.0)와 동일 (12월 50.2)
▷ 일본,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월대비) 1.3%
▷ 일본,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월대비) 0.2%

➤ 아메리카

10 ▷ 미 노동통계국, 12월 실업률 3.5%
14 ▷ 미 노동통계국, 1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3%
16 ▷ 미 인구통계국, 1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7%
17 ▷ 미 연준, 1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3%
29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50%~ 1.75%로 동결
30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2.1%

➤ 유럽·아프리카

7 ▷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잠정치) 1.3%
▷ 유로,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0%
9 ▷ 유로, 11월 실업률 7.5%
15 ▷ 유로, 1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2%
17 ▷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3%
▷ 유로, 11월 경상수지 339억 유로 흑자
23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30 ▷ 유로, 12월 실업률 7.4%
31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4%
▷ 유로, 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잠정치) 1.4%

2월

➤ 아시아

10 ▷ 일본, 12월 경상수지 5,240억엔 흑자
▷ 중국국가통계국, 1월 CPI(전년동기대비) 5.4%(2019.12월 4.5%) 상승
17 ▷ 일본,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1차 속보치) -1.6%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7개시 및 33개시(11월 50개시 및 38개시)
19 ▷ 일본, 12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12.5%
▷ 일본, 1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3.7%
20 ▷ 중국인민은행, 1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4%(2019.12월 8.7%)
21 ▷ 일본, 1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7%
28 ▷ 일본, 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0.8%
▷ 일본, 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0.6%
▷ 일본, 1월 실업률 2.4%
29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35.7으로 기준치(50.0)와 이하 (1월 50.0)

➤ 아메리카

7 ▷ 미 노동통계국, 1월 실업률 3.6%
13 ▷ 미 노동통계국, 1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2.5%
14 ▷ 미 인구통계국, 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0.3%
▷ 미 연준, 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3%
27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2.1%

➤ 유럽·아프리카

5 ▷ 유로,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6%
14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0.2%
19 ▷ 유로, 12월 경상수지 326억 유로 흑자
21 ▷ 유로, 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4%

3월

➤ 아시아

9 ▷ 일본,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2차 속보치) -1.8%
▷ 일본, 1월 경상수지 6,123억엔 흑자
10 ▷ 중국국가통계국, 12월 CPI(전년동기대비) 4.5%(11월 4.5%)
14 ▷ 중국해관총서, 12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 (-1.3%)보다 상승한 8.1% 기록
16 ▷ 중국인민은행, 12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8.7%(11월 8.2%)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 수가 각각 50 개시 및 38개시(11월 44개시 및 32개시
▷ 일본, 1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2.9%
▷ 일본, 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 치) 1.5%
17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 년동기대비 6.9%(11월 6.2%), 고정자산투 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4%(11월 5.2%),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 기대비 8.0%(11월 8.0%)
▷ 중국국가통계국, 2019년 1/4분기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0%(3/4분기 6.0%), 2019년 GDP 성장률 전년대비 6.1%(2018 년 6.7%)

▷ 일본, 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1.0%

18 ▷ 일본, 2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3.4%

▷ 일본, 2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4%

31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 수(PMI) 50.0로 기준치(50.0)와 동일 (12월 50.2)

▷ 일본, 2월 실업률 2.4%

▷ 일본, 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0.4%

▷ 일본, 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0.6%

➤ 아메리카

3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 ~ 0.50%로 인하

6 ▷ 미 노동통계국, 2월 실업률 3.5%

11 ▷ 미 노동통계국, 2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 비) 2.3%

15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 로 인하

17 ▷ 미 인구통계국, 2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 기대비) -0.4%

▷ 미 연준, 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6%

19 ▷ 미 상무부, 4/4분기 경상수지 1,098억달러 적자

26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연율, 확정치) 2.1%

➤ 유럽·아프리카

3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 치) 1.2%

4 ▷ 유로,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10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0.5%

12 ▷ 유로, 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2.3%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 (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 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8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 치) 1.2%

▷ ECB, 전염병 긴급자산매입 프로그램 (PEPP)을 실시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증권 (7,500억유로)을 매입하기로 결정

20 ▷ 유로, 1월 경상수지 흑자 347억유로

31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잠정 치) 0.7%

4월

➤ 아시아

8 ▷ 일본, 2월 경상수지 31,688억엔 흑자
▷ 일본, 2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2.3%
10 ▷ 중국국가통계국, 3월 CPI(전년동기대비) 4.3%(2월 5.2%)
▷ 중국인민은행, 3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1%(2월 8.8%)
14 ▷ 중국해관총서, 3월중 수출 증감율 -6.6% 기록 (1~2월 누계-17.2%)
15 ▷ 일본, 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0.5%
16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38개시 및 32개시(2월 21개시 및 14개시
17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2월 -6.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6.1%(2월 -24.5%),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5.8%(1~2월 누계 -20.5%)
▷ 중국국가통계국,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8% (19.4/4분기 6.0%)
▷ 일본, 2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0.3%
20 ▷ 일본, 3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4.1%
24 ▷ 일본, 3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4%
28 ▷ 일본, 3월 실업률 2.5%
▷ 일본 총무성, 3월 실업률 2.5%
30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8로 기준치(50.0) 상회 (3월 52.0)
▷ 일본, 3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3.7%
▷ 일본, 3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4.5%

➤ 아메리카

3 ▷ 미 노동통계국, 3월 실업률 4.4%
10 ▷ 미 노동통계국, 3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5%
15 ▷ 미 연준, 3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5.4%
▷ 미 인구통계국, 3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4.5%

29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4.8%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 유럽·아프리카

1 ▷ 유로, 2월 실업률 7.3%
3 ▷ 유로, 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9%
8 ▷ 유로, 2019.4/4분기 경상수지 흑자 816억유로
17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7%
20 ▷ 유로, 2월 경상수지 흑자 402억유로
▷ 유로, 2019.4/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확정치) 0.4%
30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30 ▷ 유로, 3월 실업률 7.4%
▷ 유로, 1/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4.4%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4%

5월

➤ 아시아

7 ▷ 중국해관총서, 4월중 수출 증감율 3.5% 기록 (3월 -6.6%)
11 ▷ 중국인민은행, 4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1%(3월 10.1%)
12 ▷ 중국국가통계국, 4월 CPI(전년동기대비) 3.3%(3월 4.3%)
13 ▷ 일본, 3월 경상수지 19,710억엔 흑자
15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3.9%(3월 -1.1%),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3%(3월 -16.1%),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5%(3월 -15.8%)
18 ▷ 일본,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1차 속보치) -0.9%
▷ 일본, 3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4.6%
19 ▷ 일본, 3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3.7%
20 ▷ 일본, 3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0.4%
21 ▷ 일본, 4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10.4%

22 ▷ 일본, 4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1%
29 ▷ 일본, 4월 실업률 2.6%
▷ 일본, 4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9.1%
▷ 일본, 4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9.6%
31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6로 기준치(50.0) 상회 (4월 50.8)

➤ 아메리카

8 ▷ 미 노동통계국, 4월 실업률 14.7%
12 ▷ 미 노동통계국, 4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0.3%
15 ▷ 미 인구통계국,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7.2%
▷ 미 연준, 4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11.2%
28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5.0%

➤ 유럽·아프리카

6 ▷ 유로, 3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2%
13 ▷ 유로, 3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1.3%
15 ▷ 유로, 2020.1/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4.2%
20 ▷ 유로, 3월 경상수지 흑자 274억 유로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3%
29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1%

6월

➤ 아시아

7 ▷ 중국해관총서, 5월중 수출 증감률 -3.3%(4월 -3.4%)
8 ▷ 일본,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2차 속보치) -0.6%
▷ 일본, 4월 경상수지 2,627억엔 흑자
10 ▷ 중국국가통계국, 5월 CPI(전년동기대비) 상승률(4월 3.3%)
▷ 중국인민은행, 5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1%(4월 11.1%)
▷ 일본, 4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12.0%

12 ▷ 일본, 4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9.8%

14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4%(4월 3.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4월 -10.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8%(4월 -7.5%)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7개시 및 41개시(4월 50개시 및 37개시)

▷ 일본, 4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9.9%

17 ▷ 일본, 5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5.8%

19 ▷ 일본, 5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1%

29 ▷ 일본, 5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2.1%

30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9로 기준치(50) 상회(5월 50.6)

▷ 일본, 5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8.4%

▷ 일본, 5월 실업률 2.9%

➤ 아메리카

5 ▷ 미 노동통계국, 5월 실업률 13.3%

10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 미 노동통계국, 5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1%

16 ▷ 미 인구통계국, 5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2.4%

▷ 미 연준, 5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1.4%

19 ▷ 미 상무부, 1/4분기 경상수지 1,042억달러 적자

25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5.0%

➤ 유럽·아프리카

3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2%

4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유로, 4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12.1%

9 ▷ 유로, 2020.1/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확정치) -13.6%

12 ▷ 유로, 4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17.1%

17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1%
19 ▷ 유로, 4월 경상수지 흑자 144억유로
19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3%

7월

➤ 아시아

7 ▷ 중국해관총서, 5월중 수출 증감률 -3.3%(4월 -3.4%)
8 ▷ 일본, 5월 경상수지 11,768억엔 흑자
9 ▷ 일본, 5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1.7%
10 ▷ 중국국가통계국, 5월 CPI(전년동기대비) 2.4% 상승(4월 3.3%)
▷ 중국인민은행, 5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1.1%(4월 11.1%)
14 ▷ 일본, 5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8.9%
15 ▷ 일본, 5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1.9%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4%(4월 3.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4월 -10.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8%(4월 -7.5%)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7개시 및 41개시(4월 50개시 및 37개시
20 ▷ 일본, 6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1.4%
21 ▷ 일본, 6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1%
30 ▷ 일본, 6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13.1%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9로 기준치(50) 상회(5월 50.6)
▷ 일본, 6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2.7%

➤ 아메리카

2 ▷ 미 노동통계국, 6월 실업률 11.1%
14 ▷ 미 노동통계국, 6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0.6%
15 ▷ 미 연준, 6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5.4%
16 ▷ 미 인구통계국, 6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7.5%

29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30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32.9%

➤ 유럽·아프리카

2 ▷ 유로, 5월 실업률 7.7%
6 ▷ 유로, 5월 소매판매(전기대비) 20.3%
14 ▷ 유로, 5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2.4%
16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
17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3%
20 ▷ 유로, 5월 경상수지 흑자 79.5억유로
30 ▷ 유로, 6월 실업률 7.8%
31 ▷ 유로, 2020.2/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잠정치) -40.3%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4%

8월

➤ 아시아

3 ▷ 일본,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수정치) -0.6%
7 ▷ 중국해관총서, 7월중 수출 증감률 7.2%(6월 0.5%)
10 ▷ 중국국가통계국, 7월 CPI(전년동기대비) 2.7% 상승(6월 2.5%)
11 ▷ 중국인민은행, 7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7%(6월 11.1%)
▷ 일본, 6월 경상수지 1,675억엔 흑자
14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8%(6월 4.8%),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6%(6월 -3.1%),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6월 -1.8%)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9개시 및 45개시(5월 61개시 및 50개시)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도시조사실업률 5.7% (6월 5.7%)
▷ 일본, 6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13.1%

17 ▷ 일본, 6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1.9%
▷ 일본,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1차 속보치) -7.8%
19 ▷ 일본, 6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 -7.6%
▷ 일본, 7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4.7%
21 ▷ 일본, 7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3%
3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0로 기준치(50) 상회(7월 51.1)
▷ 일본, 7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3.3%
▷ 일본, 7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8.0%

➤ 아메리카

7 ▷ 미 노동통계국, 7월 실업률 10.2%
12 ▷ 미 노동통계국, 7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0%
14 ▷ 미 인구통계국,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전기대비) 1.2%
▷ 미 연준, 7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3.0%
27 ▷ FOMC,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31.7%

➤ 유럽·아프리카

5 ▷ 유로, 6월 소매판매(전기대비) 5.3%
12 ▷ 유로, 6월 산업생산(전기대비) 9.1%
14 ▷ 유로, 2020.2/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잠정치) -40.3%
19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4%
▷ 유로, 6월 경상수지 흑자 207억유로

9월

➤ 아시아

7 ▷ 중국해관총서, 8월중 수출 증감률 9.5%(7월7.2%)
8 ▷ 일본,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2차 속보치) -7.9%
▷ 일본, 7월 경상수지 14,683억엔 흑자

9 ▷ 중국국가통계국, 8월 CPI(전년동기대비)2.4% 상승(7월 2.7%)
10 ▷ 일본, 7월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전기대비)6.3%
11 ▷ 중국인민은행, 8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4%(7월 10.7%)
14 ▷ 일본, 7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8.7%
▷ 일본, 7월 3차산업활동 증가율(전기대비)-0.5%
15 ▷ 일본, 7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3.4%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6%(7월 4.8%),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0.3%(7월 -1.6%),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0.5%(6월 -1.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9개시 및47개시(7월 59개시 및 45개시)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도시조사실업률5.6%(7월 5.7%)
16 ▷ 일본, 8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5.9%
18 ▷ 일본, 8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2%
30 ▷ 일본, 8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4.6%
▷ 일본, 8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1.7%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5로 기준치(50) 상회(8월 51.0)

➤ 아메리카

3 ▷ 미 노동통계국, 8월 실업률 8.4%
11 ▷ 미 노동통계국, 8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1.3%
15 ▷ 미 연준, 8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4%
16 ▷ 미 인구통계국,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18 ▷ 미 상무부, 2/4분기 경상수지 1,705억달러적자
30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31.4%

➤ 유럽·아프리카

1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2%
▷ 유로, 7월 실업률 7.9%

3 ▷ 유로, 7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3%
8 ▷ 유로, 2020.2/4분기 GDP(전기대비연율, 확정치) -39.4%
10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4 ▷ 유로, 7월 산업생산(전기대비) 4.1%
17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2%
18 ▷ 유로, 7월 경상수지 흑자 166억유로

10월

➤ 아시아

8 ▷ 일본, 8월 경상수지 21,028억엔 흑자
12 ▷ 일본, 8월 민간기계수주 증가율(전기대비) 0.2%
13 ▷ 중국해관총서, 9월중 수출 증감률 11.4%(8월 9.9%)
14 ▷ 일본, 8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1.0%
15 ▷ 일본, 8월 3차산업활동 증가율(전기대비) 0.8%
▷ 일본, 8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4.6%
▷ 중국국가통계국, 9월 CPI(전년동기대비) 1.7% 상승(8월 2.4%)
16 ▷ 중국인민은행, 9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9%(8월 10.4%)
19 ▷ 일본, 9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4.5%
▷ 중국국가통계국, 2020년 3/4분기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9%(2/4분기 3.2%)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9%(8월 5.6%),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0.8%(8월 -0.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3.3%(8월 0.5%)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5개시 및 50개시(8월 59개시 및 47개시)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도시조사실업률 5.4%(8월 5.6%)
23 ▷ 일본, 9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0%
29 ▷ 일본, 9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0.1%
30 ▷ 일본, 9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4.0%

31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4로 기준치(50) 상회(9월 51.5)

➤ 아메리카

2 ▷ 미 노동통계국, 9월 실업률 7.9%
13 ▷ 미 노동통계국, 9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4%
16 ▷ 미 연준, 9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6%
▷ 미 인구통계국,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9%
29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33.1%

➤ 유럽·아프리카

1 ▷ 유로, 8월 실업률 8.1%
5 ▷ 유로,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4.4%
14 ▷ 유로, 8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7%
16 ▷ 유로, 9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3%
20 ▷ 유로, 8월 경상수지 흑자 199억유로
29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30 ▷ 유로, 2020.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61.1%
▷ 유로, 10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3%
▷ 유로, 9월 실업률 8.3%

11월

➤ 아시아

7 ▷ 중국해관총서, 10월중 수출 증감률 11.4%(9월 9.9%)
10 ▷ 일본, 9월 경상수지 16,602억엔 흑자
▷ 중국국가통계국, 10월 CPI(전년동기대비) 0.5% 상승(9월 1.7%)
11 ▷ 중국인민은행, 10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5%(9월 10.9%)
12 ▷ 일본, 9월 민간기계수주 증가율(전기대비) -4.4%
▷ 일본, 9월 3차산업활동 증가율(전기대비) 1.8%

13 ▷ 일본, 9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0.1%
16 ▷ 일본,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1차 속보치) 5.0%
▷ 일본, 9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3.9%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9%(9월 6.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8%(9월 0.8%),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4.3%(9월 3.3%)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5개시 및 39개시(9월 55개시 및 50개시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도시조사실업률 5.3%(9월 5.4%)
18 ▷ 일본, 10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2.6%
20 ▷ 일본, 10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4%
30 ▷ 일본,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0.4%
▷ 일본,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3.8%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2.1로 기준치(50) 상회(10월 51.4)

➤ 아메리카

6 ▷ 미 노동통계국, 10월 실업률 6.9%
12 ▷ 미 노동통계국, 10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2%
17 ▷ 미 연준, 10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1.1%
▷ 미 인구통계국, 10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3%
25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33.1%

➤ 유럽·아프리카

5 ▷ 유로,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2.0%
12 ▷ 유로, 9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4%
13 ▷ 유로, 2020.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60.5%
18 ▷ 유로, 10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3%
19 ▷ 유로, 9월 경상수지 흑자 252억유로

12월

➤ 아시아

1 ▷ 일본, 10월 실업률 3.1%

8 ▷ 일본,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2차 속보치) 5.3%

▷ 일본, 10월 경상수지 21,447억엔 흑자

9 ▷ 일본, 10월 민간기계수주 증가율(전기대비) 17.1%

▷ 중국국가통계국, 11월 CPI(전년동기대비) 0.5% 하락(10월 +0.5%)

▷ 중국인민은행, 11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7%(10월 10.5%)

14 ▷ 일본, 10월 3차산업활동 증가율(전기대비) 1.0%

▷ 일본,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4.0%

15 ▷ 일본,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확정치) 0.5%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0%(10월 6.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6%(10월 1.8%),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5.3%(10월 4.3%)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36개시 및 44개시(10월 45개시 및 39개시)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도시조사실업률 5.2%(10월 5.3%)

16 ▷ 일본, 11월 수출 증가율(전기대비) -0.3%

18 ▷ 일본, 11월 C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9%

23 ▷ 중국해관총서, 11월중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1.1%(10월 11.4%)

25 ▷ 일본,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기대비) -2.0%

▷ 일본, 11월 실업률 2.9%

28 ▷ 일본, 11월 산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0.0%

31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9로 기준치(50) 상회(11월 52.1)

➤ 아메리카

4 ▷ 미 노동통계국, 11월 실업률 6.7%

10 ▷ 미 노동통계국, 11월 CPI상승률(전년동월대비) 1.2%

15 ▷ 미 연준, 1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4%

16 ▷ 미 인구통계국,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0.25%로 동결
18 ▷ 미 상무부, 3/4분기 경상수지 1,785억달러 적자
22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33.4%

➤ 유럽·아프리카

1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0.3%
2 ▷ 유로, 10월 실업률 8.4%
3 ▷ 유로, 10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5%
10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5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4 ▷ 유로, 10월 산업생산(전기대비) 2.1%
17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3%
18 ▷ 유로, 10월 경상수지 266억유로 흑자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1. 고 용

(천명, %)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2016	43,606	27,418	26,409	1,009	16,187	62.9	66.1 (41.7)	3.7(9.8)
2017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66.6 (42.1)	3.7(9.8)
2018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66.6 (42.7)	3.8(9.5)
2019	44,504	28,186	27,123	1,063	16,318	63.3	66.8 (43.5)	3.8(8.9)
2020	44,785	28,012	26,904	1,108	16,773	62.5	65.9 (42.2)	4.0(9.0)
2018. Ⅲ	44,212	28,080	27,015	1,065	16,131	63.5	66.7 (43.1)	3.8(9.4)
Ⅳ	44,287	27,912	26,971	942	16,375	63.0	66.8 (42.9)	3.4(8.3)
2019. Ⅰ	44,370	27,702	26,461	1,241	16,668	62.4	66.0 (42.9)	4.5(9.7)
Ⅱ	44,466	28,432	27,256	1,176	16,034	63.9	66.9 (43.2)	4.1(10.6)
Ⅲ	44,550	28,328	27,382	946	16,222	63.6	67.1 (43.9)	3.3(8.1)
Ⅳ	44,629	28,283	27,393	891	16,346	63.4	67.3 (44.1)	3.1(7.1)
2020. Ⅰ	44,692	27,911	26,749	1,162	16,781	62.5	66.1 (42.6)	4.2(8.8)
Ⅱ	44,752	28,075	26,849	1,226	16,677	62.7	65.6 (41.7)	4.4(10.1)
Ⅲ	44,812	28,068	27,068	1,001	16,744	62.6	65.9 (42.6)	3.6(8.7)
Ⅳ	44,884	27,995	26,952	1,043	16,889	62.4	65.8 (42.0)	3.7(8.2)
2018.8	44,211	28,039	26,907	1,133	16,172	63.4	66.5 (42.9)	4.0(10.0)
9	44,237	28,079	27,055	1,024	16,158	63.5	66.8 (42.9)	3.6(8.8)
10	44,262	28,063	27,090	973	16,199	63.4	66.8 (42.9)	3.5(8.4)
11	44,284	28,092	27,184	909	16,192	63.4	67.1 (43.2)	3.2(7.9)
12	44,316	27,582	26,638	944	16,733	62.2	66.5 (42.7)	3.4(8.6)
2019. 1	44,319	27,455	26,232	1,224	16,864	61.9	65.9 (42.9)	4.5(8.9)
2	44,382	27,649	26,346	1,303	16,734	62.3	65.8 (42.9)	4.7(9.5)
3	44,409	28,002	26,805	1,197	16,408	63.1	66.2 (42.9)	4.3(10.8)
4	44,444	28,284	27,038	1,245	16,160	63.6	66.5 (42.9)	4.4(11.5)
5	44,460	28,468	27,322	1,145	15,992	64.0	67.1 (43.6)	4.0(9.9)
6	44,495	28,545	27,408	1,137	15,951	64.2	67.2 (43.2)	4.0(10.4)
7	44,530	28,480	27,383	1,097	16,050	64.0	67.1 (44.1)	3.9(9.8)
8	44,546	28,216	27,358	858	16,330	63.3	67.0 (44.0)	3.0(7.2)
9	44,573	28,288	27,404	884	16,285	63.5	67.1 (43.7)	3.1(7.3)
10	44,601	28,373	27,509	864	16,228	63.6	67.3 (44.3)	3.0(7.2)
11	44,625	28,380	27,515	866	16,245	63.6	67.4 (44.3)	3.1(7.0)
12	44,661	28,095	27,154	942	16,566	62.9	67.1 (43.8)	3.4(7.3)
2020. 1	44,665	27,952	26,800	1,153	16,713	62.6	66.7 (44.0)	4.1(7.7)
2	44,698	27,991	26,838	1,153	16,708	62.6	66.3 (42.9)	4.1(9.0)
3	44,712	27,789	26,609	1,180	16,923	62.2	65.4 (41.0)	4.2(9.9)
4	44,725	27,734	26,562	1,172	16,991	62.0	65.1 (40.9)	4.2(9.3)
5	44,756	28,209	26,930	1,278	16,548	63.0	65.8 (42.2)	4.5(10.2)
6	44,775	28,283	27,055	1,228	16,492	63.2	65.9 (42.0)	4.3(10.7)
7	44,795	28,244	27,106	1,138	16,551	63.1	66.0 (42.7)	4.0(9.7)
8	44,813	27,949	27,085	864	16,864	62.4	65.9 (42.9)	3.1(7.7)
9	44,829	28,012	27,012	1,000	16,817	62.5	65.7 (42.1)	3.6(8.9)
10	44,852	28,116	27,088	1,028	16,736	62.7	65.9 (42.3)	3.7(8.3)
11	44,884	28,208	27,241	967	16,675	62.8	66.3 (42.4)	3.4(8.1)
12	44,916	27,661	26,526	1,135	17,255	61.6	65.3 (41.3)	4.1(8.1)

* 고용률 : 15-64세(OECD 기준)

(천명)

	산업별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주)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17	26,725	4,566	1,988	18,798	1,279	316	△18	119	209	6
2018	26,822	4,510	2,034	18,849	1,340	97	△56	47	51	62
2019	27,123	4,429	2,020	19,197	1,395	301	△81	△15	348	55
2020	26,904	4,376	2,016	18,981	1,445	△218	△53	△4	△216	50
2018. II	27,019	4,487	2,031	18,951	1,457	101	△91	16	125	52
III	27,015	4,479	2,035	18,932	1,481	17	△91	45	6	62
IV	26,971	4,499	2,094	18,933	1,367	88	△88	56	55	78
2019. I	26,461	4,432	1,970	18,819	1,158	177	△143	△7	240	101
II	27,256	4,424	2,030	19,246	1,475	237	△64	△1	295	18
III	27,382	4,403	2,034	19,323	1,538	366	△76	△1	391	58
IV	27,393	4,458	2,044	19,399	1,409	422	△41	△50	466	43
2020. I	26,749	4,438	1,962	19,005	1,255	288	6	△8	186	98
II	26,849	4,369	1,969	18,894	1,534	△407	△55	△61	△353	60
III	27,067	4,346	2,043	19,044	1,548	△314	△57	9	△279	10
IV	26,952	4,351	2,090	18,981	1,443	△441	△107	45	△418	34
2018.8	26,907	4,439	2,006	18,889	1,484	3	△105	53	△12	69
9	27,055	4,513	2,060	18,909	1,490	45	△42	45	△5	57
10	27,090	4,515	2,090	18,915	1,493	64	△45	60	5	57
11	27,184	4,490	2,118	19,059	1,438	165	△91	73	114	84
12	26,638	4,491	2,074	18,824	1,169	34	△127	35	46	94
2019. 1	26,232	4,439	1,969	18,649	1,093	19	△170	△19	113	107
2	26,346	4,411	1,961	18,775	1,114	263	△151	△3	311	117
3	26,805	4,446	1,980	19,033	1,265	250	△108	0	295	79
4	27,038	4,421	1,993	19,136	1,406	171	△52	△30	253	13
5	27,322	4,434	2,041	19,270	1,497	259	△73	6	320	16
6	27,408	4,416	2,056	19,333	1,520	281	△66	22	311	23
7	27,383	4,390	2,052	19,335	1,523	299	△94	12	338	55
8	27,358	4,415	2,031	19,289	1,539	452	△24	25	399	55
9	27,404	4,403	2,020	19,344	1,553	348	△111	△39	435	63
10	27,509	4,434	2,039	19,401	1,551	419	△81	△51	486	59
11	27,515	4,464	2,047	19,464	1,460	331	△26	△70	405	22
12	27,154	4,476	2,047	19,332	1,217	516	△15	△28	508	47
2020. 1	26,800	4,447	1,974	19,118	1,172	568	8	5	468	79
2	26,838	4,445	1,951	19,157	1,194	492	34	△10	382	80
3	26,609	4,423	1,960	18,740	1,399	△195	△23	△20	△294	134
4	26,562	4,377	1,934	18,692	1,479	△476	△44	△59	△444	73
5	26,930	4,377	1,979	18,937	1,551	△392	△57	△61	△333	54
6	27,055	4,351	1,995	19,053	1,572	△352	△65	△62	△280	52
7	27,106	4,337	2,029	19,096	1,559	△277	△53	△23	△240	36
8	27,085	4,365	2,025	19,074	1,536	△274	△50	△6	△215	△3
9	27,012	4,335	2,076	18,962	1,549	△392	△68	55	△382	△3
10	27,088	4,336	2,075	19,018	1,574	△421	△98	37	△383	23
11	27,241	4,351	2,124	19,197	1,479	△273	△113	77	△266	19
12	26,526	4,366	2,069	18,728	1,276	△628	△110	23	△604	59

주) 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13년 이전 산업별 통계 미제공 → 비교곤란(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 천명)				명목임금[1] (전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2015=100)	
										활동상태별		구직 단념자				
	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쉬었음	취업 준비		증가율 (%, 전체)	증가율 (%, 상용)	생산성 지수[2]	증가율 (%)
2017	316	265	366	△132	31	51	68	△17	16,183	1,736	669	481	3.3	2.6	107.7	4.7
2018	97	150	345	△141	△54	△52	△44	△9	16,287	1,855	693	524	5.3	5.1	111.0	3.1
2019	301	357	444	△56	△31	△56	△32	△24	16,318	2,092	748	533	3.4	3.1	113.5	2.3
2020	△218	△108	305	△313	△101	△110	△75	△35	16,773	2,374	791	605	-	-	-	-
2018. II	101	113	335	△109	△113	△13	△3	△10	16,017	1,756	697	478	4.2	3.8	110.0	3.2
III	17	65	293	△162	△67	△48	△55	7	16,131	1,832	693	545	4.9	4.7	115.1	7.5
IV	88	192	342	△170	19	△104	△93	△12	16,375	1,879	709	550	4.1	3.9	115.8	△0.9
2019. I	177	223	334	△123	12	△45	△39	△6	16,668	2,102	780	575	2.9	2.6	108.3	4.9
II	237	295	347	△53	1	△58	△26	△32	16,034	1,980	749	513	3.8	3.6	109.5	△0.5
III	366	427	491	△33	△31	△61	△30	△30	16,222	2,130	734	533	3.4	3.1	116.1	0.9
IV	422	482	603	△14	△108	△60	△34	△26	16,346	2,156	727	508	3.5	3.0	120.0	3.6
2020. I	288	311	580	△155	△114	△23	△26	3	16,781	2,353	770	553	△0.1	△0.7	110.4	1.9
II	△407	△262	381	△499	△145	△145	△103	△41	16,677	2,330	813	575	1.2	0.1	112.5	2.7
III	△314	△151	241	△338	△54	△163	△104	△59	16,744	2,398	802	636	1.1	0.6	119.2	2.7
IV	△441	△330	19	△258	△91	△111	△67	△44	16,889	2,416	777	657	-	-	-	-
2018.7	5	40	272	△108	△124	△35	△30	△5	16,064	1,886	678	546	5.8	5.6	-	-
8	3	39	278	△187	△52	△36	△53	16	16,172	1,824	670	533	4.9	4.7	-	-
9	45	117	330	△190	△24	△72	△83	11	16,158	1,786	732	556	4.1	4.1	-	-
10	64	199	350	△138	△13	△135	△105	△30	16,199	1,789	724	526	3.3	3.1	-	-
11	165	248	343	△116	21	△83	△78	△5	16,192	1,820	701	535	3.2	3.0	-	-
12	34	128	333	△256	51	△94	△94	0	16,733	2,029	702	588	5.5	5.4	-	-
2019. 1	19	92	279	△212	25	△73	△61	△12	16,864	2,141	751	605	8.7	8.6	-	-
2	263	296	299	△43	40	△33	△46	13	16,734	2,166	792	583	△3.3	△3.7	-	-
3	250	280	423	△114	△29	△29	△11	△18	16,408	2,000	796	538	3.6	3.4	-	-
4	171	258	324	△45	△21	△88	△42	△46	16,160	1,971	740	487	4.1	4.0	-	-
5	259	317	330	△30	17	△58	△41	△18	15,992	1,963	764	538	4.0	3.8	-	-
6	281	309	388	△85	6	△28	5	△33	15,951	2,007	744	514	3.3	3.1	-	-
7	299	349	438	△87	△3	△49	△26	△24	16,050	2,094	741	526	2.8	2.7	-	-
8	452	514	493	△2	24	△62	△19	△43	16,330	2,173	744	542	4.3	4.1	-	-
9	348	419	541	△10	△113	△70	△47	△23	16,285	2,125	717	532	3.2	2.6	-	-
10	419	474	575	△21	△81	△55	△42	△13	16,228	2,112	722	504	4.9	4.5	-	-
11	331	428	593	△54	△111	△97	△48	△49	16,245	2,134	736	487	3.8	3.3	-	-
12	516	544	641	34	△131	△29	△11	△18	16,566	2,222	723	534	2.0	1.5	-	-
2020. 1	568	570	664	△32	△62	△2	△11	9	16,713	2,336	728	542	3.8	3.7	-	-
2	492	497	616	△13	△107	△5	3	△8	16,708	2,357	770	535	△6.6	△7.2	-	-
3	△195	△134	459	△420	△173	△62	△70	8	16,923	2,366	813	582	2.3	1.1	-	-
4	△476	△382	400	△587	△195	△94	△72	△22	16,991	2,408	835	611	1.6	0.4	-	-
5	△392	△260	393	△501	△152	△132	△82	△50	16,548	2,286	821	578	1.2	0.2	-	-
6	△352	△145	349	△408	△86	△208	△155	△53	16,492	2,296	783	538	0.7	△0.2	-	-
7	△277	△92	346	△395	△44	△185	△128	△57	16,551	2,319	810	580	1.2	0.7	-	-
8	△274	△113	282	△318	△78	△161	△106	△54	16,864	2,462	821	682	0.1	△0.5	-	-
9	△392	△249	96	△303	△41	△143	△78	△65	16,817	2,413	775	645	1.9	1.5	-	-
10	△421	△306	14	△261	△59	△115	△78	△37	16,736	2,359	780	617	0.3	0.0	-	-
11	△273	△169	38	△162	△44	△105	△59	△45	16,675	2,353	776	631	-	-	-	-
12	△628	△516	5	△351	△170	△112	△63	△50	17,255	2,536	776	725	-	-	-	-

주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사업체노동력조사) 주2」 노동생산성지수 =【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지수】×100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15 = 100, %, 전년비,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16	101.0	1.0	101.6	1.6	103.8	3.8	99.5	△0.5	101.9	1.9	101.5	1.5	102.7	2.7
2017	102.9	1.9	103.1	1.5	109.5	5.5	100.9	1.4	103.5	1.6	102.5	1.0	105.3	2.5
2018	104.5	1.5	104.3	1.2	113.6	3.7	102.2	1.3	104.2	0.6	102.7	0.2	108.0	2.5
2019	104.9	0.4	105.2	0.9	111.7	△1.7	102.1	△0.2	104.0	△0.1	102.2	△0.5	110.0	1.9
2020	105.4	0.5	106.0	0.7	119.1	6.7	101.8	△0.2	104.3	0.2	100.2	△1.9	111.3	1.2
2018.5	104.3	1.5	104.5	1.3	110.2	1.7	102.3	1.5	104.2	0.6	102.8	0.2	108.2	2.8
6	104.1	1.5	104.4	1.2	107.5	0.9	102.6	1.6	104.2	0.6	102.7	0.3	107.8	2.8
7	103.9	1.1	104.2	0.8	108.1	1.2	102.3	1.8	104.2	0.5	102.7	0.1	108.3	2.4
8	104.9	1.4	104.3	0.9	118.1	4.6	102.5	1.8	104.2	0.5	102.6	0.0	108.7	2.5
9	105.7	2.1	104.7	1.3	124.9	8.6	102.7	1.8	104.2	0.4	102.5	0.0	108.5	2.7
10	105.5	2.0	104.7	1.2	119.4	8.5	103.1	1.8	104.2	0.4	102.5	0.1	108.7	2.5
11	104.7	2.0	104.6	1.4	112.7	7.6	102.7	1.4	104.2	0.3	102.4	0.2	108.4	2.8
12	104.4	1.3	104.6	1.3	112.8	5.2	101.6	0.1	104.2	0.3	102.3	0.1	108.4	2.5
2019.1	104.2	0.8	104.8	1.2	112.5	2.5	100.8	△0.7	104.2	0.2	102.7	△0.3	108.8	2.5
2	104.7	0.5	105.2	1.3	113.6	△1.4	101.0	△0.8	104.2	0.1	102.7	△0.3	109.8	2.5
3	104.5	0.4	105.1	0.9	111.4	△0.3	101.2	△0.7	104.1	0.1	102.5	△0.3	109.6	2.0
4	104.9	0.6	105.3	0.9	112.9	0.7	101.8	△0.1	104.1	0.0	102.5	△0.3	109.8	1.7
5	105.1	0.7	105.4	0.8	111.5	1.2	102.6	0.3	104.1	△0.1	102.5	△0.2	109.9	1.5
6	104.9	0.7	105.3	0.9	109.4	1.8	102.6	0.0	104.0	△0.2	102.5	△0.2	109.8	1.9
7	104.6	0.6	105.1	1.0	107.8	△0.3	102.2	0.0	104.0	△0.2	102.5	△0.1	110.3	1.9
8	104.8	0.0	105.3	0.9	109.5	△7.3	102.2	△0.2	104.0	△0.2	102.6	0.0	110.7	1.8
9	105.2	△0.4	105.3	0.6	114.7	△8.2	102.4	△0.2	104.0	△0.2	101.3	△1.2	110.2	1.5
10	105.5	0.0	105.5	0.8	114.9	△3.8	102.8	△0.3	104.0	△0.2	101.5	△1.0	110.5	1.7
11	104.9	0.2	105.2	0.6	109.7	△2.7	102.5	△0.2	104.0	△0.2	101.4	△0.9	110.2	1.6
12	105.1	0.7	105.4	0.7	111.9	△0.8	102.7	1.1	104.0	△0.2	101.4	△0.9	110.2	1.6
2020.1	105.8	1.5	105.8	0.9	115.2	2.5	103.1	2.3	104.0	△0.2	102.2	△0.5	110.7	1.7
2	105.8	1.1	105.9	0.6	114.0	0.3	103.3	2.2	104.1	△0.1	102.1	△0.6	110.9	1.0
3	105.5	1.0	105.8	0.7	114.9	3.2	102.5	1.3	104.1	△0.1	101.9	△0.6	110.8	1.1
4	105.0	0.1	105.7	0.3	115.0	1.8	101.1	△0.7	104.1	0.0	100.8	△1.6	110.9	1.0
5	104.7	△0.3	105.9	0.5	115.0	3.1	100.6	△2.0	104.1	0.1	100.5	△1.9	110.8	0.9
6	104.9	0.0	106.0	0.6	114.4	4.6	101.1	△1.4	104.2	0.2	100.5	△2.0	111.0	1.0
7	104.9	0.3	105.9	0.7	114.8	6.4	101.8	△0.4	104.2	0.2	100.6	△1.9	111.4	1.1
8	105.5	0.7	106.1	0.8	121.2	10.6	101.8	△0.4	104.3	0.3	100.8	△1.8	111.9	1.1
9	106.2	1.0	106.2	0.9	130.3	13.5	101.7	△0.7	104.4	0.4	99.8	△1.3	111.6	1.3
10	105.6	0.1	105.7	0.1	130.2	13.3	101.7	△1.0	104.5	0.5	94.8	△6.6	112.0	1.4
11	105.5	0.6	106.3	1.0	121.8	11.1	101.6	△0.9	104.6	0.6	99.3	△2.0	111.6	1.3
12	105.7	0.5	106.3	0.9	122.7	9.7	101.8	△0.9	104.67	0.7	99.34	△2.0	111.64	1.3

(2015 = 100, %)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수출물가[1]		수입물가[2]		교역조건[3]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16	100.7	0.7	98.2	△1.8	96.7	△3.3	95.8	△4.2	102.2	2.2
2017	103.1	2.5	101.6	3.5	102.6	6.1	102.0	6.5	101.3	△0.8
2018	104.8	1.6	103.5	1.9	103.4	0.8	108.4	6.3	95.6	△5.7
2019	105.0	0.2	103.5	0.0	100.0	△3.3	109.3	0.8	91.8	△3.9
2020	105.5	0.4	-	-	-	-	-	-	-	-
2018.5	104.4	1.5	103.3	2.1	102.8	1.5	108.6	8.3	96.5	△4.1
6	104.3	1.5	103.4	2.5	103.6	2.5	110.0	11.0	94.3	△6.4
7	103.9	1.1	103.9	2.9	106.1	3.9	111.5	12.0	94.6	△8.1
8	105.2	1.5	104.3	2.9	106.1	3.3	111.2	9.9	95.0	△8.2
9	106.6	2.5	104.6	2.5	106.3	2.3	113.0	9.8	95.6	△7.0
10	106.3	2.6	104.3	2.1	106.8	2.3	115.0	11.1	94.0	△7.8
11	105.2	2.3	103.5	1.5	103.5	0.6	109.4	5.9	91.3	△10.1
12	104.3	1.3	103.0	0.9	100.6	△0.7	105.3	2.7	93.5	△6.0
2019.1	104.0	0.4	102.9	0.4	99.2	△1.8	105.1	1.7	94.5	△4.9
2	104.6	0.0	103.0	0.1	99.7	△2.6	107.5	3.5	94.6	△2.7
3	104.5	0.0	103.4	0.5	99.8	△1.0	109.3	4.7	92.8	△5.1
4	104.8	0.4	103.7	0.6	100.5	△0.5	111.2	5.4	92.2	△6.2
5	105.3	0.8	103.8	0.4	103.1	0.3	113.6	4.5	90.7	△6.1
6	105.2	0.8	103.5	0.1	100.8	△2.7	109.4	△0.6	89.9	△4.6
7	104.4	0.4	103.5	△0.3	100.4	△5.4	110.2	△1.1	91.9	△2.9
8	104.7	△0.4	103.7	△0.6	101.8	△4.0	111.0	△0.2	90.6	△4.6
9	105.6	△0.9	103.8	△0.8	101.0	△5.0	110.7	△2.0	91.8	△4.0
10	106.0	△0.3	103.6	△0.7	98.9	△7.4	108.1	△6.0	90.9	△3.3
11	105.4	0.2	103.4	△0.1	96.7	△6.5	107.1	△2.1	91.0	△0.4
12	105.5	1.1	103.7	0.7	97.4	△3.2	108.8	3.3	91.0	△2.7
2020.1	106.3	2.1	104.1	1.1	96.8	△2.5	107.9	2.7	89.7	△5.0
2	106.4	1.7	103.7	0.7	97.6	△2.0	106.4	△1.0	89.0	△5.9
3	106.3	1.8	102.8	△0.5	96.1	△3.8	100.7	△7.9	90.0	△3.0
4	105.1	0.3	101.9	△1.7	94.0	△6.5	95.0	△14.6	94.9	2.9
5	104.6	△0.7	102.0	△1.8	94.5	△8.4	98.8	△13.0	99.7	10.0
6	104.9	△0.3	102.5	△1.0	95.0	△5.7	101.3	△7.4	98.3	9.3
7	104.4	0.0	102.7	△0.8	95.1	△5.3	100.4	△8.9	96.2	4.7
8	105.2	0.5	103.2	△0.5	95.0	△6.7	99.3	△10.5	96.7	6.7
9	106.6	0.9	103.4	△0.4	95.0	△5.9	98.2	△11.3	97.0	5.7
10	105.2	△0.7	103.0	△0.5	92.7	△6.2	96.1	△11.2	97.8	7.7
11	105.3	△0.1	103.1	△0.3	92.0	△4.9	95.8	△10.6	98.0	7.8
12	105.4	△0.1	-	-	-	-	-	-	-	-

주 : 1), 2) 원화기준, 3) 순상품교역조건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			GDP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동기비)	GDP (전기비)	GNI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2	14,401,114	12,784	14,551,703	12,918	2,899	25,724	2.4	2.4	2.9	95.1	1.3
2013	15,008,191	13,708	15,103,849	13,795	2,995	27,351	3.2	3.2	3.8	96.0	1.0
2014	15,629,289	14,843	15,704,933	14,915	3,095	29,384	3.2	3.2	3.5	96.9	0.9
2015	16,580,204	14,658	16,632,066	14,704	3,260	28,814	2.8	2.8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1	17,471,435	15,056	3,411	29,394	2.9	2.9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3.2	3.3	104.3	2.2
2018	18,981,926	17,252	19,058,375	17,321	3,693	33,564	2.9	2.9	1.6	104.8	0.5
2019p	19,190,399	16,463	19,357,151	16,606	3,744	32,115	2.0	2.0	0.1	103.8	△0.9
2020p	19,244,529	16,308	19,403,481	16,443	3,747	31,775	△1.0	△1.0	△0.3	105.1	1.3
2016. Ⅰ	4,134,826	-	4,153,731	-	-	-	2.8	0.3	4.9	102.2	2.0
Ⅱ	4,344,629	-	4,345,827	-	-	-	3.6	1.1	5.8	101.9	2.0
Ⅲ	4,394,216	-	4,423,302	-	-	-	2.8	0.4	3.7	102.9	1.6
Ⅳ	4,534,124	-	4,548,574	-	-	-	2.6	0.8	3.4	101.0	2.4
2017. Ⅰ	4,330,273	-	4,352,098	-	-	-	3.1	0.8	2.6	104.0	1.7
Ⅱ	4,541,417	-	4,509,787	-	-	-	2.7	0.7	2.1	103.6	1.6
Ⅲ	4,734,362	-	4,782,699	-	-	-	3.9	1.5	5.3	106.7	3.7
Ⅳ	4,750,929	-	4,787,225	-	-	-	2.9	△0.1	3.2	102.8	1.8
2018. Ⅰ	4,498,381	-	4,525,595	-	-	-	3.0	1.1	2.8	104.7	0.8
Ⅱ	4,730,183	-	4,703,033	-	-	-	3.1	0.6	2.3	104.7	1.0
Ⅲ	4,855,357	-	4,896,131	-	-	-	2.4	0.6	0.2	106.9	0.2
Ⅳ	4,898,005	-	4,933,617	-	-	-	3.1	0.9	1.2	102.8	0.0
2019p. Ⅰ	4,548,910	-	4,570,676	-	-	-	1.8	△0.3	△0.4	104.0	△0.6
Ⅱ	4,779,070	-	4,796,666	-	-	-	2.1	1.0	0.0	104.0	△0.6
Ⅲ	4,871,770	-	4,949,208	-	-	-	2.0	0.4	0.0	105.2	△1.6
Ⅳ	4,970,648	-	5,040,602	-	-	-	2.3	1.3	0.8	102.0	△0.8
2020p. Ⅰ	4,582,024	-	4,632,118	-	-	-	1.4	△1.3	0.0	103.4	△0.6
Ⅱ	4,723,281	-	4,726,795	-	-	-	△2.7	△3.2	△1.7	105.3	1.2
Ⅲ	4,911,815	-	4,952,810	-	-	-	△1.1	2.1	△0.1	107.3	2.0
Ⅳ	5,027,409	-	5,091,758	-	-	-	△1.2	1.2	0.7	104.4	2.4

(2015년=100, 전년동기비,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 총투자율	총저축률 (명목)
	산 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 림 어 업	최종 소비	민간 소비	총고정 자 본 형 성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2012	2.4	1.4	1.4	3.4	△0.5	2.3	1.7	△0.1	1.0	△3.5	31.1	34.5
2013	3.2	3.1	3.1	3.6	4.2	2.4	1.7	2.8	△3.9	6.3	29.7	34.8
2014	3.2	3.2	3.2	3.1	5.1	2.	2.0	3.1	5.1	1.4	29.7	35.0
2015	2.8	1.6	1.7	3.1	△0.2	2.6	2.2	5.4	5.1	6.9	29.5	36.4
2016	2.9	2.3	2.3	2.9	△5.6	3.0	2.6	6.6	2.6	10.0	30.1	36.8
2017	3.2	3.7	3.7	2.6	2.3	3.1	2.8	9.8	16.5	7.3	32.3	37.1
2018	2.9	3.3	3.3	3.8	0.2	3.7	3.2	△2.2	△2.3	△4.6	31.5	35.9
2019p	2.0	1.2	1.3	2.9	2.3	2.9	1.7	△2.8	△7.5	△2.5	31.2	34.7
2020p	△1.0	△0.9	△0.9	△1.1	△3.4	△2.3	△4.9	2.6	6.8	△0.1	31.4	35.8
2016. Ⅰ	2.8	1.4	1.4	3.1	△6.4	3.1	2.5	4.4	△1.7	9.9	28.4	37.1
Ⅱ	3.6	2.8	2.8	3.6	△2.7	3.5	3.3	5.9	1.1	9.3	30.2	37.3
Ⅲ	2.8	1.8	1.7	3.0	△7.8	3.6	3.2	6.5	1.4	10.1	30.8	36.2
Ⅳ	2.6	3.2	3.2	2.0	△5.7	2.0	1.5	9.1	9.4	10.6	31.0	36.9
2017. Ⅰ	3.1	4.1	4.1	2.3	△2.8	2.3	2.1	12.4	19.6	10.7	31.7	37.5
Ⅱ	2.7	2.1	2.1	2.2	3.5	2.9	2.7	11.6	19.0	9.6	32.7	36.6
Ⅲ	3.9	6.5	6.5	2.8	2.8	3.5	3.0	9.8	17.3	6.9	31.9	37.6
Ⅳ	2.9	2.2	2.2	3.1	3.7	3.5	3.3	6.0	10.7	3.1	32.8	36.6
2018. Ⅰ	3.0	1.1	1.2	4.4	7.4	4.5	4.1	5.1	10.5	0.8	32.0	35.9
Ⅱ	3.1	3.0	3.0	4.0	0.7	3.5	3.3	△1.8	△4.4	△2.6	31.9	36.0
Ⅲ	2.4	3.2	3.2	3.4	△3.9	3.1	2.7	△6.6	△9.2	△9.1	30.3	36.3
Ⅳ	3.1	5.5	5.5	3.5	△1.0	3.7	2.7	△4.4	△5.5	△6.4	31.6	35.5
2019p. Ⅰ	1.8	1.0	1.1	2.8	3.8	2.5	1.4	△9.0	△17.4	△8.1	30.6	34.7
Ⅱ	2.1	0.8	0.9	3.0	△0.5	3.2	1.8	△2.9	△7.0	△3.0	32.3	34.7
Ⅲ	2.0	1.3	1.3	2.7	5.7	2.9	1.6	△1.4	△2.3	△2.7	30.9	35.0
Ⅳ	2.3	1.7	1.7	3.2	1.2	3.1	1.9	1.4	△2.0	2.6	30.8	34.4
2020p. Ⅰ	1.4	3.5	3.5	0.2	△0.4	△1.7	△4.8	4.7	7.3	4.2	31.2	36.0
Ⅱ	△2.7	△6.5	△6.6	△1.5	△4.9	△1.3	△4.0	1.9	4.1	△0.1	32.7	34.5
Ⅲ	△1.1	△0.7	△0.7	△1.3	△7.0	△2.1	△4.4	3.2	10.6	△1.0	30.8	35.7
Ⅳ	△1.2	0.3	0.3	△1.8	△1.1	△4.2	△6.5	1.2	5.7	△2.5	30.8	37.2

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광공업)		서비스업		출하지수 (광공업)		재고지수 (제조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18	106.4	1.5	106.9	2.3	102.9	0.1	112.2	6.8
2019	106.3	△0.1	108.4	1.4	102.2	△0.7	108.9	△2.9
2018. Ⅰ	102.7	△0.8	103.7	2.9	99.8	△2.0	107.9	8.9
Ⅱ	107.2	2.3	107.1	2.4	103.7	0.4	108.5	8.1
Ⅲ	105.4	0.2	106.1	1.0	101.6	△1.4	106.8	6.5
Ⅳ	110.1	4.4	110.6	2.8	106.5	3.2	112.2	6.8
2019. Ⅰ	100.6	△2.0	104.6	0.9	99.0	△0.8	109.3	1.3
Ⅱ	107.2	0.0	108.5	1.3	102.8	△0.9	111.5	2.8
Ⅲ	106.2	0.8	107.7	1.5	101.8	0.2	113.3	6.1
Ⅳ	112.9	2.5	112.7	1.9	106.9	0.5	109.4	△2.4
2020. Ⅰ	105.2	4.6	103.6	△1.0	99.5	0.5	114.2	4.5
Ⅱ	100.9	△5.9	104.8	△3.4	94.8	△7.8	113.5	1.8
Ⅲ	106.4	0.2	105.9	△1.7	100.3	△1.5	111.8	△1.3
Ⅳ	112.8	△0.1	110.5	△2.0	107.2	0.3	109.5	0.1
2019.1	105.2	△0.9	105.8	2.5	102.2	△0.3	111.5	3.5
2	89.6	△4.1	99.4	△0.4	88.8	△2.5	111.8	4.0
3	105.7	△2.5	108.7	0.6	104.8	△1.0	109.1	1.1
4	106.8	0.4	107.7	1.5	102.2	0.3	113.0	3.6
5	108.2	0.7	109.5	2.2	103.4	△1.4	113.9	5.3
6	105.6	△2.0	108.2	0.0	101.6	△2.7	110.9	2.2
7	110.1	1.6	108.0	1.4	103.5	1.0	116.8	6.2
8	103.0	△2.4	108.2	2.3	100.3	△1.6	113.8	3.2
9	104.1	1.8	106.8	0.8	100.4	△0.1	112.0	4.9
10	111.6	△0.8	109.1	0.7	106.1	△2.7	112.9	3.6
11	111.1	1.3	110.3	2.4	104.3	△1.8	113.3	1.2
12	114.8	6.1	118.8	2.6	108.9	4.5	108.9	△2.9
2020.1	102.2	△3.3	106.7	0.9	95.5	△6.9	114.5	2.4
2	99.7	11.0	100.7	1.3	94.2	5.6	115.8	3.3
3	113.6	7.0	103.4	△4.9	108.9	3.4	114.2	4.5
4	101.6	△5.2	101.1	△6.1	94.6	△7.7	115.4	1.9
5	96.8	△10.9	105.1	△4.0	91.0	△12.4	116.5	1.9
6	104.3	△1.3	108.2	0.0	98.9	△2.9	113.5	1.8
7	107.4	△2.9	106.7	△1.2	99.7	△4.1	116.7	△0.7
8	99.6	△3.7	104.1	△3.8	93.6	△7.1	118.7	3.2
9	112.1	7.3	106.9	0.1	107.6	6.9	111.8	△1.3
10	109.0	△2.8	106.4	△2.5	103.6	△2.8	111.9	△1.6
11	111.5	0.1	108.8	△1.4	106.0	1.1	111.1	△2.5
12	118.1	2.6	116.3	△2.1	112.0	2.6	110.3	0.8

주: 연쇄방식 도입에 따라 광공업 관련통계(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가중치 기준년도 변경(2017→2018년)

나. 투 자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건축허가면적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지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조업	
2019	△4.1	△6.2	△3.8	6.2	7.0	4.8	△10.4	△0.9	△2.7	△6.2
2018. Ⅰ	6.0	△5.3	10.6	19.7	△36.1	45.2	3.7	15.7	36.0	11.1
Ⅱ	1.5	△5.3	4.2	△11.7	△17.6	△10.3	△7.2	1.6	0.4	△4.9
Ⅲ	△4.7	△5.5	△4.8	△9.7	△11.1	△12.8	△10.2	△0.3	6.5	△12.3
Ⅳ	△3.5	△3.8	△3.7	5.9	5.5	4.4	△10.4	2.3	△9.8	△6.8
2019. Ⅰ	△2.5	△9.9	△0.3	△2.5	15.4	△3.3	△12.6	△18.2	△24.6	△18.2
Ⅱ	1.1	△1.9	1.1	△0.8	△26.6	4.9	△18.3	△6.1	△7.0	△6.3
Ⅲ	△0.7	△6.4	0.6	1.7	2.8	△9.5	△12.2	△12.3	△16.6	△1.3
Ⅳ	4.3	6.4	3.4	26.0	15.9	24.9	1.9	9.8	15.0	4.5
2020. Ⅰ	0.9	3.0	0.0	△1.2	6.1	11.0	△5.1	21.0	10.9	8.1
Ⅱ	△4.5	△5.0	△4.4	25.1	41.5	23.6	4.0	△0.3	0.1	5.8
Ⅲ	△3.0	△4.3	△3.4	40.0	△5.9	74.9	12.6	14.9	22.7	7.7
Ⅳ	△3.4	△8.7	△2.9	8.7	18.8	6.8	△2.1	△0.7	8.5	2.8
2019.2	△9.4	△18.6	△7.1	△20.1	△20.0	△24.2	△11.3	0.6	△6.8	△25.3
3	△4.2	△10.8	△1.5	32.7	50.8	5.7	△8.4	△3.5	△4.6	△15.9
4	△5.7	△6.7	△6.2	41.8	13.5	50.7	△10.2	△1.3	11.7	△4.6
5	△2.9	△17.6	0.2	△24.0	△53.8	△20.4	△16.5	2.7	△9.8	△8.5
6	△2.1	3.9	△4.7	1.0	△4.1	4.7	△28.0	△6.8	△7.1	△7.1
7	△6.1	△12.5	△3.9	△21.4	5.7	△26.9	△24.3	△6.9	△12.5	△3.0
8	△5.7	△3.7	△5.8	△5.5	6.8	△4.2	△5.9	△9.2	△5.9	△2.2
9	△5.3	△13.6	△4.7	33.4	11.4	4.3	△0.5	△1.9	△4.9	△0.4
10	△2.7	△0.5	△3.1	40.9	△21.6	59.5	9.5	△6.3	△1.5	△1.6
11	△3.8	△1.3	△4.8	11.8	△2.2	17.9	△11.1	9.5	13.2	1.1
12	3.3	7.0	1.3	15.9	36.7	4.4	8.3	38.7	37.2	11.1
2020.1	△5.6	△2.1	△5.9	8.0	△2.4	20.9	△17.3	28.3	24.9	△2.2
2	5.7	10.1	6.0	38.3	25.1	50.1	9.4	25.3	32.0	16.8
3	2.9	4.8	3.5	△25.3	△3.3	△13.8	△7.9	12.0	△14.1	10.9
4	△3.6	△6.5	△1.3	△32.0	△37.9	△32.2	△14.2	1.1	4.7	1.8
5	△6.5	5.7	△6.2	36.3	49.8	41.9	12.8	△10.2	△7.4	2.6
6	△3.7	△7.6	△1.1	79.3	110.1	72.1	17.4	8.7	2.1	13.2
7	△2.6	△5.8	△2.3	87.6	26.1	104.5	12.7	9.8	21.6	7.4
8	△10.5	△14.0	△11.2	48.8	△28.6	80.7	△5.2	6.3	5.7	△1.8
9	4.3	6.4	3.7	7.7	△5.5	48.5	30.0	28.0	39.4	17.8
10	△9.2	△20.7	△7.0	△8.9	27.9	△14.2	△8.3	28.7	25.1	△2.0
11	1.2	△1.1	0.9	28.7	88.3	4.9	0.3	△0.1	3.5	4.9
12	△2.5	△6.6	△2.6	8.4	△0.2	27.3	1.3	△17.4	2.5	5.1

다. 소 비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소매판매액				내 수 용 소비재출하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내 구 재	비내구재
2018	4.3	5.7	5.8	2.9	1.3	3.8	0.1
2019	2.4	1.8	0.6	3.4	1.6	2.1	1.2
2018. Ⅰ	5.4	9.4	4.5	3.8	1.0	5.6	△1.1
Ⅱ	5.0	6.3	5.6	4.0	1.1	2.6	0.5
Ⅲ	3.9	2.4	8.0	2.9	△1.8	0.0	△2.7
Ⅳ	3.0	4.9	5.2	1.2	5.0	7.3	3.9
2019. Ⅰ	1.6	△1.0	3.5	2.2	1.7	0.5	2.1
Ⅱ	2.0	△0.6	3.4	2.8	3.4	4.3	3.0
Ⅲ	2.2	1.9	△0.4	3.5	2.4	3.6	1.5
Ⅳ	3.4	7.0	△3.4	4.9	1.3	△1.5	2.7
2020. Ⅰ	△2.9	1.3	△19.3	1.9	△4.1	△7.2	△2.6
Ⅱ	2.0	18.2	△10.2	△0.8	△1.2	2.3	△2.9
Ⅲ	1.6	14.6	△10.5	0.2	0.3	0.2	0.5
Ⅳ	△1.2	10.3	△10.2	△3.1	△4.5	△8.2	△2.8
2019. 3	2.4	0.2	2.7	3.5	0.8	0.4	1.2
4	1.4	△1.2	0.8	3.0	4.8	7.1	3.7
5	3.4	1.1	5.5	3.4	2.9	6.2	1.3
6	1.2	△1.9	3.6	1.9	0.3	0.4	0.2
7	△0.3	△3.4	△0.3	1.3	2.5	1.8	2.8
8	4.1	0.5	3.2	6.2	2.3	6.4	0.3
9	3.0	9.8	△3.5	2.9	0.1	3.9	△1.6
10	1.9	4.5	△5.7	4.5	0.0	△1.7	0.8
11	3.7	3.8	0.2	5.4	△0.1	△0.8	0.3
12	4.5	12.6	△4.5	4.8	2.5	0.1	3.6
2020. 1	1.6	△2.7	△5.0	6.1	△9.2	△13.7	△7.5
2	△2.1	1.7	△19.2	3.0	2.5	△6.9	6.8
3	△7.8	4.2	△32.0	△3.2	△4.5	△2.2	△5.6
4	△2.2	10.4	△17.3	△2.1	△5.0	△4.1	△5.4
5	1.7	14.0	△7.4	△0.4	△5.6	△7.3	△4.6
6	6.6	30.6	△6.0	0.1	7.6	19.5	1.8
7	0.6	10.5	△8.4	△0.8	△0.5	△2.3	0.4
8	0.3	13.8	△11.1	△2.1	△7.9	△9.0	△7.3
9	4.0	19.7	△12.0	3.3	9.9	13.5	8.3
10	△0.1	9.8	△2.0	△4.3	△7.0	△11.2	△5.1
11	△1.3	13.0	△11.2	△4.1	△3.5	△8.5	△1.2
12	△2.1	8.3	△17.4	△0.9	△2.9	△4.6	△2.2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수출	수입			
2018	77,466.5	110,086.8	626,266.5	516,179.7	△29,369.4	4,901.9	△8,152.8
2019	59,971.2	76,856.0	561,962.6	485,106.6	△23,020.8	12,198.8	△6,062.8
2018. Ⅰ	10,994.0	21,347.8	150,063.5	128,715.7	△9,691.9	2,088.2	△2,750.1
Ⅱ	18,262.8	29,365.9	157,790.9	128,425.0	△6,131.3	△3,007.0	△1,964.8
Ⅲ	28,691.1	34,718.1	159,341.5	124,623.4	△7,444.2	3,184.2	△1,767.0
Ⅳ	19,518.6	24,655.0	159,070.6	134,415.6	△6,102.0	2,636.5	△1,670.9
2019. Ⅰ	12,186.3	19,516.0	137,724.7	118,208.7	△7,178.3	1,518.8	△1,670.2
Ⅱ	10,447.6	17,381.3	140,664.8	123,283.5	△4,359.5	△821.1	△1,753.1
Ⅲ	19,204.4	19,512.0	139,916.7	120,404.7	△5,366.9	6,029.4	△970.1
Ⅳ	18,132.9	20,446.7	143,656.4	123,209.7	△6,116.1	5,471.7	△1,669.4
2020. Ⅰ	13,333.9	15,003.8	131,168.8	116,165.0	△5,206.7	3,860.5	△323.7
Ⅱ	5,835.0	8,993.6	110,765.0	101,771.4	△3,204.1	30.4	15.1
Ⅲ	24,142.8	25,919.7	133,627.6	107,707.9	△3,947.2	3,187.0	△1,016.7
Ⅳ	32,235.0	30,613.8	146,103.6	115,489.8	△2,341.9	5,165.8	△1,202.7
2019.3	5,039.6	8,338.7	47,984.3	39,645.6	△2,100.8	△614.6	△583.7
4	△393.2	5,608.9	48,418.3	42,809.4	△1,269.5	△4,183.3	△549.3
5	5,175.5	5,503.1	48,103.4	42,600.3	△950.6	1,294.7	△671.7
6	5,665.3	6,269.3	44,143.1	37,873.8	△2,139.4	2,067.5	△532.1
7	6,584.6	6,182.4	48,423.8	42,241.4	△1,547.7	2,468.3	△518.4
8	4,860.7	4,630.9	45,328.0	40,697.1	△1,557.5	2,022.4	△235.1
9	7,759.1	8,698.7	46,164.9	37,466.2	△2,261.7	1,538.7	△216.6
10	7,827.2	8,028.2	49,119.9	41,091.7	△1,718.7	1,826.9	△309.2
11	5,974.8	7,390.9	46,497.3	39,106.4	△1,893.9	967.0	△489.2
12	4,330.9	5,027.6	48,039.2	43,011.6	△2,503.5	2,677.8	△871.0
2020.1	583.7	2,069.9	42,779.5	40,709.6	△2,989.3	1,631.1	△128.0
2	6,407.0	6,597.0	40,944.6	34,347.6	△1,441.4	1,216.4	35.0
3	5,939.8	6,961.8	45,897.8	38,936.0	△1,646.1	853.1	△229.0
4	△3,297.5	704.8	35,522.3	34,817.5	△1,503.5	△2,251.3	△247.5
5	2,241.2	2,612.8	33,784.1	31,171.3	△651.9	550.6	△270.3
6	7,164.6	6,183.2	39,472.5	33,289.3	△1,354.5	1,806.7	529.2
7	7,025.4	7,011.7	42,990.0	35,978.3	△1,303.5	1,686.5	△369.3
8	6,641.2	7,084.4	39,804.1	32,719.7	△875.5	705.0	△272.7
9	10,335.3	12,105.8	49,305.6	37,199.8	△2,082.5	686.4	△374.4
10	11,551.2	10,167.3	46,596.2	36,428.9	△834.1	2,498.9	△280.9
11	9,176.7	9,950.7	46,918.2	36,967.5	△976.2	478.1	△275.9
12	11,507.1	10,495.8	52,589.2	42,093.4	△531.6	2,188.8	△645.9

(백만달러)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2018	76,934.4	26,037.8	47,420.7	△1,502.4	△12,517.4	17,495.7	316.7	△848.8
2019	60,950.5	24,965.3	40,121.0	5,974.2	△11,576.2	1,466.2	△64.2	1,043.5
2018. Ⅰ	13,615.6	3,062.4	13,783.0	△3,696.1	△2,325.3	2,791.6	△17.7	2,639.3
Ⅱ	13,703.1	7,970.3	5,775.1	△867.5	△8,977.3	9,802.5	52.8	△4,612.5
Ⅲ	28,892.5	9,606.2	8,540.8	2,095.7	6,503.5	2,146.3	62.7	138.7
Ⅳ	20,723.2	5,398.9	19,321.8	965.5	△7,718.3	2,755.3	218.9	985.7
2019. Ⅰ	12,106.1	7,703.4	13,207.4	488.5	△10,328.2	1,035.0	△38.8	△41.4
Ⅱ	11,522.0	6,768.8	2,754.6	3,821.0	2,060.9	△3,883.3	15.2	1,059.2
Ⅲ	16,031.5	4,689.2	7,272.9	1,974.2	△380.3	2,475.5	△9.6	△3,163.3
Ⅳ	21,290.9	5,803.9	16,886.1	△309.5	△2,928.6	1,839.0	△31.0	3,189.0
2020. Ⅰ	14,923.9	5,417.8	11,635.9	3,711.4	△34.2	△5,807.0	△40.0	2,033.4
Ⅱ	776.0	2,471.0	9,044.8	3,112.9	△20,431.5	6,578.8	△161.5	△5,170.8
Ⅲ	25,713.2	9,180.4	1,115.5	△444.7	12,633.0	3,229.0	0.1	1,711.2
Ⅳ	35,702.8	6,186.9	19,698.2	△2,164.5	△1,408.5	13,390.7	△138.0	3,605.8
2019.4	674.7	3,605.2	3,812.6	557.1	△6,194.9	△1,105.3	△19.5	1,087.4
5	4,911.9	2,618.5	△626.9	886.7	3,368.2	△1,334.6	37.1	△300.7
6	5,935.4	545.1	△431.1	2,377.2	4,887.6	△1,443.4	△2.4	272.5
7	5,792.5	1,404.1	5,171.3	525.8	△2,973.4	1,664.7	△3.6	△788.5
8	4,167.1	1,070.9	△807.2	850.6	4,200.2	△1,147.4	△0.6	△693.0
9	6,071.9	2,214.2	2,908.8	597.8	△1,607.1	1,958.2	△5.4	△1,681.8
10	10,242.3	1,038.9	2,825.0	△329.5	6,218.8	489.1	△14.7	2,429.8
11	5,341.0	4,003.2	4,825.6	△203.9	△5,191.9	1,908.0	△4.6	△629.2
12	5,707.6	761.8	9,235.5	223.9	△3,955.5	△558.1	△11.7	1,388.4
2020.1	2,263.8	1,893.9	360.2	335.6	△1,787.5	1,461.6	△16.3	1,696.4
2	5,257.4	1,196.6	2,832.6	943.0	380.9	△95.7	△3.6	△1,146.0
3	7,402.7	2,327.3	8,443.1	2,432.8	1,372.4	△7,172.9	△20.1	1,483.0
4	△7,779.4	88.2	4,536.0	1,550.6	△17,251.1	3,296.9	△3.2	△4,478.7
5	2,231.7	33.8	4,005.7	828.3	△4,222.7	1,586.6	△154.8	145.3
6	6,323.7	2,349.0	503.1	734.0	1,042.3	1,695.3	△3.5	△837.4
7	10,460.0	2,391.9	△410.7	△459.8	8,534.2	404.4	0.9	3,433.7
8	4,720.1	3,819.4	517.0	△226.2	644.2	△34.3	2.1	△1,923.2
9	10,533.1	2,969.1	1,009.2	241.3	3,454.6	2,858.9	△2.9	200.7
10	17,401.2	1,658.3	264.8	△645.2	11,199.6	4,923.7	△14.4	5,864.4
11	9,800.8	2,059.2	5,126.7	△1,038.4	△2,032.7	5,686.0	△87.0	711.1
12	8,500.8	2,469.4	14,306.7	△480.9	△10,575.4	2,781.0	△36.6	△2,969.7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17	573,694	15.8	478,478	17.8	95,216
2018	604,860	5.4	535,202	11.9	69,657
2019	542,333	△10.4	503,343	△6.0	38,890
2018. Ⅰ	145,055	9.8	132,425	13.7	12,629
Ⅱ	151,617	3.1	133,153	13.0	18,465
Ⅲ	153,641	1.7	130,311	7.8	23,330
Ⅳ	154,547	7.7	139,314	12.9	15,233
2019. Ⅰ	132,654	△8.5	123,797	△6.5	8,857
Ⅱ	138,494	△8.7	128,772	△3.3	9,722
Ⅲ	134,727	△12.3	124,961	△4.1	9,766
Ⅳ	136,358	△11.8	125,813	△9.7	10,545
2020. Ⅰ	130,235	△1.8	121,514	△1.8	8,721
Ⅱ	110,350	△20.3	108,344	△15.9	2,006
Ⅲ	130,139	△3.4	113,890	△8.9	16,249
Ⅳ	142,129	4.2	123,479	△1.9	18,650
2019. 3	47,003	△8.4	41,992	△6.5	5,011
4	48,781	△2.1	45,047	3.1	3,734
5	45,704	△9.8	43,620	△1.9	2,084
6	44,008	△13.8	40,105	△10.9	3,903
7	46,078	△11.1	43,762	△2.6	2,316
8	44,020	△14.0	42,457	△4.3	1,563
9	44,629	△11.9	38,741	△5.6	5,888
10	46,649	△15.0	41,397	△14.6	5,252
11	44,041	△14.5	40,729	△13.0	3,312
12	45,668	△5.3	43,687	△0.8	1,981
2020. 1	43,109	△6.6	42,718	△5.4	391
2	40,917	3.6	36,998	0.9	3,919
3	46,203	△1.7	41,798	△0.5	4,405
4	36,296	△25.6	37,926	△15.8	△1,630
5	34,840	△23.8	34,646	△20.6	194
6	39,214	△10.9	35,772	△10.8	3,442
7	42,786	△7.1	38,766	△11.4	4,020
8	39,493	△10.3	35,761	△15.8	3,732
9	47,860	7.2	39,362	1.6	8,498
10	44,883	△3.8	39,080	△5.6	5,803
11	45,841	4.1	39,937	△1.9	5,904
12	51,405	12.6	44,462	1.8	6,944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7	686.1	3.2	507.5	17.4	178.6	268.2	10.1	551.3	16.1	△283.1
2018	727.2	6.0	588.7	16.0	138.5	305.3	13.8	546.0	△0.9	△240.8
2019	733.4	0.9	618.8	5.1	114.7	284.2	△6.9	475.8	△12.9	△191.6
2019. 3	60.8	△2.0	52.1	18.0	8.7	26.0	8.7	52.3	1.3	△26.2
4	59.4	△1.5	47.6	8.4	11.9	24.8	17.8	49.4	8.2	△24.6
5	61.5	11.4	48.2	2.5	13.3	25.1	15.2	44.2	1.0	△19.1
6	64.2	7.4	47.9	△0.4	16.3	25.8	9.7	44.5	△6.8	△18.7
7	61.5	8.7	49.0	20.1	12.5	25.4	17.6	45.9	2.8	△20.4
8	60.5	1.6	48.3	6.4	12.2	24.1	14.4	42.3	△6.7	△18.2
9	58.2	△11.8	43.5	6.6	14.7	24.7	△1.9	41.8	△15.1	△17.1
10	69.8	47.7	55.9	62.0	13.9	27.6	49.6	49.7	12.5	△22.1
11	68.4	7.2	48.8	16.3	19.6	27.1	7.4	43.2	△8.7	△16.1
12	64.4	21.6	52.8	21.0	11.6	24.3	△0.9	42.7	△13.6	△18.5
2019. 1	62.1	20.3	52.9	7.3	9.2	26.2	1.3	40.5	△9.7	△14.3
2	54.4	16.2	43.7	△3.5	10.7	23.0	△6.1	38.1	△15.6	△15.1
3	63.2	4.0	50.2	△3.6	13.0	22.6	△13.1	43.2	△17.4	△20.5
4	61.6	3.6	55.9	17.4	5.7	22.8	△8.3	46.3	△6.2	△23.6
5	65.0	5.6	55.1	14.3	9.9	25.3	0.8	37.2	△16.0	△11.8
6	62.5	△2.7	46.7	△2.4	15.8	22.6	△12.5	38.8	△12.8	△16.3
7	61.1	△0.6	53.8	9.8	7.3	25.5	0.1	42.0	△8.3	△16.6
8	56.2	△7.1	51.8	7.1	4.4	22.4	△6.9	38.9	△8.2	△16.4
9	56.9	△2.2	47.6	9.5	9.3	23.1	△6.4	38.2	△8.6	△15.1
10	63.6	△8.9	49.6	△11.2	14.0	23.7	△14.2	38.2	△23.3	△14.4
11	62.7	△8.4	52.7	8.1	10.0	24.1	△11.0	35.2	△18.5	△11.1
12	64.2	△0.3	58.7	11.1	5.5	23.0	△5.4	39.3	△8.1	△16.3
2020. 1	57.4	△7.6	55.8	5.4	1.6	24.4	△7.0	31.6	△21.9	△7.2
2	59.3	9.0	54.4	24.3	4.9	22.7	△1.4	37.7	△0.9	△15.0
3	72.9	15.4	53.7	7.0	19.2	24.9	9.9	43.9	1.7	△19.0
4	52.8	△14.3	50.4	△9.8	2.4	19.9	△12.8	39.9	△13.9	△20.0
5	45.9	△29.4	42.9	△22.2	3.0	17.7	△30.2	31.1	△16.4	△13.4
6	57.3	△8.2	45.9	△1.8	11.4	18.5	△18.2	35.7	△7.9	△17.2
7	66.0	7.9	44.4	△17.5	21.6	20.0	△21.5	38.6	△8.2	△18.6
8	55.9	△0.5	46.1	△10.9	9.8	17.6	△21.4	35.2	△9.5	△17.5
9	70.0	23.0	46.5	△2.3	23.5	21.5	△6.7	38.3	0.2	△16.9
10	65.7	3.2	43.6	△12.1	22.0	19.3	△18.8	39.1	4.6	△20.7
11	66.9	6.8	41.8	△20.6	25.0	21.2	△12.1	40.1	15.0	△19.3
12	71.6	11.6	48.7	△17.1	23.0	23.3	1.4	46.6	18.7	△23.3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출입차	수 출		수 입		수출입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7	1,421.2	14.2	978.6	12.5	442.6	540.4	15.9	572.8	10.4	△32.4
2018	1,621.3	14.1	1,064.9	8.8	556.4	576.8	6.7	623.0	8.8	△46.2
2019	1,362.0	△16.0	1,072.3	0.7	289.7	527.6	△8.5	558.0	△10.4	△30.4
2019. 3	135.8	16.5	84.1	△4.7	51.6	52.0	21.8	57.5	13.6	△5.5
4	130.3	23.1	87.2	10.2	43.1	50.2	△21.8	50.6	20.2	△0.4
5	138.5	30.0	92.8	14.7	45.7	50.1	3.8	57.2	24.0	△7.1
6	138.1	29.4	87.1	4.3	51.0	44.6	1.4	51.0	△3.7	△6.5
7	137.2	27.2	88.7	14.2	48.5	46.1	6.9	49.9	4.3	△3.8
8	144.0	20.9	85.3	5.0	58.8	44.7	△4.0	52.1	9.7	△7.4
9	145.9	7.8	78.9	△6.6	67.0	40.0	△13.3	43.1	△17.7	△3.0
10	147.7	17.4	99.6	25.6	48.0	54.8	37.3	50.0	13.8	4.8
11	135.6	△3.2	98.5	6.5	37.1	50.5	23.8	53.5	4.5	△3.0
12	119.0	△14.0	95.1	10.6	24.0	54.8	22.5	50.8	△6.3	3.9
2019. 1	108.4	△19.0	103.4	12.9	5.0	50.4	12.0	48.5	△15.2	1.9
2	95.3	△17.3	65.8	△13.4	29.5	39.0	△11.4	37.4	△25.2	1.6
3	114.4	△15.7	88.0	4.7	26.4	46.3	△11.1	49.7	△13.7	△3.4
4	124.3	△4.6	97.9	12.3	26.4	49.6	△1.2	48.0	△5.2	1.7
5	110.1	△20.5	99.4	7.2	10.7	43.6	△12.9	47.5	△16.9	△3.9
6	104.2	△24.5	86.6	△0.6	17.7	43.1	△3.2	42.4	△16.9	0.7
7	114.4	△16.6	93.9	5.9	20.5	46.1	0.0	53.1	6.4	△7.0
8	112.9	△21.6	83.1	△2.5	29.7	39.5	△11.7	48.7	△6.6	△9.2
9	113.6	△22.1	82.0	3.9	31.7	44.0	10.0	40.3	△6.4	3.7
10	122.4	△17.1	92.2	△7.5	30.3	43.0	△21.5	45.9	△8.2	△2.9
11	118.9	△12.3	89.7	△9.0	29.2	39.4	△21.9	45.9	△14.1	△6.5
12	123.0	3.3	90.2	△5.1	32.8	43.5	△20.5	50.5	△0.7	△7.0
2020. 1	96.4	△11.0	94.3	△8.8	2.1	42.2	△16.2	43.0	△11.3	△0.8
2	88.3	△7.4	55.5	△15.7	32.8	38.6	△1.1	42.6	13.8	△4.0
3	106.4	△7.0	89.6	1.7	16.8	50.5	9.1	54.6	9.8	△4.1
4	101.5	△18.3	96.2	△1.7	5.3	39.7	△20.0	45.6	△4.9	△5.9
5	107.4	△2.5	89.9	△9.6	17.5	33.7	△22.6	49.3	3.6	△15.6
6	114.4	9.7	89.2	3.1	25.2	35.8	△17.1	49.2	16.0	△13.4
7	117.3	2.5	91.8	△2.3	25.5	41.0	△11.2	49.8	△6.3	△8.8
8	109.4	△3.1	82.6	△0.7	26.8	38.2	△3.2	44.4	△8.9	△6.1
9	121.9	7.3	91.6	11.8	30.3	50.7	15.2	49.6	22.9	1.2
10	115.3	△5.8	96.1	4.3	19.2	47.1	9.4	50.4	9.9	△3.4
11	120.1	1.2	102.9	14.7	17.5	49.1	24.6	56.5	23.2	△7.5
12	127.0	3.3	108.8	20.6	18.2	55.0	26.4	59.8	18.5	△4.8

라. 외채 · 외환보유액 · 외국인투자 · 원유도입

(억달러)

	총외채[1]	단기외채[2]	대외채권	외환 보유액[3]	순채권	외국인투자[4] (백만달러)	원 유 도 입[5] 도입량 (백만BBL)	원 유 도 입[5] 도입단가 (달러/BBL)
2017	4,120	1,160	8,774	3,892.7	4,654	22,948	1,118.2	53.4
2018	4,412	1,256	9,188	4,036.9	4,776	26,901	1,116.3	71.5
2019	4,670	1,345	9,476	4,088.2	4,806	23,328	1,071.9	65.5
2018. 5	-	-	-	3,989.8	-	-	95.2	71.2
6	4,340	1,249	8,958	4,003.0	4,618	10,820	98.0	74.3
7	-	-	-	4,024.5	-	-	96.7	75.0
8	-	-	-	4,011.3	-	-	95.0	75.2
9	4,412	1,263	9,128	4,030.0	4,717	3,449	81.1	76.5
10	-	-	-	4,027.5	-	-	97.8	79.2
11	-	-	-	4,029.9	-	-	95.3	76.2
12	4,412	1,256	9,188	4,036.9	4,776	7,698	93.0	66.7
2019. 1	-	-	-	4,055.1	-	-	93.1	61.6
2	-	-	-	4,046.7	-	-	98.5	63.2
3	4,410	1,284	9,239	4,052.5	4,829	3,172	87.1	65.8
4	-	-	-	4,040.3	-	-	95.7	69.5
5	-	-	-	4,019.7	-	-	84.1	71.0
6	4,628	1,389	9,428	4,030.7	4,799	6,700	85.7	67.9
7	-	-	-	4,031.1	-	-	86.3	65.5
8	-	-	-	4,014.8	-	-	97.1	64.4
9	4,602	1,335	9,423	4,033.2	4,821	3,613	79.3	63.0
10	-	-	-	4,063.2	-	-	82.3	64.2
11	-	-	-	4,074.6	-	-	93.1	64.3
12	4,670	1,345	9,476	4,088.2	4,806	9,843	89.5	66.2
2020. 1	-	-	-	4,096.5	-	-	92.7	69.1
2	-	-	-	4,091.7	-	-	86.3	64.2
3	4,858	1,485	9,500	4,002.1	4,642	3,275	84.1	52.8
4	-	-	-	4,039.8	-	-	82.3	34.1
5	-	-	-	4,073.1	-	-	78.8	26.2
6	5,031	1,543	9,528	4,107.5	4,498	4,387	74.7	29.9
7	-	-	-	4,165.3	-	-	86.4	39.2
8	-	-	-	4,189.5	-	-	78.9	44.7
9	5,110	1,441	9,724	4,205.5	4,614	5,189	79.8	44.5
10	-	-	-	4,265.1	-	-	82.1	43.4
11	-	-	-	4,363.8	-	-	69.5	42.5
12	-	-	-	4,431.0	-	7,791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는 잠정치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4]		대만(NT달러/달러)[4]		유로(달러/EUR)	
	기 말[1]	절상률[2]	기간평균[3]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2017	1,071.4	12.80	1,130.84	112.89	3.26	29.82	8.32	1.1940	13.83
2018	1,118.1	△4.18	1,100.30	110.36	2.29	30.57	△2.45	1.1441	△4.18
2019	1,157.8	△3.43	1,165.65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2019. Ⅰ	1,137.8	△1.73	1,125.08	110.66	△0.28	30.87	△0.98	1.1228	△1.86
Ⅱ	1,156.8	△3.35	1,165.91	107.78	2.39	30.97	△1.30	1.1369	△0.63
Ⅲ	1,201.3	△6.93	1,193.24	107.90	2.28	31.05	△1.55	1.0944	△4.34
Ⅳ	1,157.8	△3.43	1,175.81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2020. Ⅰ	1,222.6	△5.30	1,193.60	108.12	0.69	30.28	△0.63	1.1031	△1.56
Ⅱ	1,200.7	△3.57	1,220.81	107.59	0.49	29.47	2.10	1.1245	0.35
Ⅲ	1,173.5	△1.34	1,188.54	105.53	1.95	29.11	3.37	1.1670	4.13
Ⅳ	1,088.0	6.42	1,117.64	103.20	2.26	28.13	6.97	1.2300	9.37
2019. 3	1,137.8	△1.73	1,130.72	110.66	△0.28	30.87	△0.98	1.1228	△1.86
4	1,158.2	△3.46	1,140.95	111.69	△1.20	30.91	△1.11	1.1184	△2.25
5	1,190.0	△6.04	1,183.29	109.60	0.69	31.58	△3.20	1.1133	△2.69
6	1,156.8	△6.04	1,175.62	107.78	2.39	30.97	△1.30	1.1369	△0.63
7	1,182.0	△5.41	1,175.31	108.60	1.62	31.04	△1.52	1.1158	△2.47
8	1,215.2	△7.99	1,208.98	106.54	3.58	31.32	△2.40	1.1059	△3.34
9	1,201.3	△6.93	1,197.55	107.90	2.28	31.05	△1.55	1.0944	△4.34
10	1,168.4	△4.31	1,184.13	108.79	1.44	30.36	0.69	1.1154	△2.51
11	1,179.3	△5.19	1,167.45	109.51	0.77	30.44	0.42	1.1011	△3.76
12	1,157.8	△3.43	1,175.84	108.87	1.36	30.09	1.59	1.1206	△2.05
2020. 1	1,183.5	△2.17	1,164.28	108.91	△0.04	30.22	△0.43	1.1033	△1.54
2	1,215.9	△4.78	1,193.79	109.55	△0.62	30.21	△0.40	1.1001	△1.83
3	1,222.6	△5.30	1,220.09	108.12	0.69	30.28	△0.63	1.1031	△1.56
4	1,225.2	△5.50	1,225.23	106.81	1.93	29.95	0.47	1.0826	△3.39
5	1,239.4	△6.58	1,228.67	107.72	1.07	29.94	0.50	1.1075	△1.17
6	1,200.7	△3.57	1,210.01	107.59	1.19	29.47	2.10	1.1245	0.35
7	1,191.4	△2.82	1,198.90	104.76	3.92	29.30	2.70	1.1845	5.70
8	1,185.1	△2.30	1,186.85	105.53	3.16	29.35	2.52	1.1908	6.26
9	1,173.5	△1.34	1,178.80	105.53	3.16	29.11	3.37	1.1670	4.14
10	1,133.4	2.15	1,144.68	104.61	4.07	28.38	6.02	1.1674	4.18
11	1,104.4	4.84	1,166.76	104.04	4.64	28.52	5.50	1.1967	6.79
12	1,088.0	6.42	1,095.13	103.20	5.49	28.13	6.97	1.2300	9.76

주 :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매매기준율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6. 통화·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 원 통 화[1]				M1[2]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7	155,881.0	8.7	151,858.1	10.5	849,862.4	6.8	802,016.5	9.2
2018	172,353.3	10.6	164,963.2	8.6	865,851.8	1.9	841,014.4	4.9
2019	191,829.3	11.3	178,648.7	8.5	952,922.8	10.1	876,942.0	4.3
2020	221,503.7	15.5	205,784.7	15.0	1,197,828.9	25.7	1,058,993.1	20.8
2018.1	158,176.6	6.1	157,220.1	6.7	828,767.6	6.1	830,732.7	6.3
2	165,676.0	12.8	163,852.7	9.2	840,022.9	7.0	839,555.2	8.1
3	163,765.6	7.4	160,760.7	10.8	851,585.0	7.3	840,991.0	6.6
4	159,088.0	7.3	161,527.1	8.0	836,600.2	5.5	841,002.2	6.2
5	162,659.7	11.2	160,475.5	7.4	836,585.2	5.7	839,880.5	6.2
6	167,048.3	11.4	164,397.3	9.2	861,938.2	5.6	846,240.2	5.9
7	164,566.5	8.9	163,223.4	8.8	837,164.2	5.0	843,752.8	4.8
8	170,586.8	10.3	165,629.2	8.8	833,299.0	4.1	837,607.5	4.0
9	177,902.4	9.9	170,529.6	10.3	853,227.3	1.9	845,523.7	4.3
10	173,738.9	10.6	170,478.9	7.1	840,308.0	2.7	840,678.4	1.7
11	171,141.7	10.6	168,326.2	8.2	837,247.6	2.0	840,084.9	2.7
12	172,353.3	10.6	173,137.8	9.2	865,851.8	1.9	846,123.7	1.9
2019.1	179,920.8	13.7	170,871.6	8.7	853,095.0	2.9	847,765.3	2.1
2	180,690.7	9.1	177,604.3	8.4	859,399.1	2.3	855,633.1	1.9
3	180,425.5	10.2	174,831.7	8.8	879,179.9	3.2	862,572.7	2.6
4	176,149.4	10.7	175,703.9	8.8	866,316.2	3.6	866,144.1	3.0
5	183,868.7	13.0	176,320.7	9.9	867,518.3	3.7	866,643.4	3.2
6	183,143.5	9.6	179,501.6	9.2	891,883.5	3.5	873,802.8	3.3
7	173,689.0	5.5	175,752.8	7.7	870,347.5	4.0	875,495.7	3.8
8	185,473.0	8.7	181,175.3	9.4	884,436.3	6.1	877,062.9	4.7
9	186,544.0	4.9	183,277.0	7.5	893,504.4	4.7	887,411.7	5.0
10	187,003.2	7.6	182,921.2	7.3	886,110.5	5.5	885,065.7	5.3
11	186,457.0	8.9	182,848.9	8.0	915,037.9	9.3	898,607.6	7.0
12	191,829.3	11.3	186,575.9	7.8	952,922.8	10.1	927,098.5	9.6
2020.1	190,856.9	6.1	191,811.4	12.3	944,941.3	10.3	945,103.8	11.5
2	196,955.4	9.0	191,866.5	8.0	985,115.1	14.6	957,889.6	12.0
3	194,031.8	7.5	195,193.8	11.6	1,007,631.7	14.6	988,826.3	14.6
4	200,616.9	13.9	196,412.8	11.8	1,017,011.8	17.4	1,012,290.1	16.9
5	210,307.2	14.4	202,831.3	15.0	1,053,861.3	21.5	1,034,074.1	19.3
6	220,161.7	20.2	206,573.5	15.1	1,089,940.0	22.2	1,060,079.8	21.3
7	208,587.6	20.1	207,071.6	17.8	1,076,194.2	23.7	1,076,665.6	23.0
8	218,973.5	18.1	209,877.2	15.8	1,091,858.3	23.5	1,087,250.7	24.0
9	216,881.0	16.3	213,539.2	16.5	1,137,817.1	27.3	1,110,397.1	25.1
10	218,553.2	16.9	216,704.9	18.5	1,133,457.9	27.9	1,130,987.6	27.8
11	221,264.9	18.7	217,690.2	19.1	1,156,045.0	26.3	1,139,632.4	26.8
12	221,503.7	15.5	219,844.4	17.8	1,197,828.9	25.7	1,164,720.1	25.6

주 :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 MMF 포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3]				Lf [4]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7	2,530,353.6	5.1	2,471,225.6	5.5	3,565,196.8	6.6	3,445,645.8	6.7
2018	2,700.362.4	6.7	2,626,902.0	6.3	3,824,267.7	7.2	3,686,392.2	7.0
2019	2,913,609.6	7.9	2,809,943.7	7.0	4,135,439.0	8.1	3,979,161.7	7.9
2020	3,199,835.7	9.8	3,070,830.4	9.3	4,478,137.8	8.3	4,311,148.1	8.3
2018.7	2,634,789.9	6.7	2,637,421.8	6.7	3,698,558.1	6.7	3,698,202.0	7.1
8	2,642,505.0	6.4	2,651,503.4	6.7	3,722,900.0	7.0	3,718,480.0	7.1
9	2,661,729.3	6.0	2,652,829.5	6.4	3,751,107.7	7.0	3,734,526.2	7.2
10	2,682.252.6	7.2	2,674,506.5	6.8	3,776,777.5	7.7	3,759,646.9	7.4
11	2,687,143.0	6.5	2,692,974.8	6.8	3,790,490.4	7.4	3,786,039.7	7.5
12	2,700,362.4	6.7	2,699,882.3	6.8	3,824,267.7	7.2	3,809,349.2	7.6
2019.1	2,712,849.6	6.2	2,716,722.0	6.5	3,838,756.5	7.2	3,838,826.3	7.4
2	2,739,656.1	6.6	2,730,481.9	6.2	3,873,345.9	7.3	3,850,189.3	7.1
3	2,763,165.2	6.9	2,752,723.9	6.8	3,908,081.3	7.5	3,889,792.1	7.6
4	2,760,406.6	6.8	2,763,058.0	6.6	3,918,052.3	7.9	3,909,977.2	7.7
5	2,773,218.1	6.3	2,771,633.0	6.6	3,939,473.0	7.5	3,929,454.2	7.9
6	2,813,932.9	6.9	2,799,248.0	6.7	3,993,040.2	8.0	3,965,906.9	8.0
7	2,807,361.7	6.5	2,811,543.7	6.6	3,996,494.1	8.1	3,993,671.0	8.0
8	2,848,885.3	7.8	2,832,566.1	6.8	4,046,431.5	8.7	4,023,017.6	8.2
9	2,853,964.3	7.2	2,853,272.0	7.6	4,053,810.9	8.1	4,048,352.3	8.4
10	2,871,952.2	7.1	2,874,176.1	7.5	4,077,468.4	8.0	4,073,019.4	8.3
11	2,917,439.1	8.6	2,901,465.4	7.7	4,127,453.3	8.9	4,105,907.7	8.4
12	2,913,609.6	7.9	2,912,434.1	7.9	4,135,439.0	8.1	4,121,825.8	8.2
2020.1	2,922,453.1	7.7	2,929,009.2	7.8	4,151,285.7	8.1	4,152,317.6	8.2
2	2,977,983.5	8.7	2,954,603.8	8.2	4,205,392.6	8.6	4,178,437.4	8.5
3	2,986,838.8	8.1	2,982,619.8	8.4	4,222,031.0	8.0	4,211,974.5	8.3
4	3,011,431.2	9.1	3,015,816.3	9.1	4,246,286.4	8.4	4,247,278.4	8.6
5	3,065,842.1	10.6	3,046,050.5	9.9	4,298,788.6	9.1	4,277,128.0	8.8
6	3,083,081.9	9.6	3,077,284.3	9.9	4,321,196.6	8.2	4,308,154.6	8.6
7	3,083,834.8	9.8	3,093,300.1	10.0	4,331,788.8	8.4	4,330,607.1	8.4
8	3,092,225.8	8.5	3,100,373.4	9.5	4,341,110.7	7.3	4,342,467.3	7.9
9	3,132,300.8	9.8	3,115,238.9	9.2	4,385,580.1	8.2	4,368,275.7	7.9
10	3,162,426.9	10.1	3,152,811.6	9.7	4,420,748.8	8.4	4,404,271.4	8.1
11	3,190,796.7	9.4	3,183,500.9	9.7	4,464,788.8	8.2	4,442,398.9	8.2
12	3,199,835.7	9.8	3,197,671.8	9.8	4,478,137.8	8.3	4,468,787.1	8.4

주 : 3」 M2(광의통화) = M1 + 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 = 현금통화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 상업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화폐발행액		회사채 유통수익률 (3年)	CD 유통수익률 (91物)	콜금리 (1日)	어음부도율(금액기준)[5]		주 식	
	말잔액	증감률 (%)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2017	107,907.6	10.8	2.33	1.44	1.26	0.13	0.15	2,311.4	34,029
2018	115,389.5	6.9	2.65	1.68	1.52	0.08	0.13	2,325.0	39,797
2019	125,698.9	8.9	2.02	1.69	1.59	0.04	0.08	2,106.1	47,072
2020	147,556.9	17.4	2.13	0.92	0.70	0.04	0.06	2,220.1	89,526
2018.2	112,751.8	12.5	2.82	1.65	1.49	0.05	0.09	2,439.1	40,451
3	109,523.6	10.1	2.83	1.65	1.49	0.09	0.12	2,451.6	38,471
4	109,613.4	8.4	2.79	1.65	1.47	0.17	0.19	2,458.2	49,714
5	110,517.0	9.1	2.86	1.65	1.50	0.14	0.22	2,461.3	64,103
6	110,069.3	8.6	2.81	1.65	1.49	0.09	0.14	2,394.5	49,741
7	110,474.5	8.4	2.75	1.65	1.49	0.02	0.10	2,284.3	34,134
8	110,584.7	7.9	2.66	1.65	1.50	0.01	0.07	2,283.8	28,203
9	116,454.7	5.2	2.40	1.65	1.54	0.09	0.14	2,307.3	31,960
10	113,859.8	6.2	2.45	1.68	1.52	0.04	0.09	2,153.5	33,439
11	114,080.9	6.8	2.40	1.71	1.51	0.17	0.18	2,083.3	31,723
12	115,389.5	6.9	2.30	1.91	1.77	0.03	0.07	2,070.1	40,168
2019.1	121,247.3	11.7	2.26	1.87	1.76	0.04	0.07	2,102.0	42,978
2	118,574.8	5.2	2.25	1.87	1.76	0.04	0.08	2,210.2	40,486
3	117,380.9	7.2	2.24	1.90	1.76	0.11	0.14	2,161.9	32,290
4	118,057.9	7.7	2.21	1.86	1.75	0.04	0.13	2,212.1	44,044
5	118,679.0	7.4	2.15	1.84	1.75	0.07	0.08	2,086.9	53,538
6	118,397.9	7.6	2.00	1.80	1.76	0.04	0.09	2,105.3	59,246
7	118,785.2	7.5	1.89	1.68	1.63	0.02	0.08	2,079.5	51,778
8	120,382.7	8.9	1.69	1.49	1.51	0.03	0.05	1,944.2	49,867
9	123,376.1	5.9	1.79	1.54	1.52	0.04	0.07	2,045.2	45,373
10	122,698.0	7.8	1.86	1.46	1.36	0.04	0.08	2,065.8	42,307
11	123,558.5	8.3	2.00	1.52	1.28	0.03	0.04	2,128.8	51,132
12	125,698.9	8.9	1.95	1.53	1.28	0.03	0.07	2,147.0	50,944
2020.1	131,930.1	8.8	1.96	1.47	1.27	0.05	0.08	2,203.4	65,480
2	129,811.6	9.5	1.85	1.42	1.24	0.01	0.02	2,167.1	69,799
3	130,190.5	10.9	1.84	1.23	0.98	0.03	0.08	1,786.8	77,687
4	133,311.6	12.9	2.15	1.10	0.74	0.08	0.08	1,849.6	105,226
5	135,187.4	13.9	2.18	1.02	0.70	0.05	0.07	1,965.2	85,297
6	136,623.0	15.4	2.22	0.79	0.48	0.03	0.05	2,134.7	90,290
7	138,252.0	16.4	2.22	0.79	0.48	0.03	0.05	2,196.0	82,030
8	139,588.7	16.0	2.19	0.68	0.51	0.01	0.03	2,349.9	88,216
9	145,593.5	18.0	2.24	0.63	0.48	0.02	0.03	2,371.5	93,366
10	144,829.9	18.0	2.24	0.63	0.50	0.03	0.05	2,357.8	82,661
11	145,511.3	17.8	2.25	0.66	0.50	0.03	0.06	2,504.2	116,086
12	147,556.9	17.4	2.21	0.66	0.51	0.07	0.08	2,755.8	116,957

주 : 5」 전자결제 조정 전

7. 경 기

(2015 = 100, %)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8. 1	111.4	0.3	101.6	109.3	0.2	101.5
2	111.8	0.4	101.6	109.8	0.5	101.7
3	112.0	0.2	101.5	110.1	0.3	101.8
4	112.0	0.0	101.2	110.3	0.2	101.8
5	112.4	0.4	101.2	110.5	0.2	101.6
6	112.6	0.2	101.1	110.6	0.1	101.6
7	112.9	0.3	101.1	110.7	0.1	101.4
8	112.8	△0.1	100.7	110.8	0.1	101.2
9	113.0	0.2	100.6	110.6	△0.2	100.8
10	113.0	0.0	100.4	110.7	0.1	100.7
11	113.0	0.0	100.2	110.7	0.0	100.4
12	113.1	0.1	99.9	110.7	0.0	100.2
2019. 1	113.2	0.1	99.7	111.1	0.4	100.3
2	113.3	0.1	99.6	110.8	△0.3	99.9
3	113.7	0.4	99.7	111.0	0.2	99.8
4	114.0	0.3	99.7	111.2	0.2	99.7
5	114.1	0.1	99.5	111.8	0.5	100.1
6	114.1	0.0	99.2	112.0	0.2	100.0
7	114.1	0.0	99.0	112.2	0.2	100.0
8	114.4	0.3	99.0	112.6	0.4	100.3
9	114.9	0.4	99.1	112.7	0.1	100.3
10	115.6	0.6	99.5	112.8	0.1	100.2
11	116.3	0.6	99.8	112.8	0.0	100.1
12	117.1	0.7	100.2	113.4	0.5	100.5
2020. 1	117.5	0.3	100.3	113.8	0.4	100.7
2	117.7	0.2	100.2	113.2	△0.5	100.1
3	117.4	△0.3	99.7	112.1	△1.0	99.0
4	117.5	0.1	99.5	111.1	△0.9	97.9
5	117.6	0.1	99.3	110.4	△0.6	97.2
6	118.3	0.6	99.7	110.7	0.3	97.4
7	119.0	0.6	100.0	111.0	0.3	97.6
8	120.0	0.8	100.6	111.8	0.7	98.1
9	120.9	0.8	101.0	112.3	0.4	98.5
10	121.6	0.6	101.4	113.0	0.6	99.0
11	122.6	0.8	102.0	113.8	0.7	99.5
12	123.4	0.7	102.4	114.0	0.2	99.7

※ p는 잠정치임

8. 재 정

(조원)

	통합재정지출[1] (GDP대비, %)[2]		경상 지출	이자지출	자본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입[1] (GDP대비, %)[2]		국세 수입	세외 수입	자본 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2002	136.0	(17.3)	106.3	6.8	29.4	0.4	158.7	(20.2)	104.0	33.5	1.5	19.7
2003	164.3	(19.6)	136.2	6.6	30.6	△2.5	171.9	(20.5)	114.7	35.1	1.5	20.7
2004	173.1	(19.1)	144.7	8.3	27.0	1.4	178.8	(19.7)	117.8	36.8	1.3	22.8
2005	186.6	(19.5)	158.9	8.7	24.6	3.0	191.4	(20.0)	127.5	37.8	1.3	24.9
2006	203.6	(20.2)	171.3	9.8	26.5	5.7	209.6	(20.8)	138.0	42.7	1.5	27.3
2007	206.6	(19.0)	173.3	10.2	26.2	7.1	243.6	(22.4)	161.5	50.5	1.9	29.7
2008	234.9	(20.3)	201.0	10.4	28.4	5.5	250.7	(21.7)	167.3	48.6	1.9	32.9
2009	268.4	(22.3)	215.1	11.5	35.2	18.0	250.8	(20.8)	164.5	49.8	2.5	33.9
2010	254.2	(19.2)	216.9	13.4	34.2	3.1	270.9	(20.5)	177.7	55.2	2.4	35.6
2011	273.7	(19.7)	235.5	14.6	34.3	3.9	292.3	(21.0)	192.4	58.5	2.5	38.9
2012	293.0	(20.3)	252.6	14.2	34.3	6.1	311.5	(21.6)	203.0	60.8	3.7	43.9
2013	300.2	(20.0)	268.0	13.4	34.0	△1.8	314.4	(21.0)	201.9	63.1	3.3	46.1
2014	312.4	(20.0)	280.5	14.1	31.0	0.9	320.9	(20.5)	205.5	62.9	2.7	49.8
2015	339.4	(20.5)	296.2	14.1	34.3	8.8	339.2	(20.5)	217.9	64.9	3.3	53.1
2016	354.4	(20.4)	310.0	14.0	32.6	11.7	371.3	(21.3)	242.6	68.4	3.4	56.9
2017	379.8	(20.7)	332.7	14.0	31.0	16.1	403.8	(22.0)	265.4	74.8	3.2	60.5
2018	407.1	(21.4)	360.2	14.3	29.4	17.5	438.3	(23.1)	293.6	77.1	2.7	64.9
2019	455.8	(23.8)	387.1	13.8	49.6	19.2	443.9	(23.1)	293.5	78.1	2.7	69.6
2020	517.8	(26.9)	455.1	14.5	34.9	27.8	446.6	(23.2)	285.5	83.6	2.9	74.6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2]		국가채무 (GDP대비, %)[2]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2001	7.3	(1.0)	△8.2	(△1.2)	121.8	(17.2)	17.3	21.2
2002	22.7	(2.9)	5.1	(0.6)	133.8	(17.0)	17.3	21.3
2003	7.6	(0.9)	1.0	(0.1)	165.8	(19.8)	17.7	22.0
2004	5.6	(0.6)	△3.6	(△0.4)	203.7	(22.4)	16.7	21.2
2005	4.9	(0.5)	△6.7	(△0.7)	247.9	(25.9)	17.1	21.7
2006	6.0	(0.6)	△8.4	(△0.8)	282.7	(28.1)	17.8	22.6
2007	37.0	(3.4)	6.8	(0.6)	299.2	(27.5)	18.8	23.7
2008	15.8	(1.4)	△11.7	(△1.0)	309.0	(26.8)	18.4	23.6
2009	△17.6	(△1.5)	△43.2	(△3.6)	359.6	(29.8)	17.4	22.7
2010	16.7	(1.3)	△13.0	(△1.0)	392.2	(29.7)	17.2	22.4
2011	18.6	(1.3)	△13.5	(△1.0)	420.5	(30.3)	17.6	23.2
2012	18.5	(1.3)	△17.4	(△1.2)	443.1	(30.8)	17.8	23.7
2013	14.2	(0.9)	△21.1	(△1.4)	489.8	(32.6)	17.0	23.1
2014	8.5	(0.5)	△29.5	(△1.9)	533.2	(34.1)	17.1	23.4
2015	△0.2	(△0.01)	△38.0	(△2.3)	591.5	(35.7)	17.4	23.7
2016	16.9	(1.0)	△22.7	(△1.3)	626.9	(36.0)	18.3	24.7
2017	24.0	(1.3)	△18.5	(△1.0)	660.2	(36.0)	18.8	25.4
2018	31.2	(1.6)	△10.6	(△0.6)	680.5	(35.9)	19.9	26.7
2019	△12.0	(△0.6)	△54.4	(△2.8)	723.2	(37.7)	20.0	27.3

주 : 1」통합재정 기준 2」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 → 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미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1]				경상수지	대외준비[2] (기말)	달러화 실효환율[3]	물 가[4]		실업률[5]	노동생산성[6]
			상품수출 (BOP)		상품수입 (BOP)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연율(%)	달러	억달러	전기대비 (%)	억달러	전기대비 (%)	십억달러	억달러	2006 =100	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 연율(%)
2017	2.3	60,091	15,570	6.8	23,563	6.8	△365	1,233	108.90	2.3	2.1	4.3	1.2
2018	3.0	63,043	16,769	7.7	25,572	8.5	△450	1,258	106.41	2.9	2.4	3.9	1.4
2019	2.2	65,240	16,524	△1.5	25,168	△1.6	△480	1,295	110.11	1.7	1.8	3.7	1.7
2020	. .	. .	. .	. .	. .	. .	. .	. .	108.99	. .	. .	. .	. .
2019.12			1,376.5	0.6	2,076.3	2.6		1,295	109.85	1.4	2.3	3.5	
2020.1			1,372.3	△0.3	2,033.5	△2.1		1,289	109.74	1.9	2.5	3.6	
2	△5.0	-	1,384.6	0.9	1,982.2	△2.5	△111.5	1,284	111.29	1.2	2.3	3.5	△0.3
3			1,278.5	△7.7	1,937.1	△2.3		1,279	112.71	0.3	1.5	4.4	
4			957.0	△25.1	1,673.6	△13.6		1,288	113.58	△1.4	0.3	14.7	
5	△31.4	-	899.7	△6.0	1,660.6	△0.8	△161.4	1,322	113.16	△1.0	0.1	13.3	10.6
6			1,030.5	14.5	1,748.5	5.3		1,339	110.31	△0.6	0.6	11.1	
7			1,155.3	12.1	1,964.1	12.3		1,400	108.83	△0.3	1.0	10.2	
8	33.1	-	1,189.6	3.0	2,028.6	3.3	△178.5	1,404	106.24	△0.2	1.3	8.4	4.6
9			1,226.5	3.1	2,034.3	0.3		1,390	106.57	0.5	1.4	7.9	
10			1,263.5	3.0	2,077.6	2.1		1,395	106.55	0.5	1.2	6.9	
11	33.4	-	. .	. .	. .	. .	. .	1,412	105.63	0.7	1.2	6.7	. .
12			. .	. . .	. .	. .		. .	103.31	. .	. .	. .	

연월중	통화[7] M2	금 리(연%)					산업생산[11]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13]
		Federal Funds Rate (목표)	재할인율[9] (기말)	프라임 레이트 (기말)	단기[9]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기[10]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 가동률 (%)[12]	소매 판매액	주택착공 호수	
	전기대비 (연율%)						전기대비(%)			전기대비(%)		
2017	4.8	1.25-1.50	2.00	4.50	0.95	2.33	2.3	2.0	75.1	4.3	2.5	24,719.2
2018	3.8	2.25-2.50	3.00	5.50	1.97	2.91	3.9	2.3	76.6	4.5	3.9	23,327.5
2019	6.7	1.50-1.75	2.25	4.75	2.10	2.14	0.8	△0.2	75.6	3.6	3.2	28,538.4
2020	. .	0.00-0.25	0.25	3.25	0.37	0.89	. .	. .	. .	. .	. .	30,606.5
2019.12	4.5	1.50-1.75	2.25	4.75	1.57	1.86	△0.4	0.2	75.3	0.1	15.8	28,538.4
2020.1	7.7	1.50-1.75	2.25	4.75	1.55	1.76	△0.4	△0.1	75.2	0.8	1.9	28,256.0
2	3.5	1.50-1.75	2.25	4.75	1.54	1.50	0.1	0.0	75.2	△0.4	△3.1	25,409.4
3	51.4	0.00-0.25	0.25	3.25	0.30	0.87	△4.4	△5.0	71.4	△8.2	△19.0	21,917.2
4	111.5	0.00-0.25	0.25	3.25	0.14	0.66	△12.7	△15.8	60.1	△14.7	△26.4	24,345.7
5	79.3	0.00-0.25	0.25	3.25	0.13	0.67	0.9	3.8	62.4	18.3	11.1	25,383.1
6	21.8	0.00-0.25	0.25	3.25	0.16	0.73	6.2	7.7	67.2	8.6	21.9	25,812.9
7	11.0	0.00-0.25	0.25	3.25	0.13	0.62	4.2	4.2	70.0	1.1	17.5	26,428.3
8	5.5	0.00-0.25	0.25	3.25	0.10	0.65	0.8	1.5	71.1	1.4	△7.7	28,430.1
9	17.1	0.00-0.25	0.25	3.25	0.11	0.68	△0.1	0.1	71.2	1.7	4.7	27,781.7
10	11.1	0.00-0.25	0.25	3.25	0.10	0.79	0.9	1.1	72.0	△0.1	6.3	26,501.6
11	18.9	0.00-0.25	0.25	3.25	0.09	0.87	0.4	0.8	72.6	△1.1	1.2	29,638.6
12	. .	0.00-0.25	0.25	3.25	0.09	0.93	. .	. .	. .	. .	..	30,606.5

주: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수요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2009=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 + 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 + 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 + 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 + 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 + 일반투자가 보유 MMF - 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eo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 1. 9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 주가, 기말기준

(중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 상 수 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 율 (Yuan/U$)[2]	
			수출(FOB)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2017	6.9	8,883	22,633	7.9	18,438	16.1	1,951	31,399	6.534	6.752
2018	6.7	9,982	24,867	9.9	21,357	15.8	255	30,727	6.863	6.617
2019	6.1	10,264	24,995	0.5	20,782	△2.7	1,413	31,079	6.976	6.898
2020	. .	. .	. .	. .	. .	. .	. .	. .	6.525	6.898
2019.12			2,386	8.1	1,914	16.7		31,079	6.976	7.013
2020.1			2,122	-2.6	1,570	△12.6		31,155	6.888	6.917
2	△6.8	-	806	△40.5	1,426	7.7	△337	31,067	7.007	6.992
3			1,851	-6.6	1,651	△1.1		30,606	7.085	7.012
4			2,001	3.4	1,549	△14.2		30,915	7.057	7.069
5	3.2	-	2,071	△3.2	1,441	△16.6	1,102	31,017	7.132	7.099
6			2,136	0.5	1,672	2.7		31,123	7.080	7.087
7			2,376	7.2	1,753	△1.4		31,544	6.985	7.009
8	4.9	-	2,353	9.5	1,763	△2.1	922	31,646	6.861	6.935
9			2,398	9.9	2,028	13.2		31,426	6.810	6.815
10			2,372	11.4	1,787	4.7		31,280	6.723	6.711
11	-	-	2,681	21.1	1,926	4.5	-	31,785	6.578	6.609
12			. .	. .	. .	. .		. .	6.525	6.542

연월중	물 가		통 화[3]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4]		소매판매[4]	주가지수[5]
	생산자	소비자	M1	M2	재할인율	금융기관 대출금리 (1년)	전산업	국유기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7	6.3	1.6	11.8	8.1	2.25	-	6.6	6.5	10.2	3,307.17
2018	3.5	2.1	1.5	8.1	2.25	-	6.2	6.2	9.0	2,493.90
2019	△0.3	2.9	4.4	8.7	2.25	4.15	5.7	4.8	8.0	3,050.12
2020	. .	. .	. .	. .	2.00	3.85	. .	. .	. .	3,473.07
2019.12	△0.5	4.5	4.4	8.7	2.25	4.15	6.9	7.0	8.0	3050.120
2020.1	0.1	5.4	0.0	8.4	2.25	4.15	-	-	-	2976.530
2	△0.4	5.2	4.8	8.8	2.25	4.05	△13.5	△7.9	△20.5	2880.300
3	△1.5	4.3	5.0	10.1	2.25	4.05	△1.1	△2.5	△15.8	2750.300
4	△3.1	3.3	5.5	11.1	2.25	3.85	3.9	0.5	△7.5	2860.080
5	△3.7	2.4	6.8	11.1	2.25	3.85	4.4	2.1	△2.8	2852.350
6	△3.0	2.5	6.5	11.1	2.25	3.85	4.8	4.9	△1.8	2984.670
7	△2.4	2.7	6.9	10.7	2.00	3.85	4.8	4.1	△1.1	3310.010
8	△2.0	2.4	8.0	10.4	2.00	3.85	5.6	5.2	0.5	3395.680
9	△2.1	1.7	8.1	10.9	2.00	3.85	6.9	6.5	3.3	3218.050
10	△2.1	0.5	9.1	10.5	2.00	3.85	6.9	5.4	4.3	3224.530
11	△1.5	△0.5	10.0	10.7	2.00	3.85	7.0	5.9	5.0	3391.760
12	. .	. .	. .	. .	2.00	3.85	. .	. .	. .	3473.070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기준 4) 2월은 1~2월 누계치
5) 상해 종합주가지수(1990=100), 기말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일 본)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 율[2] (¥/U$)		물 가[3]		실업률[4]	노 동[5] 생산성
			수출(FOB)		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연율 (%)	미달러	억엔	전년동기 대비 (%)	억엔	전년동기 대비 (%)	십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 기대비 (%)
2017	1.7	38,424	782,865	11.8	753,792	14.1	22,778	12,643	112.69	112.15	2.3	0.5	2.6	2.0
2018	0.6	39,186	814,788	4.1	827,033	9.7	19,400	12,710	109.70	110.44	2.6	1.0	2.4	0.7
2019	0.3	40,313	769,317	△5.6	785,995	-5.0	20,526	13,238	108.61	109.03	0.2	0.5	2.4	△1.7
2020	. .	. .	. .	. .	. .	. .	. .	. .	103.25	106.77	. .	. .	. .	. .
2020.1			54,312.0	△2.6	67,463.1	△3.6	662	13,423	108.36	109.28	1.5	0.7	2.4	△4.7
2	△0.5	-	63,212.9	△1.0	52,147.0	△13.9	3,180	13,590	107.77	110.03	0.7	0.4	2.4	△4.6
3			63,580.5	△11.7	63,508.5	△5.0	1,959	13,662	107.54	107.69	△0.5	0.4	2.5	△4.8
4			52,060.3	△21.9	61,371.9	△7.1	203	13,686	107.18	107.80	△2.5	0.1	2.6	△12.8
5	△8.3	-	41,856.2	△28.3	50,269.6	△26.1	1,080	13,782	107.83	107.22	△2.8	0.1	2.9	△17.7
6			48,623.5	△26.2	51,352.6	△14.4	133	13,832	107.93	107.61	△1.6	0.1	2.8	△10.4
7			53,691.8	△19.2	53,621.0	△22.3	1,499	14,025	105.83	106.72	△0.9	0.3	2.9	△11.0
8	5.3	-	52,331.0	△14.8	49,887.3	△20.7	2,115	13,985	105.91	106.05	△0.6	0.2	3.0	△5.4
9			60,541.4	△4.9	53,704.0	△17.4	1,660	13,898	105.48	105.61	△0.8	0.0	3.0	△5.8
10			65,658.1	△0.2	56,966.6	△13.2	2,145	13,844	104.66	105.21	△2.1	△0.4	3.1	△2.3
11	. .	-	61,136.6	△4.2	57,475.5	△11.1	. .	13,846	104.31	104.41	△2.2	△0.9	2.9	. .
12			. .	. .	. .	. .	. .	. .	103.25	103.76	. .	. .	. .	. .

연월중	통화[6]	금리(기말, 연%)			광 공 업[8]				수요관련지표			주가 지수[11]
	M3	기 준 대 출 이 율[7]	단 기 프라임 레이트	장 기 프라임 레이트	생 산	출 하	재 고	제조업 가동률	소 매 판 매	민간 기계 수주액[9]	민간건설 수주액[10]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비(%)				전기대비 (%)	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2017	3.4	0.30	1.475	1.00	3.1	2.5	4.1	102.3	1.9	△1.1	1.7	22,765
2018	2.5	0.30	1.475	1.00	1.1	0.8	1.7	103.1	1.7	3.6	△0.5	20,015
2019	2.1	0.30	1.475	0.95	△3.0	△2.7	1.2	99.9	0.1	△0.7	13.5	23,657
2020	. .	0.30	1.475	1.00	. .	. .	. .	. .	. .	. .	. .	27,444
2020.1	2.3	0.30	1.475	0.95	1.9	0.9	2.1	97.4	1.5	2.9	△15.9	23,205
2	2.4	0.30	1.475	0.95	△0.3	1.0	△1.7	95.6	0.5	2.3	△3.9	21,143
3	2.7	0.30	1.475	0.95	△3.7	△5.8	1.9	92.2	△4.6	△0.4	△22.9	18,917
4	3.0	0.30	1.475	1.10	△9.8	△9.5	△0.3	79.9	△9.9	△12.0	△30.8	20,194
5	4.1	0.30	1.475	1.05	△8.9	△8.9	△2.6	70.6	1.9	1.7	△4.5	21,878
6	5.9	0.30	1.475	1.05	1.9	4.8	△2.4	75.0	13.1	△7.6	△22.5	22,288
7	6.5	0.30	1.475	1.05	8.7	6.6	△1.5	82.2	△3.4	6.3	△31.6	21,710
8	7.1	0.30	1.475	1.00	1.0	1.5	△1.3	84.6	4.6	0.2	45.9	23,140
9	7.4	0.30	1.475	1.00	3.9	3.9	△0.5	90.0	△0.1	△4.4	△17.0	23,185
10	7.5	0.30	1.475	1.00	4.0	4.9	△1.8	95.4	0.5	17.1	△12.4	22,977
11	7.6	0.30	1.475	1.00	0.0	△0.9	△1.1	. .	△2.0	. .	2.0	26,434
12	. .	0.30	1.475	1.00	. .	. .	. .	. .	. .	. .	. .	27,444

주: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2) 동경시장 현지종가 기준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2010 =100, 생산자물가 2010 = 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4) 계절변동조정 후 5) 제조업 2010년=100 6)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기준 7)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합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할인률 및 기준대출이율」로 명칭 변경 8) 광공업 2010년=100 9)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10) 민간건설수주는 대기업 50사 대상 11) 기말기준

자료: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생산성본부, IMF 등

(유로지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 역[1) 2)]				경상수지[2)]	대외준비(기말)[3)]	대미달러 환 율 (U$/EUR)		물 가[4)]		실업률 (%)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 대비 (%)	억유로	전기 대비 (%)	억유로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2017	2.6	32,900	21,933	7.0	19,526	9.9	3,486	8,030	1.200	1.130	3.0	1.5	9.0
2018	1.9	33,900	22,829	4.1	20,924	7.2	3,335	8,232	1.147	1.181	3.2	1.8	8.1
2019	1.3	34,820	23,477	2.8	21,267	1.6	2,730	9,136	1.121	1.119	0.7	1.2	7.5
2020	. .	. .	. .	. .	. .	. .	. .	. .	1.221	1.217	. .	. .	. .
2020.1			1,970	△0.2	1,781	2.2	162	9,359	1.109	1.110	△0.8	1.4	7.3
2	△3.7	-	1,986	0.8	1,731	△2.8	247	9,493	1.103	1.090	△1.4	1.2	7.2
3			1,830	△7.8	1,566	△9.6	105	9,490	1.103	1.106	△2.8	0.7	7.4
4			1,355	△26.0	1,355	△13.5	93	9,895	1.096	1.087	△4.6	0.3	7.2
5	△11.7	-	1,478	9.1	1,396	3.0	150	9,976	1.110	1.090	△5.0	0.1	7.7
6			1,635	10.6	1,479	6.0	191	10,134	1.123	1.126	△3.7	0.3	7.9
7			1,730	5.8	1,543	4.3	168	10,937	1.177	1.147	△3.2	0.4	8.7
8	12.5	-	1,758	1.6	1,548	0.4	209	10,924	1.194	1.183	△2.6	△0.2	8.6
9			1,824	3.8	1,587	2.5	252	10,650	1.172	1.179	△2.3	△0.3	8.5
10			1,862	2.1	1,603	1.0	266	10,701	1.165	1.177	△2.0	△0.3	8.4
11	. .	-	. .	. .	. .	. .	. .	10,297	1.193	1.184	. .	△0.3	. .
12			. .	. .	. .	. .	. .	. .	1.221	1.217	. .	. .	. .

연월중	통화 M3[5)]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 지수[9)]
		초단기 여 신 금 리	초단기 수 신 금 리	단기공개 시장조작 금 리	EURIBO[6)]	장 기 국 채 수익률[7)]	전산업[8)]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신규차량 등록수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비(%)			전기대비 (%)	전년동기 대비(%)	
2017	4.9	0.25	△0.40	0.00	△0.33	0.52	3.0	3.1	2.8	2.5	5.7	3,504.0
2018	4.0	0.25	△0.40	0.00	△0.31	0.32	0.7	1.0	1.4	1.6	0.9	3,001.4
2019	5.0	0.25	△0.50	0.00	△0.38	△0.14	△1.3	△1.2	1.9	2.4	1.8	3,745.2
2020	. .	0.25	△0.50	0.00	△0.55	△0.57	. .	. .	. .	. .	. .	3,552.6
2020.1	5.2	0.25	△0.50	0.00	△0.39	△0.40	2.2	2.4	3.6	0.7	△5.8	3,640.9
2	5.5	0.25	△0.50	0.00	△0.42	△0.57	0.0	0.1	△0.7	0.4	△6.3	3,329.5
3	7.5	0.25	△0.50	0.00	△0.36	△0.41	△11.7	△12.6	△15.0	△10.2	△60.3	2,786.9
4	8.2	0.25	△0.50	0.00	△0.27	△0.46	△18.0	△19.5	△17.9	△11.8	△79.6	2,927.9
5	9.0	0.25	△0.50	0.00	△0.31	△0.36	12.5	13.5	29.1	20.2	△48.5	3,050.2
6	9.3	0.25	△0.50	0.00	△0.42	△0.45	9.5	10.6	5.6	5.7	△28.0	3,234.1
7	10.1	0.25	△0.50	0.00	△0.46	△0.49	5.4	5.9	0.0	△1.6	△3.8	3,174.3
8	9.5	0.25	△0.50	0.00	△0.48	△0.37	0.5	0.3	4.0	4.2	△15.7	3,272.5
9	10.4	0.25	△0.50	0.00	△0.50	△0.50	0.1	0.1	△2.7	△1.7	△1.8	3,193.6
10	10.5	0.25	△0.50	0.00	△0.52	△0.60	2.1	1.9	0.5	1.5	△4.8	2,958.2
11	11.0	0.25	△0.50	0.00	△0.53	△0.55	. .	. .	. .	. .	△14.9	3,492.5
12	. .	0.25	△0.50	0.00	△0.55	△0.57	. .	. .	. .	. .	. .	3,552.6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역내교역제외 2) 계절변동조정 후, 연간은 계절변동조정 전 3)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SDR + IMF포지션 + 외환) 4)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5)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예금+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건설업 제외 9)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EU통계청, 블룸버그, Reuters 등

(독 일)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1]	무 역[2]				경상수지[2]	대 외 준 비 (기말)[3]	물 가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4]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017	2.6	39,440	12,790	6.2	10,310	8.0	2,539	2,001	2.7	1.5
2018	1.3	40,480	13,174	3.0	10,887	5.6	2,475	1,982	2.6	1.8
2019	0.6	41,510	13,278	0.8	11,046	1.5	2,448	2,238	1.1	1.4
2020	. .	. .	. .	. .	. .	. .	. .	. .	. .	. .
2020.1			1,111	0.1	925	0.7	219	2,315	0.2	1.7
2	△1.9	-	1,125	1.3	913	△1.2	238	2,368	△0.1	1.7
3			993	△11.8	866	△5.2	171	2,341	△0.8	1.4
4			757	△23.8	723	△16.5	96	2,468	△1.9	0.9
5	△9.8	-	822	8.6	751	3.9	112	2,485	△2.2	0.6
6			947	15.2	807	7.5	168	2,532	△1.8	0.9
7			988	4.3	814	0.9	216	2,767	△1.7	△0.1
8	8.5	-	1,016	2.9	862	5.8	219	2,750	△1.2	△
9			1,039	2.3	863	0.2	208	2,659	△1.0	△0.2
10			1,048	0.8	866	0.3	220	2,664	△0.7	△0.2
11	. .	-	. .	. .	. .	. .	. .	2,543	△0.5	△0.3
12			. .	. .	. .	. .	. .	. .	. .	. .

연월중	실업률 (%)[5]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주가지수[9]
		단기국채 수익률[6]	장기국채 수익률[7]	전산업[8]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자본재 수 주	건설수주	
2017	3.8	△0.69	0.43	3.4	3.5	3.2	3.6	5.7	3.2	12,918
2018	3.4	△0.77	0.24	1.0	1.1	0.3	1.6	0.8	4.7	10,559
2019	3.1	△0.70	△0.19	△4.3	△4.1	3.4	3.2	△5.4	3.1	13,249
2020	. .	△0.76	△0.57	. .	. .	. .	. .	. .	. .	13,719
2020.1	3.4	△0.54	△0.43	2.1	2.3	5.2	1.1	6.2	1.7	12,982
2	3.6	△0.62	△0.61	0.4	0.4	0.2	0.4	△2.8	△6.8	11,890
3	3.8	△0.68	△0.47	△10.7	△11.0	0.7	△1.4	△22.5	△9.7	9,936
4	4.0	△0.57	△0.59	△20.0	△20.7	△4.5	△6.2	△31.6	2.5	10,862
5	4.2	△0.52	△0.45	9.3	9.9	△0.1	13.0	20.5	△5.3	11,587
6	4.3	△0.54	△0.45	10.8	11.2	2.9	△1.4	47.3	11.7	12,311
7	4.4	△0.56	△0.52	2.8	3.1	△5.7	0.3	0.5	△6.1	12,313
8	4.5	△0.56	△0.40	0.2	0.1	2.0	1.9	5.3	4.1	12,945
9	4.5	△0.60	△0.52	2.3	2.3	2.1	△1.5	△1.2	3.6	12,761
10	4.5	△0.72	△0.63	3.4	3.1	1.6	2.6	3.8	0.1	11,556
11	. .	△0.73	△0.57	. .	. .	. .	1.9	. .	. .	13,291
12	. .	△0.76	△0.57	. .	. .	. .	..	. .	. .	13,719

주 : 연간 수치는 원계열,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2) 계절변동조정 후, 경상수지 연간은 계절변동조정 전 3) 독일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10년 만기 8) 건설업 제외 9) DAX Index(1987. 12. 30=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EU통계청, 블룸버그 등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1]	무 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2] (기말)	대미달러 환 율 (U$/£)[3]		실업률[4]
			상품수출(BOP)		상품수입(BOP)						
	전기대비 (%)	유로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전기대비 (%)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	
2017	1.7	35,730	3,362	13.0	4,716	9.6	△780	1,508	1.3512	1.2887	4.4
2018	1.3	36,440	3,511	4.4	4,880	3.5	△789	1,727	1.2757	1.3349	4.1
2019	1.4	37,770	3,731	6.3	5,040	3.3	△686	1,736	1.3259	1.2766	0.0
2020	. .	. .	. .	. .	. .	. .	. .	. .	1.3673	1.3451	. .
2020.1			301	△15.1	370	△0.7		1,694	1.3199	1.3083	3.9
2	△3.0	–	269	△10.8	375	1.6	△187	1,667	1.2820	1.2953	4.0
3			251	△6.5	368	△2.1		1,702	1.2418	1.2358	4.0
4			239	△4.8	279	△24.1		1,734	1.2592	1.2416	4.0
5	△18.8	–	246	2.8	272	△2.5	△119	1,745	1.2344	1.2292	4.1
6			255	3.6	321	17.9		1,732	1.2399	1.2525	4.1
7			262	2.7	340	6.0		1,779	1.3088	1.2683	4.3
8	16.0	–	265	1.4	333	△1.9	△157	1,767	1.3369	1.3134	4.5
9			274	3.3	367	10.2		1,760	1.2916	1.2954	4.8
10			258	△5.9	378	2.8		1,759	1.2941	1.2976	4.9
11	. .	–	. .	. .	. .	. .	. .	1,748	1.3321	1.3214	. .
12			. .	. .	. .	. .		. .	1.3673	1.3451	. .

연월중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10]
	생산자[5]	소비자	M4[6]	정책금리[7]	장기국채 수익률[8]	전산업[9]	제조업	소 매 판 매	기업투자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				
2017	3.4	2.7	3.8	0.50	1.74	1.7	2.4	2.0	1.5	7,687.8
2018	2.9	2.5	2.1	0.75	1.75	0.8	1.1	2.6	△2.5	6,728.1
2019	1.6	1.8	3.8	0.75	1.23	△1.4	△1.7	2.9	1.1	7,542.4
2020	. .	. .	. .	0.10	0.69	. .	. .	. .	. .	6,460.5
2020.1	1.0	1.8	4.9	0.75	0.94	△0.1	0.2	1.7		7,286.0
2	0.5	1.7	5.0	0.75	0.84	0.4	0.8	△0.9	△0.5	6,580.6
3	0.3	1.5	8.2	0.10	0.75	△4.6	△6.1	△3.6		5,672.0
4	△0.7	0.8	9.5	0.10	0.54	△19.6	△25.1	△14.9		5,901.2
5	△1.2	0.5	11.9	0.10	0.51	5.7	7.9	10.2	△26.5	6,076.6
6	△0.9	0.6	13.1	0.10	0.56	9.8	12.0	13.4		6,169.7
7	△0.9	1.0	13.5	0.10	0.53	5.2	6.9	2.2		5,897.8
8	△0.9	0.2	12.1	0.10	0.76	0.3	0.9	0.7	8.8	5,963.6
9	△0.9	0.5	12.4	0.10	0.74	0.5	0.1	1.3		5,866.1
10	. .	0.7	12.9	0.10	0.79	1.3	1.8	1.4		5,577.3
11	. .	0.3	12.8	0.10	0.81	. .	. .	. .	. .	6,266.2
12	. .	. .	. .	0.10	0.69	. .	. .	. .		6,460.5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 통계청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7) 영란은행(Official Bank Rate) 8) 20년만기 9) 건설업 제외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EU통계청, 블룸버그, Reuter 등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 수출(FOB)		무역 수입(CIF)		경상수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율[2] (NT$/U$)		실업률 (%)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백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만 미달러		기말	평균	
2017	3.3	25,080	317,490	13.2	259,580	12.4	83,093	451,500	29.66	30.41	3.8
2018	2.8	25,838	336,110	5.9	287,180	10.6	70,843	461,780	30.56	30.13	3.7
2019	3.0	25,941	330,680	△1.6	287,260	0.0	65,173	478,130	29.91	30.88	3.7
2020	-	-	. .	. .	. .	. .	—	. .	28.08	29.44	. .
2020.1			25,070	△7.6	21,610	△17.6		479,130	30.35	30.02	3.6
2	2.5	-	25,380	24.9	22,080	44.8	16,810	479,680	30.12	30.16	3.7
3			28,270	△0.7	25,480	0.4		480,390	30.27	30.14	3.7
4			25,240	△1.3	22,970	0.4		481,780	29.78	30.07	4.0
5	0.4	-	27,000	△2.0	22,280	△3.5	20,453	484,510	29.94	29.93	4.1
6			27,130	△3.8	22,290	△8.6		488,690	29.41	29.64	4.0
7			28,200	0.3	22,830	△6.8		496,170	29.34	29.41	4.0
8	3.9	-	31,170	8.3	24,710	8.5	28,651	498,170	29.37	29.38	4.0
9			30,710	9.4	23,580	△5.4		499,600	28.92	29.19	3.8
10			32,230	11.2	24,770	△1.0		501,240	28.58	28.69	3.8
11	-	-	31,990	12.0	26,720	10.0	-	513,400	28.58	28.53	3.8
12			. .	. .	. .	. .		. .	28.08	28.19	. .

연월중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노동생산성[3]	통화[4] M1B	통화[4] M2	금리(기말, 연%) 재할인율	금리(기말, 연%) 프라임레이트[5]	산업생산 전산업	산업생산 제조업	소매판매	주가지수[6]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7	0.9	0.6	3.5	4.0	3.6	1.375	2.631	5.2	5.5	0.8	10,642.86
2018	3.7	1.4	2.5	5.7	3.1	1.375	2.631	3.7	3.9	2.5	9,727.41
2019	△2.2	0.6	△1.0	7.4	4.1	1.375	2.631	△0.3	△0.4	3.1	11,997.14
2020	. .	. .	. .	. .	. .	1.125	2,440	. .	. .	. .	14,732.53
2020.1	△3.3	1.9	23.5	7.6	4.6	1.375	2.631	△2.1	△1.9	2.0	11,495.10
2	△4.5	△0.2	△5.3	7.0	4.4	1.375	2.631	20.7	21.5	△0.8	11,292.17
3	△7.5	0.0	4.1	7.0	4.4	1.125	2.631	11.2	11.9	△3.5	9,708.06
4	△11.2	△1.0	5.9	7.5	4.2	1.125	2.577	4.2	4.9	△10.2	10,992.14
5	△12.2	△1.2	12.4	7.8	4.2	1.125	2.477	1.7	1.8	△5.7	10,942.16
6	△10.3	△0.8	3.4	9.9	5.4	1.125	2.480	7.2	7.6	△1.3	11,621.24
7	△9.0	△0.5	6.3	10.3	5.9	1.125	2.440	2.8	2.8	2.8	12,664.80
8	△8.8	△0.3	9.3	11.0	6.7	1.125	2.441	3.6	4.1	8.2	12,591.45
9	△8.1	△0.6	3.3	12.1	7.2	1.125	2.440	11.6	12.2	3.1	12,515.61
10	△7.4	△0.3	20.9	12.9	7.1	1.125	2.440	6.4	6.9	3.3	12,546.34
11	△6.2	0.1	. .	14.3	7.6	1.125	2.440	7.8	8.2	2.5	13,722.89
12	. .	. .	. .	. .	. .	1.125	2.440	. .	. .	. .	14,732.53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로이터 고시환율 3) 제조업, 2016=100 4) M1B = 현금통화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보통저축예금, M2 = M1B + 정기예금 + 외화예금 + 우편예금 + 환매거래잔액 + 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준 5) 대만은행 6) 가권지수(1966 = 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 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2003	645	1,770	1,036	5,037	1,850	2,558	2,523	1,186	1,801	3,690	973
2004	689	1,922	1,097	5,698	1,953	2,658	2,794	1,279	1,876	3,872	1,051
2005	732	2,045	1,167	6,543	2,048	2,761	3,149	1,394	1,951	4,059	1,131
2006	775	2,191	1,234	7,599	2,161	2,953	3,545	1,515	2,046	4,242	1,226
2007	831	2,386	1,294	8,915	2,273	3,123	3,996	1,654	2,132	4,428	1,332
2008	870	2,556	1,332	9,965	2,323	3,214	4,233	1,812	2,152	4,464	1,399
2009	893	2,573	1,303	10,985	2,274	3,054	4,627	1,911	2,054	4,255	1,421
2010	924	2,799	1,359	12,287	2,345	3,219	5,161	2,057	2,114	4,485	1,535
2011	970	2,971	1,431	13,736	2,446	3,415	5,618	2,230	2,173	4,573	1,625
2012	984	2,999	1,468	15,137	2,474	3,487	6,153	2,413	2,172	4,747	1,685
2013	1,083	3,134	1,554	16,277	2,609	3,629	6,478	2,535	2,187	4,967	1,727
2014	1,112	3,187	1,621	17,201	2,662	3,807	6,781	2,622	2,200	4,987	1,793
2015	1,113	3,015	1,595	17,880	2,719	3,890	7,160	2,648	2,242	5,136	1,934
2016	1,174	2,939	1,678	18,702	2,864	4,165	7,735	2,745	2,420	5,076	2,027
2017	1,234	3,018	1,777	19,814	2,997	4,402	8,281	2,894	2,530	5,180	2,106
2018	1,298	3,131	1,857	21,659	3,124	4,565	8,999	3,117	2,611	5,319	2,219
2019	1,346	3,223	1,921	23,393	3,228	4,672	9,542	3,332	2,666	5,451	2,305
2020	1,308	3,079	1,809	24,162	2,954	4,454	8,681	3,328	2,415	5,236	2,293

기간중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003	1,356	578	507	1,924	931	1,127	293	312	787	1,799	11,458
2004	1,447	606	548	2,117	1,032	1,194	314	329	887	1,892	12,214
2005	1,526	637	585	2,322	1,123	1,276	333	350	997	2,013	13,037
2006	1,643	679	640	2,588	1,189	1,368	359	375	1,098	2,131	13,815
2007	1,726	724	703	2,884	1,244	1,456	382	401	1,185	2,242	14,452
2008	1,780	754	747	3,095	1,347	1,497	387	417	1,218	2,279	14,713
2009	1,698	732	774	2,874	1,330	1,452	373	411	1,168	2,199	14,449
2010	1,806	750	811	3,039	1,413	1,471	400	428	1,281	2,268	14,992
2011	1,911	778	870	3,259	1,587	1,490	422	445	1,454	2,351	15,543
2012	2,013	792	907	3,480	1,672	1,484	432	463	1,551	2,440	16,197
2013	2,064	827	940	3,742	1,680	1,512	445	486	1,704	2,563	16,785
2014	2,173	830	974	3,764	1,723	1,558	458	507	1,860	2,666	17,527
2015	2,231	852	1,020	3,526	1,542	1,622	481	530	2,023	2,769	18,238
2016	2,383	890	1,074	3,539	1,476	1,733	500	550	2,116	2,898	18,745
2017	2,473	948	1,145	3,819	1,566	1,844	530	568	2,282	3,037	19,543
2018	2,588	994	1,235	4,010	1,643	1,933	554	597	2,406	3,152	20,612
2019	2,626	1,029	1,309	4,136	1,677	2,006	571	615	2,472	3,255	21,433
2020	2,425	987	1,281	4,022	1,609	1,773	552	591	2,382	2,979	20,80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Gross domestic product(구매력평가(PPP) 기준)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2003	27,213	3,089	28,339	1,282	30,683	30,669	18,535	556	1,187	27,574
2004	32,762	3,660	32,177	1,500	35,016	34,535	22,015	639	1,281	31,336
2005	36,140	4,820	36,440	1,751	36,057	35,020	22,608	727	1,404	32,020
2006	37,876	5,921	40,559	2,095	37,796	36,894	24,859	814	1,765	33,432
2007	45,103	7,391	44,717	2,691	43,060	42,300	28,900	1,047	2,064	37,809
2008	49,150	8,878	46,774	3,447	47,155	46,368	32,174	1,020	2,418	40,796
2009	45,685	8,650	40,991	3,813	43,191	42,339	29,829	1,121	2,465	36,965
2010	56,459	11,333	47,627	4,500	42,179	42,380	26,971	1,384	3,178	35,805
2011	67,209	13,296	52,286	5,561	45,420	46,698	25,903	1,458	3,689	38,274
2012	68,445	12,425	52,744	6,307	42,372	43,883	22,172	1,444	3,745	34,707
2013	65,175	12,358	52,709	7,073	44,145	46,299	21,805	1,450	3,684	35,398
2014	61,648	12,176	51,021	7,694	44,616	48,036	21,727	1,574	3,534	35,579
2015	51,484	8,846	43,626	8,085	37,938	41,107	18,115	1,606	3,368	30,213
2016	51,934	8,757	42,383	8,120	38,349	42,124	18,111	1,732	3,606	30,933
2017	55,968	9,975	45,205	8,823	40,134	44,537	18,900	1,982	3,885	32,367
2018	56,453	9,043	46,391	9,920	43,083	47,832	20,318	2,006	3,947	34,500
2019	54,348	8,751	46,272	10,522	41,897	46,473	19,570	2,098	4,197	33,159
2020	51,885	6,450	42,080	10,839	39,257	45,466	18,168	1,877	4,038	30,657
기간중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대만	터키	영국	미국
2003	34,831	14,673	7,075	3,198	3,744	21,501	14,041	4,685	34,457	39,412
2004	37,697	16,496	7,485	4,404	4,839	24,932	15,290	6,016	40,334	41,630
2005	37,224	19,403	8,278	5,709	5,384	26,438	16,427	7,351	42,069	44,026
2006	35,464	21,743	9,068	7,426	5,611	28,414	16,893	7,961	44,677	46,214
2007	35,342	24,086	9,643	9,761	6,092	32,589	17,724	9,641	50,589	47,869
2008	39,453	21,350	10,017	12,464	5,766	35,484	18,054	10,778	47,774	48,283
2009	41,014	19,138	8,003	9,157	5,880	32,131	16,905	8,941	38,861	47,008
2010	44,674	23,085	9,271	11,431	7,312	30,567	19,181	10,533	39,479	48,403
2011	48,169	25,095	10,203	14,306	7,997	31,677	20,839	11,221	42,036	49,829
2012	48,633	25,467	10,242	15,288	7,488	28,345	21,256	11,638	42,467	51,563
2013	40,490	27,183	10,725	15,929	6,824	29,085	21,945	12,489	43,488	53,072
2014	38,156	29,250	10,929	14,008	6,430	29,525	22,844	12,079	47,454	55,025
2015	34,569	28,732	9,617	9,258	5,732	25,764	22,753	10,974	44,989	56,849
2016	38,772	29,287	8,745	8,724	5,267	26,565	23,071	10,891	41,194	58,017
2017	38,399	31,617	9,288	10,724	6,120	28,273	25,062	10,629	40,407	60,106
2018	39,150	33,423	9,687	11,345	6,354	30,579	25,780	9,507	43,114	63,056
2019	40,256	31,846	9,862	11,601	5,978	29,993	25,873	9,151	42,379	65,254
2020	39,048	30,644	8,069	9,972	4,736	26,832	26,910	7,715	39,229	63,051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

(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31.9.18=100)
	LIBOR$ (3개월물)	미우대금리	T/Bill (3개월)	Dubai	Brent	
2017	1.69	4.50		63.77	66.73	2,371.84
2018	2.81	5.50		52.35	50.57	2,371.63
2019	1.91	4.75		65.38	67.77	2,486.07
2020	0.24	3.25		50.23	51.22	2,679.87
2018. 4	2.36	4.75	-	70.73	75.92	2,294.16
5	2.32	4.75	-	74.28	76.45	2,329.29
6	2.34	5.00	-	75.56	77.44	2,335.29
7	2.34	5.00	-	72.85	74.16	2,327.04
8	2.32	5.00	-	75.16	76.94	2,308.80
9	2.40	5.25	-	79.99	82.72	2,318.12
10	2.56	5.25	-	74.90	74.84	2,367.41
11	2.74	5.25	-	58.57	57.71	2,378.12
12	2.81	5.50	-	52.35	50.57	2,371.63
2019. 1	2.74	5.50	-	61.37	62.46	2,390.82
2	2.62	5.50	-	65.64	65.03	2,378.26
3	2.60	5.50	-	67.61	67.93	2,359.79
4	2.58	5.50	-	72.13	72.19	2,351.39
5	2.50	5.50	-	63.22	66.78	2,341.69
6	2.32	5.50	-	64.79	67.52	2,406.88
7	2.27	5.25	-	63.58	64.07	2,338.72
8	2.14	5.25	-	59.62	61.04	2,236.08
9	2.09	5.00	-	59.88	60.99	2,312.81
10	1.90	4.75	-	59.30	59.30	2,372.05
11	1.91	4.75	-	62.73	64.50	2,419.57
12	1.91	4.75	-	65.38	67.77	2,486.07
2020. 1	1.75	4.75	-	57.58	57.77	2,400.41
2	1.46	4.75	-	48.64	51.41	2,379.60
3	1.45	3.25	-	23.26	14.85	2,224.15
4	0.56	3.25	-	23.87	18.11	2,086.79
5	0.34	3.25	-	34.53	34.15	2,164.61
6	0.30	3.25	-	40.49	41.15	2,197.18
7	0.25	3.25	-	42.02	43.13	2,354.41
8	0.24	3.25	-	45.42	45.22	2,433.87
9	0.23	3.25	-	39.31	40.30	2,458.75
10	0.22	3.25	-	36.92	36.33	2,595.79
11	0.23	3.25	-	46.55	46.84	2,718.29
12	0.24	3.25	-	50.23	51.22	2,679.87

주 : 2015.1.2.일자로 석유공사에서 WTI(현물) 통계중지, 2017.10.19.일자로 국제금융센터에서 T/Bill 통계중지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김태연(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이종민(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태경(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남기인(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송지현(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류성열(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정혜경(기획재정부 코로나19방역대응팀)
권용준(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유진(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선익(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상민(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윤현곤(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이지혜(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박준영(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유이(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민주(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박칠군(기획재정부 코로나19방역대응팀)
박진숙(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안준영(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김지수(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이재헌(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심승미(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김문수(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주해인(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심민준(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한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변재만(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송재열(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박영우(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배민우(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허지수(기획재정부 디지털뉴딜팀)
한상윤(기획재정부 그린뉴딜팀)
이용우(기획재정부 휴먼뉴딜팀)
박효영(기획재정부 기획총괄팀)
류한솔(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태웅(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박정주(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심정민(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김 윤(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이보영(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이지은(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박꽃보라(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나연(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서지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강유신(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김형구(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김범석(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김민진(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이창형(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이수지(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권영민(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배현중(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박현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도희(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박준영(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권순배(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남원우(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강효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김민중(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종완(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영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이신영(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영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 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경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고대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변유호(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동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현수(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오미영(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이석원(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종락(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민형(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권순영(기획재정부 재정성과제도팀)
김소연(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유동석(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박재홍(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최현화(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강중호(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손주연(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조선형(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
김지수(기획재정부 국채과)
고영록(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이지혜(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강동근(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이채영(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류남욱(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이희한(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권오영(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유연정(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김교중(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홍가영(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김나윤(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신승헌(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이지우(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이현지(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오승상(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염철민(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정희진(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허성용(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정동현(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
홍승균(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송상목(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한정연(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서민아(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윤영탁(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박은결(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박중민(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김지영(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박준석(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이우리(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이현지(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정다운(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김연태(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 전화 : (044) 215-2736
- 경제백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 경제백서

2021년 12월 일 인쇄
2021년 12월 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기 획 재 정 부

인쇄 : 누보 (041)553-8811